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최종)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2차 년도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송미령

연구원: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서형주



## <요 약 문>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 분석에 기초한 정책 추진 발전모델 제시 필요

#### 1.2 연구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성과 평가지표 및 우수사례와 도출된 사업 성공요인 등을 기반으로, 2차 연도에서는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군 및 세부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인 발전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연구 목표와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연구의 목표와 내용 및 범위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범위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요구 조사 및 관련 제도 동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향 분석 및 정책 요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 제도 변화 동향 분석</li> <li>· 농산어촌 주민(또는 관련 전문가) 대상 정책 요구 조사</li> </ul> </li> </ul>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모델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 모형 정립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 개선점 도출</li>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군 및 세부 사업에 대한 개선점 도출</li> </ul> </li>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시범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절차, 내용 및 사업 대상에 관련한 내용 도출</li> </ul> </li> </ul>                        |
| 발전모델의 현장 적합성 검증 및 모델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모델 적용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개선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현장의 상황에서 제안 모델의 적합성 검증</li> <li>· 적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반영</li> </ul> </li> <li>○ 개선된 발전모델 정립 및 정책 추진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모델 제시 및 단계별 도입 방안</li> <li>· 발전모델에 기반한 정책 추진 방안</li> </ul> </li> </ul> |

## 2. 주요 연구 결과

### 2.1. 관련 제도 동향 분석 및 정책 요구 조사

#### 2.1.1. 해외 농촌정책 동향 분석(일본, 프랑스)

- 일본은 미래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대도시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람, 마을(지역)의 창생 및 이들 간의 선순환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함. 중장기 전망 하에서 5년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중앙정부는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방관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
-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계획과 레지옹계획을 연계시키는 수단으로 계획협약제도를 도입함. 현재는 6차 계획협약기간(2015-2020)으로 약 300억 유로의 재원이 투자되는 협약임. 국가 및 지역이 7가지 목표(이동성 증대, 고등교육과 혁신, 생태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및 미래 공장, 국토 개발, 고용 등) 하에서 재정 투입을 공동으로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지방 및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연계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 및 프랑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기 추진 계획을 사업과 예산을 연동시켜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2.1.2. 국내 농촌정책 요구 분석

-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응답함.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 중인 시·군에서는 ‘농촌 현장 주체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수준보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창조적 마을 만

들기, 전문가들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 집단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 역량강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지방 이관 요구가 높음. 또한 분권 확대 이후 농촌 지역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대두됨.
- 장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들은 농촌계획제도 정비 및 농촌 계획협약제도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

## 2.2. 사업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 2.2.1. 사업 운영 실태

- 지역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실태
  -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도입함.
  -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7개 낙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별도의 동부권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촌과소화대응 인력육성사업(농촌 소규모지역 활동 인력 육성사업)’을 수행함. 경상북도는 2018년부터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을 주민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임.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조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시·군 단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관련 부서(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농업 관련 부서, 도시 관련 부서, 건설 관련 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조직 이외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2.2. 정책 수요 파악

- 기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유연성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기존의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에서 농촌개발과 관광, 복지, 주민역량 강화 등이 상호 결합된 통합적, 영역적 측면의 정책 접근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구분               | 내용   |
|------------------|--|
| <b>정책<br/>수요</b> | 신활력 플러스사업 선정방식 및 유형 개선   |
|                  | 계약협약제도 이해 부족, 홍보 노력 필요   |
|                  |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마을사업의 중복배제 원칙의 유연한 적용                                  |
|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대상 기준 및 평수 등 조정 필요                                   |
|                  |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한 시·군의 역량 및 이해 증진 노력 필요                                |
|                  | 기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농촌개발-관광-복지-주민역량 등이 상호 결합된 통합적, 영역적 측면의 정책 접근 수요 증대 |

## 2.3. 사업 추진 특성 분석 및 과제 도출

### 2.3.1. 사업 추진 특성 분석

- 그간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은 5천 건 이상임.
- 시·군별 사업 추진량의 차이가 존재하며 사업 유형별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중심지 사업, 마을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시·군역량 강화 사업 등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중심지 사업의 경우는 경상도 일대에서, 마을 사업은 전라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충청과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됨.
  - 장기에 걸친 사업이기에 시·군들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계속 해오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시·군창의 사업의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만 수행되는 경향이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확장될 경우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 2.3.2. 과제 도출

-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역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현재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이하 RAISE와 혼용) 등을 활용한 지역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완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모델 정립 및 정책 추진방안 제시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정립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과 구조 개선

| 구분    | 내용   |
|-------|--|
| 전체    | 시·군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쉽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체계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공간 반영 | 공간 틀(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마을) 활용   |

|          | 사업군       | 내용  |
|----------|-----------|---|
| 공간<br>관련 | 중심지활성화    | 시·군의 수위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재정비 수행   |
|          | 기초생활거점    | 읍·면단위 행정구역을 넘어서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생활거점들을 시·군 스스로 발굴하고 수요에 맞추어 정비                          |
|          | 마을만들기     | 시·군에 일임하되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베이스라인 데이터의 자율적 입력부터 최종 성과로 나타난 데이터까지를 RAISE 시스템에 기록·관리 |
| 영역<br>관련 | 역량강화      | 시·군 내 사업 추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   |
|          | 농촌가치확대    | 농촌다움, 농촌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
|          | 지역현안대응    | 지역별 현안 대응 사업 수행   |
|          | SOC와 프로그램 | 생활밀착형 SOC 및 프로그램  |
|          | 신활력플러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부터 분리, 별도 계정 구성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개선

| 단계 | 기존                  | 단계                  | 개선                         |
|----|---------------------|---------------------|----------------------------|
| ①  |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①                   | 신규사업 설명                    |
| ②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1차)     | ②                   | 신규사업 신청서(양식) 및 추진조직 구성(의무) |
| ③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2차)     | ③                   | 기본계획 수립                    |
| ④  | 신규사업 반영             | ④                   | 신규사업 반영                    |
| ⑤  | 기본계획 수립             | ⑤                   | 시행계획 수립                    |
| ⑥  | 시행계획 수립             | ⑥                   | 사업시행                       |
| ⑦  | 사업시행                | ⑦                   | 준공 및 사후관리                  |
| ⑧  |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 ④번 단계에서 계획협약제도 적용 |                            |

## 2) 정책 추진 방안과 과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평가 시에 가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
- 시·군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 여부가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도록 의무화하며, 인건비의 경우 지자체 매칭 재원을 아예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원 조례 표준안을 작성·제공할 필요가 있음.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로 법률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의 개정이나 새로운 조항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획협약 시범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을 재분담하되,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군 전체적인 공간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계획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한편 시·군 내에 농촌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은 계획가와 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해 자원을 찾고 필요한 정비 사업을 목록화하는 활동이 요구됨.
  - 마을 만들기의 경우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필요한 H/W 및 S/W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함.

### 3)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개편

- RAISE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책지원 기능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제공되는 자료들은 가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며, 자료의 갱신 주기도 늦거나 갱신되지 않아 초기 RAISE를 구축한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임.
- RAISE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 초기 목적(지역개발사업 및 농산어촌활용정보 DB확대 구축/개발사업정보 개방·공유/사업의 효율적 관리/지자체 지역개발 기능 지원)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계획협약제도 도입 등을 통해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국가 전체의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RAISE 개편이 필수적임.

# Summary

## 1. Introduction

### 1.1. Research Background and Necessity

-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CRDP) and establishing measures to improve it.
-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model for improving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performance.

### 1.2. Research Objective and Content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CRDP and develop its improvement model.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exemplary cases, and project success factors developed in the first year study, the second year study intends to deduce the improvement opportunities for the project process, project groups, and project targets and establish the final improvement model.
- The research goal, contents, and scope are described below.

#### Research objective, contents, and scope

| Objective   |   |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
| Survey of policy requirements and analysis of relevant policy trend to establish a model for improving the CRD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end analysis and survey of policy requirements</li> <li>• Analysi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trend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li> <li>• Survey of municipality officials and professionals on policy requirements</li> </ul>  |
|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improving CRDP performanc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model</li> <li>• Deduction of improvement opportunities for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he CRDP</li> <li>• Deduction of improvement opportunities of project groups and project targets</li> <li>○ Pilot establishment of the improvement model</li> <li>• Deduction of the process, contents and targets of the project</li> </ul> |

(Continued)

| Objective   |   |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
| Verification of suitability of the improvement model and establishment of the final project mode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nalysis of project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deduction of improvement opportuniti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mprovement model</li><li>• Verification of suit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under the current condition in the agricultural field</li><li>• Reflection of improvement opportunity deduced during the application</li><br/><li>○ Establishment of finally improved project model and present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measures</li><li>• Presentation of the final model and step-by-step introduction measures</li><li>• Present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measures based on the final project model</li></ul> |

## 2. Research Outcome

### 2.1. Analysis of Relevant Institutional Trend and Survey of Policy Requirements

#### 2.1.1. Analysis of Rural Policy Trend in Foreign Countries (Japan and France)

- Japan is pursuing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to create jobs, increase the rural population, and revitalize villages (the provinces) and establish their virtuous circle to cope with the declining population, low birthrate and aging,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the destruction of the provincial regions. It has selected 5-year short-term goals based on the mid- to long-term forecast.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the policy package while the municipalities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rovincial Comprehensive Strategy.”
  
- France has introduced the State-region plan contract system as the measure to link the national plan and regional plan while implementing decentralization policy. The country is currently in the 6th plan contract period (2015-2020) with the budget of about 30 billion euro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agreed to jointly fund and implement 7 goals (mobility increase, innovation of advanced education,

transition to ecological energy, digitalization, innovation and future factories, land development, and employment).

- Developed countries link the projects in a wide range of areas to develop provincial and rural regions and provide the system for the regions to plan and implement them autonomously. Japan and France have achieved the intended results by linking the short-term implementation plan with the budget based on the mid- to long-term plan.

### 2.1.2. Analysis of Rural Policy Requirements in Korea

- The municipal officials point out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rojects as the most notable chang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DP. The municipalities that have form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or utilized the experts in regional development answered “Increasing actors in the rural field” relatively more.
- As for a project of the CRDP which needs to be expanded, the municipality officials answered “Building creative villages,” while the experts answered “The Rural Revitalization Plus Project.”
- The municipality officials were more positive about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funding than the experts and demanded the transfer of the projects like Building creative villages,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municipalities, and Upgrading the infrastructure for basic living. The challenge is to train local actors to implement the development of rural regions effectively after the decentralization.
- The experts demanded the upgrading of the rural planning schem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region plan contract scheme first to cope with the future condition changes.

## 2.2. Examination of Project Execution and Policy Requirements

### 2.2.1.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 Creative project implementation in regions
  - The block grant system was introduced to expand local autonomy and creativity.
  - Chungcheongbuk-do is implementing the autonomous project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seven underdeveloped municipalities. Jeollabuk-do has set up a special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astern region to support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regions and is executing the “Human resources training for small rural regions” project. Gyeongsangbuk-do has been executing the “Village with Seeds of Happiness” project since 2018.
- Organizations to implement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 Although the CRDP is the leading project executed by municipalities for development of rural regions, it is generally managed by the agriculture department, urban management department, or construction management department instead of the rural village management department. Moreover, the operation and function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in addition to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ave become import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 2.2.2. Examination of Policy Requirements

-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project execution and understanding of new projects.
- The priority has changed from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o the integrated policy approaches in terms of areas that link rural development, tourism, welfare, and resident capacity strengthening.



| Category            | Description  |
|---------------------|--|
| Policy Requirements | Improvement of selection method and type of Rural Revitalization Plus Projects   |
|                     |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plan contract scheme and need for better PR  |
|                     | Promotion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flexible application of prevention of duplicated village projects  |
|                     | Need to adjust the targets and the reference area of the rural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
|                     | Need to improve the municipalities' capability and understanding of Rurality restoration projects  |
|                     | Increased requirement for the integrated policy approaches in terms of areas that link rural development, tourism, welfare, and resident capacity strengthening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 2.3. Analysis of Project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Future Challenges

### 2.3.1. Analysis of Project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 More than 5,000 projects related to the CRDP have been executed over the years.
- There are wide gaps in the number of projects among municipalities, and the gaps are much wider for some project types.
  - There are large regional disparities of center projects, village projects, basic living infrastructure projects, and municipality capacity building projects. More urban projects were implemented in the Gyeongsang region, more village projects in the Jeolla region, and mor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The municipalities seem to have implemented the familiar projects, rather than new projects since they are the long-term projects.
  - As the municipal creative projects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regions, it is doubtful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creative ideas can expand evenly to all municipalities.

### 2.3.2. Future Challenges

- For each region to revitalize itself by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autonomously,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projects and carry out necessary regional projects based on the experiences.
- It is urgent to build and supplement the regional development monitoring system using RAISE.

## 3. Establishment of the CRDP Project Model and Present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Measures

### 1) Establishment of the improvement model for the CRDP

- Improvement of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the CRDP

| Category           | Description  |
|--------------------|--|
| Total              | Providing flexibility to assure that the municipalities can autonomously implement the projects that sui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ing th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 Spatial reflection | Use of spatial frame (center, basic living base, and village)  |

|               | Project Group                         | Description  |
|---------------|---------------------------------------|--|
| Space related | Town Center Development Project       | Continuously improve centers of cities/counties  |
|               |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 | Develop various living bases within the life zone beyond the administrative zones and improve the bases to suit residents' demand                                |
|               |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Entrust to municipalities but autonomously record the baseline data and the final performance data in the RAISE system to ha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 Area related  | Capability enhancement                | Establish and operate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o create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tform within the municipality                                |
|               | Rural value expansion                 | Projects for increasing rurality and rural values  |
|               | Response to regional issues           | Projects for responding to regional issues   |
|               | SOC & Program                         | Daily-life oriented SOC & Program  |
|               | Revitalization Plus                   | Separate the project from the CRDP and set up separate accounts  |

○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the CRDP

| Stages | Existing   |   | Stages                                   | Improvement  |
|--------|--|---|--|--|
| ①      | Submit the application for feasibility review of a new project |   | ①  | Explain a new project  |
| ②      | (1st) Feasibility review of the new project                    |   | ②  | Submit the application (form) for the new project and establish an implementation organization (mandatory) |
| ③      | (2nd) Feasibility review of the new project                    | → | ③  | Set up a basic plan  |
| ④      | Reflect the new project  |   | ④  | Reflect the new project  |
| ⑤      | Set up a basic plan  |   | ⑤  | Establish an execution plan  |
| ⑥      | Establish an execution plan                                    |   | ⑥  | Project execution  |
| ⑦      | Project execution  |   | ⑦  | Completion and follow-up   |
| ⑧      | Completion inspection and settlement                           |   | * Plan contract system applied in Step ④ |  |

## 2) Policy implementation measures and tasks

- It is needed to publish the policy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RDP to highlight the need and importance of the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dd extra credit for the organization in project feasibility assessment.
- It is necessary for the municipalities to form and operate integrat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n the short term, the formation of an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the determining factor for feasibility review of the CRDP, and the municipalities' matching funding can be used as the labor cos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plan for integrated policy implementation and apply the pilot projects of State-region plan contracts.
- It is necessary to reallocat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ovinces, and to ensure the autonomy of project planning and execution of municipalities. Also, it is required to distinguish the areas to be developed and areas to be preserved

based on the spatial structural analysi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lanners.

- The Town Center Development Project and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 in the municipalities require finding the resources through the joint participation of planners and residents and listing the needed regeneration projects.
-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both hardware and software project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 **3) Upgrading of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to enhance the performance management**

- RAISE is judged to be vulnerable in the provision of data and policy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DP. The RAISE system has not achieved its initial purpose because the presented data are poor in usability and availability, and the data upgrading is delayed or failed.
-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RAIS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conform to its initial purpose (expansion of the database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formation on agricultural, forest, and fishery villages; disclosure 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development projects; efficient management of projects;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 Upgrading of the RAISE system is essential to manage the outcome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efficiently through the plan contract scheme in prepara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The system should be able to monitor whether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conform to the vision and purpose of the national rural policy, whether the budget is properly executed, and whether the outcome is adequate.

## < 목 차 >

|  |    |
|--|----|
| <b>제1장 서론</b> .....  | 1  |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3  |
| 제2절 1차 연도 주요 연구내용 .....                                    | 6  |
| 제3절 2차 연도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체계 .....                             | 14 |
| <br>   |    |
| <b>제2장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b> .....                           | 19 |
| 제1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                                    | 21 |
| 제2절 생활인프라 축적과 정주체계의 변화 .....                               | 23 |
| 제3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대두와 농산어촌의 가치 변화 .....                      | 25 |
| 제4절 지방분권 강화와 계획의 중요성 증대 .....                              | 26 |
| <br>   |    |
| <b>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b> .....                         | 29 |
| 제1절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일본 지방창생정책 .....                            | 31 |
| 제2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프랑스 계획협약 제도 .....                          | 47 |
| <br>   |    |
| <b>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br/>    정책 요구와 시사점</b> ..... | 61 |
| 제1절 개요 .....   | 63 |
|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   | 65 |
| 제3절 시사점 .....  | 93 |

|   |            |
|---|------------|
| <b>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을 위한</b>             |            |
| <b>FGI 주요 결과</b> .....                        | <b>97</b>  |
| 제1절 개요 .....                                  | 99         |
|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             | 101        |
|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의 시사점 .....             | 123        |
| <br>  |            |
| <b>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의 시범 적용을 위한</b>           |            |
| <b>특성 분석과 과제</b> .....                        | <b>129</b> |
|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                           | 131        |
|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분포(2010~2018년) .....         | 132        |
|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상 특징(2010년 이전 사업 포함) ..... | 135        |
| 제4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의 과제 .....              | 139        |
| <br>  |            |
| <b>제7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및 정책</b>               |            |
| <b>추진 방안</b> .....                            | <b>141</b> |
|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                    | 143        |
| 제2절 발전모델의 적용 사례 및 성과 평가 .....                 | 147        |
| 제3절 정책 추진 방안과 과제 .....                        | 152        |
| 제4절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개편 .....             | 156        |
| <br>  |            |
| <b>□ 참고문헌</b> .....                           | <b>163</b> |
| <br>  |            |
| <b>□ 부록</b> .....                             | <b>167</b> |
| <부록 1>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지 .....                 | 169        |
|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 .....                   | 196        |
| <부록 3> 시·도별 및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 현황 .....  | 197        |

##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1-1)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부문과 세부내용 | 10 |
| (표 1-2)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 11 |
| (표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및 보완방안             | 13 |
| (표 1-4) 2차 연도 연구 목표 및 내용                 | 14 |

### 제2장

|                      |    |
|----------------------|----|
| (표 2-1) 인구소멸위험지수의 변화 | 23 |
| (표 2-2) 2018 군특회계 구성 | 26 |

### 제3장

|                                   |    |
|-----------------------------------|----|
| (표 3-1)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 35 |
| (표 3-2) RESAS에서 제공하는 지도 정보        | 40 |
| (표 3-3) 2016년도 일본정부 지방창생관련 예산     | 43 |
| (표 3-4) 국가-지역 계약협약의 유형            | 52 |

### 제4장

|                                     |    |
|-------------------------------------|----|
| (표 4-1) 설문 응답자 특성                   | 64 |
| (표 4-2) 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         | 65 |
| (표 4-3)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지역 비교)     | 66 |
| (표 4-4)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업무 영역별 비교) | 67 |
| (표 4-5)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역할 인식           | 68 |
| (표 4-6) 시·군별 농촌 지역개발 총괄(전담)조직 유형    | 69 |
| (표 4-7) 시·군 지역개발사업 결정 시 영향력 있는 주체   | 72 |
| (표 4-8)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 방식      | 73 |
| (표 4-9) 지역개발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 의사결정 방식    | 74 |
| (표 4-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후 지역의 변화     | 75 |
| (표 4-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후 변화(전문가 응답) | 75 |

|   |    |
|---|----|
| (표 4-12) 지역개발 추진기반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효과 .....     | 76 |
| (표 4-13)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사항에 대한 평가 .....   | 77 |
| (표 4-14)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업무 영역별 비교) .....  | 77 |
| (표 4-15) 농촌 중심지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       | 78 |
| (표 4-16)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          | 79 |
| (표 4-17) 농촌 마을개발사업 방향(업무 영역별 비교) .....      | 79 |
| (표 4-18) 향후 확대 추진이 필요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 ..... | 80 |
| (표 4-19) 지역개발 추진기반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요 .....     | 81 |
| (표 4-20)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요(업무 영역별 비교) .....  | 81 |
| (표 4-21) 재정 분권 강화 기조에 대한 의견 비교 .....        | 82 |
| (표 4-22) 지방 분권에 대비한 지역 주체별 역량 수준값 .....     | 84 |
| (표 4-23) 농촌 공동화 심화 상황에서 향후 공간정책 방향 .....    | 87 |
| (표 4-24) 시·군 여건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현황 .....   | 88 |
| (표 4-25) 향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확대 수요 .....        | 90 |
| (표 4-26) 농촌 계획협약 제도 인지도 및 참여 의향 .....       | 92 |
| (표 4-27) 농촌 계획협약 제도 쟁점별 전문가 의견 .....        | 93 |

## 제5장

|  |     |
|--|-----|
| (표 5-1) FGI 실시 개요 .....                    | 100 |
| (표 5-2)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현황 .....           | 102 |
| (표 5-3)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변화 .....     | 104 |
| (표 5-4) 전라북도의 포괄보조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 .. | 109 |
| (표 5-5)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과 주요 내용 ..... | 116 |
| (표 5-6) 향후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 | 117 |

## 제6장

|  |     |
|--|-----|
| (표 6-1) 2010년 이후 시·도-사업유형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수 ... | 133 |
|--|-----|

## 제7장

|   |     |
|---|-----|
| (표 7-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자리 및 사회적 자본 창출 성과 .. | 149 |
|---|-----|



## <그림 차례>

### 제1장

|                                 |    |
|---------------------------------|----|
| <그림 1-1> 성과 유형별 시·군 수 .....     | 7  |
| <그림 1-2> 성과 유형별 분포 .....        | 7  |
| <그림 1-3> 중심지 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 | 8  |
| <그림 1-4> 권역 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  | 8  |
| <그림 1-5> 2차 연도 연구의 추진체계 .....   | 18 |

### 제2장

|  |    |
|--|----|
| <그림 2-1> 과소 마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 | 22 |
| <그림 2-2> 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    | 24 |
| <그림 2-3> 시·군별 순전입 인구 추이 .....            | 25 |
| <그림 2-4> 농산어촌 기능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       | 25 |

### 제3장

|   |    |
|---|----|
| <그림 3-1> 일본의 장래인구 전망(1960~2160년) .....    | 31 |
| <그림 3-2> 일본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의 흐름 .....         | 33 |
| <그림 3-3> 콤팩트와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층적 국토공간형성전략 ..   | 39 |
| <그림 3-4> 2015-2020 국가-지역 계획협약 예산 분포 ..... | 49 |
| <그림 3-5> 프랑스의 계획협약 체계 .....               | 51 |
| <그림 3-6> 프랑스의 중앙정부-레지옹 간의 계획협약 사례 .....   | 53 |
| <그림 3-7>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의 6가지 주제 .....  | 55 |

### 제4장

|   |    |
|---|----|
| <그림 4-1>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상황 .....          | 70 |
| <그림 4-2> 시·군의 지역개발 전문직 활용 현황 .....        | 71 |
| <그림 4-3>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 .. | 72 |
| <그림 4-4> 재정 분권 강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        | 83 |
| <그림 4-5> 지방에 우선 이양할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 .....   | 85 |

|  |    |
|--|----|
| <그림 4-6> 중앙정부 역할이 계속 요구되는 사업 .....         | 86 |
| <그림 4-7>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여부 및 향후 의향 .....  | 88 |
| <그림 4-8>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 89 |
| <그림 4-9> 재정 분권 강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 | 91 |

## 제5장

|   |     |
|---|-----|
| <그림 5-1>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활용 사례: 증평군립도서관 .....                     | 105 |
| <그림 5-2> 울진군 매화면 매화마을의 행복씨앗마을 만화거리 .....                      | 107 |
| <그림 5-3>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 113 |
| <그림 5-4> 농산어촌 활력 증대와 자립적 성장을 위해<br>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 유형 ..... | 118 |

## 제6장

|   |     |
|---|-----|
| <그림 6-1> 2010년 이후 시·도-연차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누적 건수 .. | 133 |
| <그림 6-2>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포 .....       | 134 |
| <그림 6-3> 시·군별 중심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 136 |
| <그림 6-4> 시·군별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 137 |
| <그림 6-5> 시·군별 시·군창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     | 138 |

## 제7장

|  |     |
|--|-----|
| <그림 7-1> 3-6-5 생활권의 개념도 .....          | 144 |
| <그림 7-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        | 145 |
| <그림 7-3> 거창군의 APAN 구축 사례 .....         | 150 |
| <그림 7-4> 시·군의 통합적 계획(안) 예시 .....       | 155 |
| <그림 7-5> RAISE 홈페이지 화면 .....           | 156 |
| <그림 7-6> RAISE 사업 검색화면 .....           | 157 |
| <그림 7-7> RAISE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간정보 ..... | 159 |

제 **1** 장

서 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 배경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

- 2010년 이후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꾸준히 확장되었다고 평가됨.
  - 농산어촌 주민의 고령화와 과소화, 도농 간 소득격차가 수십 년 동안 심각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듯함.
  - 그러나 최근 들어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와 농림어업 분야 고용의 증가는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의 필요를 다시금 증대시키는 요인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핵심적인 농촌지역개발정책으로서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가 있으나, 그간 성과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점검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음.
  - 농산어촌의 인구, 정치, 공간구조, 사회경제적 측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합한 틀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 과정, 결과,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빈번하게 등장함.
  -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하여 애초의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김영주 외, 2014; 박수진 외, 2016; 심재현 외, 2013; 양주필 외, 2017; 원광희, 2016).

- 사업 추진 대상지 주민의 역량이 성과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주민 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홍철, 2013: 51-52; 심재현 외, 2017).
-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가 미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처 및 부서간 ‘칸막이’ 문화로 인해 계획 수립이나 사업 실행의 통합적 접근이 제약받거나(송미령 외, 2013), 추진체계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임(구자인, 2018; 김영주 외, 2014: 2; 정광석, 2016).

○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업 완료지구 현장을 점검하여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그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임.

- 주민 대표를 면접 조사하여 주민역량, 주민참여도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 소득법인 구성·운영 및 환원 여부,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현황, 1억 원 이상 지원된 건축물의 활용 여부,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음.
- 해당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이 미흡하며, 사업의 실제 성과를 분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틀이 필요함. 1차 연도에는 평가틀 구축에 관련한 연구를 주로 수행함.<sup>1)</sup>

## 나. 2차 연도에는 종합적인 성과 분석에 기초한 발전모델과 정책 추진 방안 제시

- 정부 재정지출의 최근 동향으로 미루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되는 막대한 공공재원 투입의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사업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균특회계의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음.
- 사업성과 분석은 사업 실적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1) 1년차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 장에 요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경우는 지자체 이관이 검토될 가능성도 높음.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내용에 따르면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에 3.5조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물론 아직까지 이양의 방식과 내용은 불투명하며, 기능 이양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사업 실행의 경험을 토대로 개선점과 교훈을 발견해내고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에 반영하려면, 사업이 추진된 대상지에서 이루어진 계획 및 실행 과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함.
  -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발전모델의 도출이 요구됨.
  -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확산과 타 지역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발전모델의 적용에 있어 가능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 사업 대상지별로 독특한 환경이 존재함으로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요구됨.

##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제안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구성과 내용을 발전모델의 일종으로 두고 이를 모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이 농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체계 상의 보완 사항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2차 연도의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도출함.

## 제2절 1차 연도 주요 연구내용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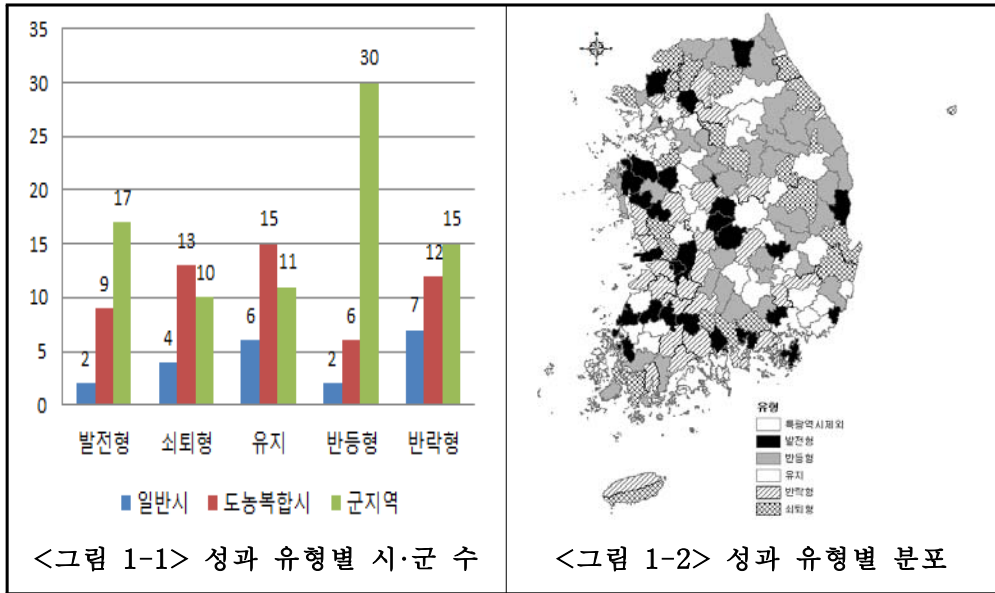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 성공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개선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시계열 분석, EU 평가지표체계에 따른 성과 분석, 우수사례 핵심성공요인 분석, 전문가 및 시·군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2. 주요 결과

####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함. 사업 유형별로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이하 “중심지”)와 창조적마을만들기(이하 “마을”) 사업 투자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초생활인프라(이하 “인프라”) 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세부 기능별 내역사업으로는 다목적회관, 연결도로, 가로경관정비 등에 국비가 가장 많이 투입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의 2009년, 2012년, 2016년의 지역발전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증가하거나 반등한 시·군은 120개 중 44.2%에 달하고 유지한 시·군은 20.8%, 쇠퇴한 시·군은 13.3%에 불과함.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송미령 외, 2017 재인용).

- 사업 대상지역 시계열 분석에서는 2010~2015년 사이에 사업이 시작된 행정리(마을)의 58.6%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3.2%만이 가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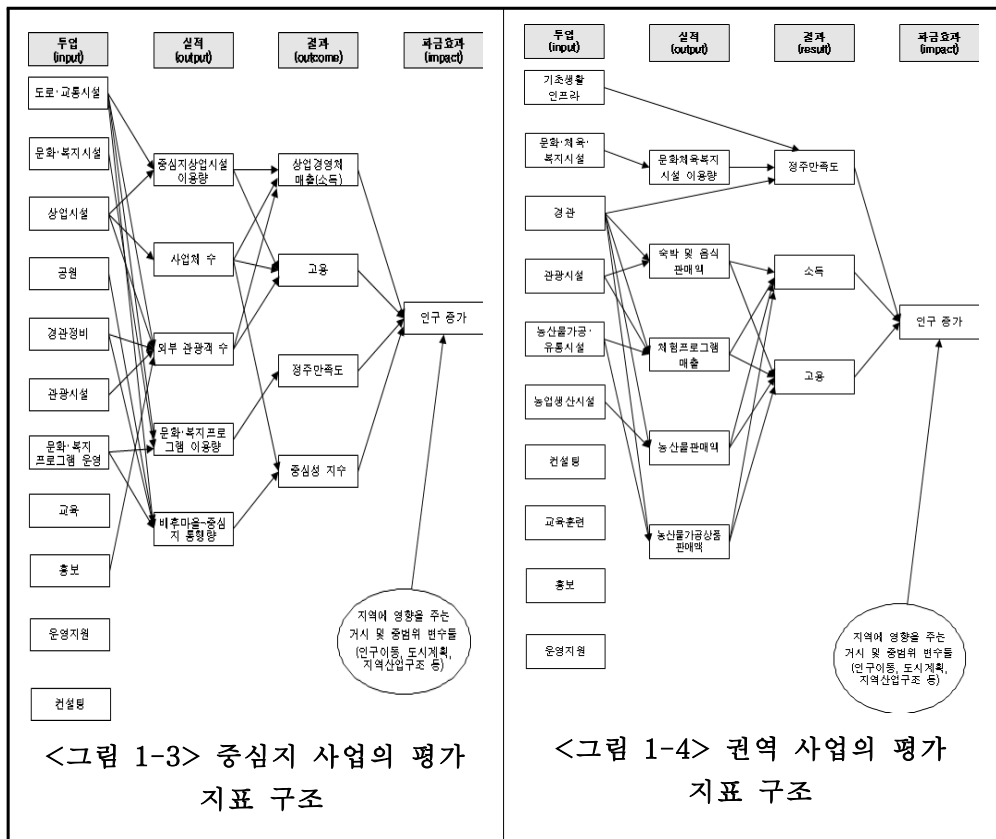
####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 EU의 정책사업 성과지표체계 ‘투입-실적-결과-파급효과’에 따라 중심지와 권역 사업<sup>2)</sup> 사례 지역의 성과를 평가함. 투입지표를 보면, 총 사업비 대비 하드웨어 투자 비중이 중심지 84%, 마을 77%로 높았음. 다만, 2015년 사업이 재편된 후부터는, 두 사업의 경상비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심지 사업의 성과는 해당 읍·면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편성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됨.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경우,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 조직을 구성하고

2) 중심지 사업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포함됨. 권역 사업은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포함됨.

역량강화 활동을 동반했을 때 주민 만족도가 높았음.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내용을 ‘관광개발’의 관점에서 재편·보완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었음.

- 권역 사업의 주요 결과 지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출액, 방문객 수, 일자리 등을, 비경제적 측면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만족도, 문화·복지·체육 시설 이용량 등을 활용함. 문화·복지·체육 관련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시설 이용량이 측정되지 않고 있었음. 기초생활인프라의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경제적 성과는 마을에 따라 성과 차이가 컸으며, 관련 자료는 마을에서 축적해두고 있었음.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상거서).

##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 농촌지역개발 전문가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사업의 제도와 내용상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함.
- 조사 결과, 사업을 통해 인프라 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지역특화 발전 등은 우수한 것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인구 유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유형별로는 중심지 사업은 기초생활수준 향상에, 마을 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농촌지역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업 유형으로는 중심지 사업을 꼽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편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 부재와 사업간 연계 부족,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신청 준비단계의 난이도와 비용, 사업 추진과정의 복잡성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시·군내 또는 부처 내·외에서 사업간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의 부재를 가장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 역량 부족,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갈등, 사업 준공 후 지원중단으로 인한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조사됨.
-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중심지, 마을 등 사업 유형은 구분하되 내역 사업 구분은 폐지하자는 의견과 포괄보조금 취지에 맞게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 운영하자는 의견 비중이 높았음.

## 라.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요인 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의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성공요인이 인구·사회, 경제, 문화·복지, 공간개발 등 주요 성과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방법을 살펴봄.
  - 성공요인을 ‘사업추진 및 지원조직’ 부문, ‘사업의 목표와 내용’ 부문,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부문,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부문, ‘사업추진 네트워크’ 부문, ‘외부환경’ 부문, ‘기타 성공요인’ 부문으로 구분
  - 주요 성과를 ‘인구·사회적 성과’ 부문, ‘경제적 성과’ 부문,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부문, ‘공간개발 성과’ 부문, ‘기타 사업추진 성과’ 부문으로 구성하여 조사

(표 1-1)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부문과 세부내용

| 주요 성과 부문      | 세부 성과 예시   |
|---------------|--|
| 인구·사회적 성과     | 사업 추진 지역의 인구 증가, 귀농·귀촌인 증가, 문화·예술인 증가, 전문가 유치,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의 형성, 지역(마을) 리더 육성 등 |
| 경제적 성과        | 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새로운 사업 창출, 일자리 창출, 소득시설 확충 등                               |
| 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 새로운 주민 서비스의 창출, 기존 주민서비스의 활성화, 복지 및 서비스 시설 확충 등                                |
| 공간개발 성과       | 지역(마을)의 인프라 확충, 경관 개선, 환경 정비 등   |
| 기타 사업추진 성과    | 상기 예시 외 사업추진 성과  |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상세서).

- 전문가,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총 6가지의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함.
  - 성공 요인 중에서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이 네 가지 주요 성과에 가장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등 경제적 성과에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의 경우,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마을 사업의 PM을 맡기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기획·실시하여 성과를 내고 있었음.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은 전문가나 예술가를 영입해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증대하거나, 공동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집단별로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인구·사회적 성과에 기여하고 있었음.
-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은 체험 및 소득사업 추진 시 지역 농업 생산자들과 후방연계를 강화하고, 역외 전문 집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사업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음.

(표 1-2)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 성공요인 \ 주요 성과 분야   | 인구 사회 | 경제 | 문화 복지 | 공간 개발 |
|-------------------|-------|----|-------|-------|
|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  | ◎     | ○  | △     | ○     |
|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     | ○     | ◎  | ◎     | ○     |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 | ◎     | ○  | ○     | △     |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요인   | △     | ◎  | ○     | ○     |
| 사업추진 네트워크 요인      | △     | ◎  | ○     | ○     |
| 외부환경 요인           | △     | ○  | ○     | △     |

주: 성공요인이 성과창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 미약한 영향을 주고 있거나 영향이 없는 경우는 △으로 표시.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상게서).

### 3. 사업 개선 방향과 과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목표를 명확히 재설정해야 함. 특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되, 사업의 지향

점은 전국의 등가치적 생활여건을 확립하고 농촌 가치의 복원과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함.

-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재편과 보완이 필요함(표 1-3).
-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우선, 중간 지원조직 육성을 위해 시·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지역의 역량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지역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넷째,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RAISE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업 대상지의 주요 데이터를 사업 전부터 완료시점까지 축적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지막으로 R&D 기능과 투자를 강화하여 사업의 베이스라인 구축이나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충해야 함. 또한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 기획하여 실험해보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상 오류를 줄이도록 해야 함.

(표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및 보완방안

|    | 구분         | 기존('15~'18)  | 개편('19~)   |
|----|------------|--|--|
| 재편 | 중심지 활성화    | ▷ 중심지 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 (일반/선도/통합지구) 추진<br>▪ 유형별 사업비 차등 (60억 원, 80억 원, 120억 원)                  | ▷ 중심지 사업 유형 일원화<br>중심성 강한 거점 육성<br>▪ 농촌지역 최상위 거점 기능 (고차 서비스) 강화<br>▪ 배후지역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더욱 강화                    |
|    | 작은 거점 육성   | ▷ 일반 중심지는 역할 미흡, 읍·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중심지 기능 필요  | ▷ 기초생활 거점 육성<br>▪ 고차 중심지 기능 보완하는 동시에 이용 빈도 높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 집약<br>▪ 단계별 사업 추진 방식<br>* 1단계: 거점 형성 → 2단계(선택): 배후 연계 |
|    | 마을 단위 사업   | ▷ 3개 유형 중규모(5억 원) 사업 중 택<br>▷ 중규모 사업 완료 후 종합개발 사업(10억 원)<br>▷ 복수 마을 공동사업으로 권역종합개발사업(40억 원) | ▷ 사업유형 통합 가이드라인 간소화<br>▪ 내용 제약 없이 마을의 역량 단계에 따라 계획을 수립, 추진 가능  |
|    | 취약 마을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內 개별 주택 정비·지원 사업 부재<br>* 폐가 철거만 가능  | ▷ 지역 자원으로 취약마을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br>▪ 취약마을은 지역 자율 선정   |
| 보완 | 포괄적 지역 활성화 | 하나의 시·군 또는 복수의 시·군이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지역활성화 사업 도입                          |  |
|    | 농촌 가치 복원   | 농업 유산 보전, 전통적 농촌 경관 복원 등 농촌 가치 복원 관련 사업 확대   |  |

### 제3절 2차 연도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체계

#### 1. 연구 목표

(표 1-4) 2차 연도 연구 목표 및 내용

| 구 분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범위  |
|--------------|---|--|
| 2차 연도 (2018)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요구 조사 및 관련 제도 동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향 분석 및 정책 요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 제도 변화 동향 분석</li> <li>· 농산어촌 주민(또는 관련 전문가) 대상 정책 요구 조사</li> </ul> </li> </ul>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모델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모델 정립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 개선점 도출</li>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군 및 사업 대상에 대한 개선점 도출</li> </ul> </li>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시범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절차, 내용 및 사업 대상에 관련한 내용 도출</li> </ul> </li> </ul>                      |
|              | 발전모델의 현장 적합성 검증 및 모델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모델 적용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개선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현장의 상황에서 제안 모델의 적합성 검증</li> <li>· 적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반영</li> </ul> </li> <li>○ 개선된 발전모델 정립 및 정책 추진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모델 및 단계별 도입 방안</li> <li>· 발전모델에 기반한 정책 추진 방안</li> </ul> </li> </ul> |



## 2. 주요 연구내용

- 1차 연도 연구 결과 평가를 통한 발전모델 정립 방향 설정
-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프로세스의 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 개선점 도출
    - \* 현재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절차(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1차)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2차) - 신규 사업 반영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상의 개선점
    - \* 위의 절차 외에 전후방에 필요한 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 사후 점검 방식에 대한 개선점 추가 제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군 및 사업에 대한 개선점 도출
  -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군의 개선점 모색 및 개선 방안 도출
    - \* 읍·면 중심지, 마을로 한정된 사업에 대한 개선점 모색
    - \*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의 사업과의 비교와 시사점 도출

### 가.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동향 분석 및 정책 요구 조사

-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 제도 변화 동향 분석
  - 인구·사회의 변천에 대응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점 도출
  -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모델의 개선점 도출
- 농산어촌 주민(또는 관련 전문가) 대상 정책 요구 조사
  - 농산어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설문조사 수행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실행-평가에 이르는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정책 개선 요구 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사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

##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개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 절차, 내용 및 사업 대상에 관련한 개선안을 발전모델로서 제안
  - 평가 모형 및 사업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과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선점을 적용하여 개선된 사업안으로서 발전모델 개발
  - 외국의 유사 농촌개발사업 추진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여 반영

## 다. 발전모델의 적용 및 개선

- 잠정적인 사례지역에 발전모델을 적용하여 개선점 도출
  - 제안하는 발전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심층 검증
    - \* 적용은 RAISE를 통한 전반적인 검증과 특정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으로 구분

## 라. 발전모델의 정립과 정책 추진 방안 도출

- 현장 실증 연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최종 발전모델 정립
  - 사업 대상, 추진절차, 사업 내용별 최종 발전모델을 제시
- 발전모델의 도입·운용 방안 제시
  -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된 모델의 단계별 도입·운용 방안 제시
  - 발전모델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도출

### 3. 연구방법

#### 가.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및 분석 방법

- RAISE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산어촌 활용정보 관련 DB를 구축하고,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자체의 지역개발 기획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RAISE 시스템의 자료를 협조 받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을 도식화하고 그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태를 파악함.

####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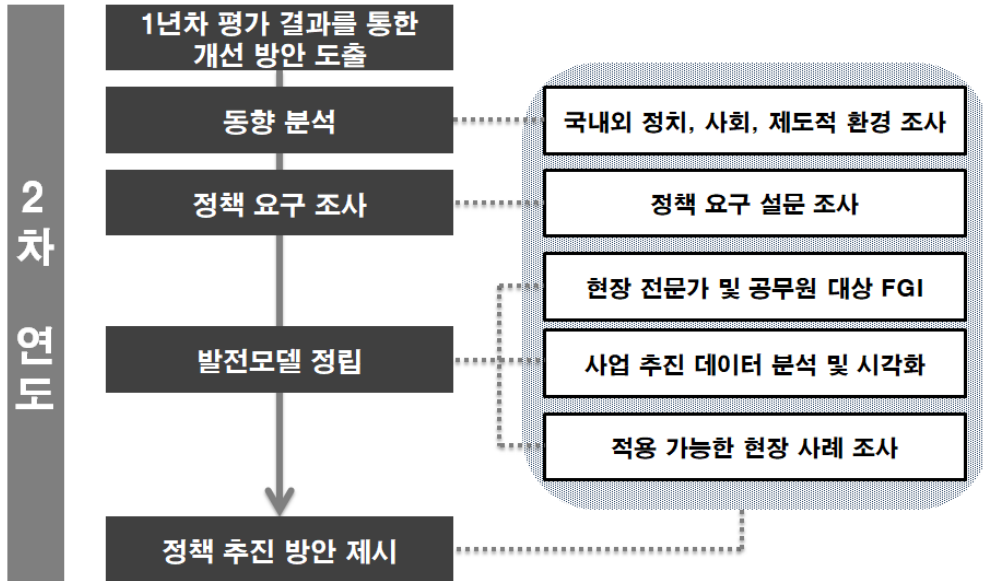
- 설문조사 및 FGI
  - RAISE 및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
  -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민간 컨설팅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
  - 3개 도의 전문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FGI

####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제안 및 개선사항 도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인 ‘사업성 검토(신규, 1차, 2차)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 및 정산 사후관리’ 등별로 개선점 도출
  - 사업추진과정에 불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공무원 인터뷰 등을 사용

#### 4. 연구 추진체계

○ 2차 연도 연구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상함.



<그림 1-5> 2차 연도 연구의 추진체계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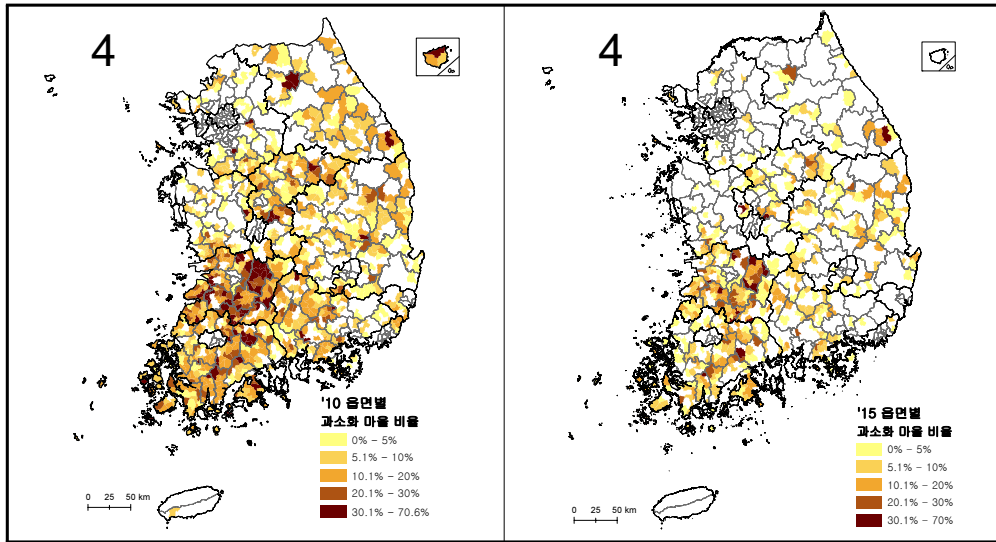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제2장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제1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07만 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으로 2030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중 농산어촌 거주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18.4%를 차지함.
  
- 농산어촌의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귀농·귀촌, 외국인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임.
  - 이촌향도로 인해 농산어촌의 인구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귀농·귀촌 증대로 2015년 기준 농산어촌 인구는 939만 명으로 총인구의 18.4%를 차지함.
  - ‘읍’ 인구는 1995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면’ 인구는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됨.
  
- 2010년까지는 가구 수 20호 미만의 마을이 증가했으나 최근 농산어촌 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사이 마을의 규모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서는 20호 미만의 과소 마을이 전체의 3.5%인 1,270개로 나타나, 2010년 대비 1,800여 개 감소함.
  - 2015년 과소 마을의 분포 면적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



주: 과소 지역은 읍·면으로 표시된 것이며, 읍·면에 속한 행정리 수 대비 20호 미만 행정리 수를 구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심재현 외(2017b).

#### <그림 2-1> 과소 마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소년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에는 농산어촌 인구의 18.6%가 유소년인구였지만 2015년에는 그 비중이 12.5%로 감소함.
  -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농산어촌 인구의 21.4%를 차지함. 농산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 대부분의 읍·면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읍·면(1,404개 읍·면 중 1,182개, 84.2%)에 해당함.
  
- 인구소멸위험지수로 본 농산어촌의 과소화와 고령화 추세를 보면 미래에 농산어촌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가임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1.0 미만은 쇠퇴 시작 지역, 0.5 미만은 소멸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됨(마스다 히로야, 2014).



- \* 시계열로 인구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를 보면, 인구소멸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1) 인구소멸위험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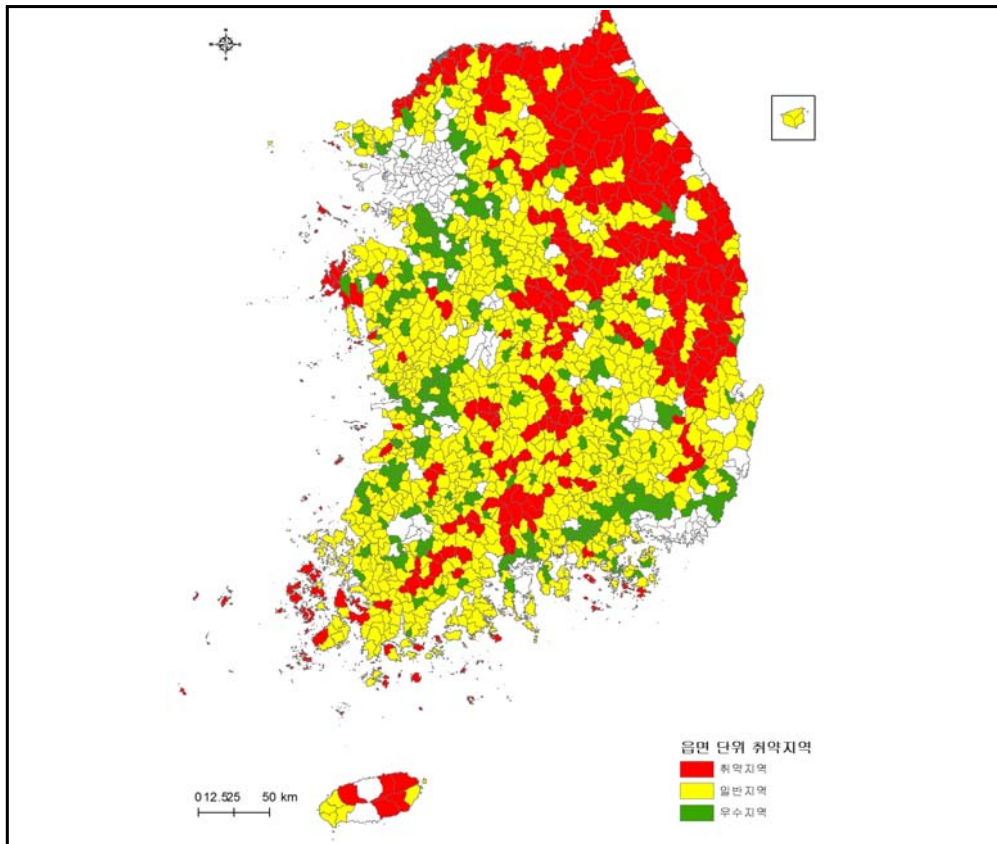
| 구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
| 동  | 3.31  | 2.33  | 1.68  | 1.23  |
| 읍  | 1.57  | 0.77  | 0.87  | 0.71  |
| 면  | 0.58  | 0.30  | 0.25  | 0.25  |

주: 인구소멸위험지수의 행정구역별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제2절 생활인프라 축적과 정주체계의 변화

- 농산어촌의 생활인프라 여건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정주환경은 더욱 낙후될 것으로 예상됨.
  - 도로 포장률, 상하수도 보급률 같은 기초 인프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80% 미만으로 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한 상황임.
  -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도시에 비해 많지만 도시에 비해 면적이 넓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초등학교, 사설학원,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도 농산어촌은 도시에 비해 아직도 접근성이 열악하며 그 수도 부족한 상황임.
    - \* 0~4세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개): 도시 21.3, 농촌 17.4
    - \* 1km<sup>2</sup>당 노인 여가복지시설(개): 도시 2.51, 농촌 0.63
    - \* 1km<sup>2</sup>당 초등학교(개): 도시 0.39, 농촌 0.05
  - 농산어촌 행정리의 50.7%에서는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미만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12.7%(읍 603개 행정리, 면 3,787개 행정리)는 1일 1~3회만 운행됨.

- 공공 및 생활서비스 시설로의 접근이 어려운 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농산어촌 주민이 약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됨(송미령 외, 2016).
  - 2015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층별 관리대장에서 생활 및 공공서비스 시설을 추출한 뒤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 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 향후 농산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이를 보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는 한 농산어촌지역의 서비스 기반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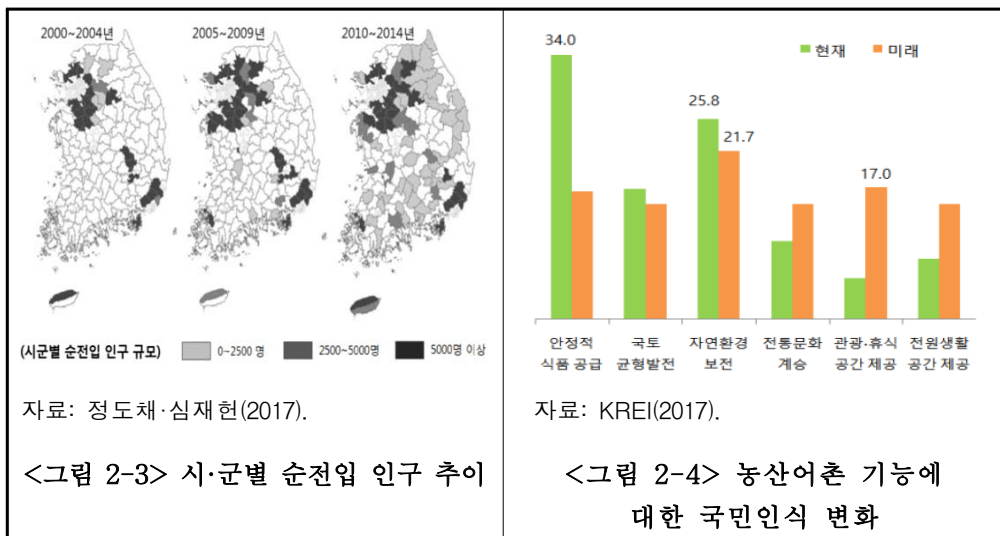


자료: 송미령 외(2016: 126).

<그림 2-2> 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 제3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대두와 농산어촌의 가치 변화

-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으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산어촌 환경과 농촌다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은 ‘가치가 많다’(62.1%)고 응답함.
  - 국민들은 미래 농산어촌에 대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관광 및 휴식 장소 제공, 전원생활 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고 있음(KREI, 2017).
  
-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일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농산어촌에서의 활동과 이주도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 인구 증가: 42만3천 명(‘13년) → 51만7천 명(‘17년), 이 중 50% 이상은 30대 이하
  - 농산어촌 마을 및 가구 수(중위가구수) 증가: 36,498개, 49가구(‘10년) → 36,792개, 64가구(‘15년)
    - \* 워라벨(work-life balance), 반농반X(半農半X)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계층에게 농산어촌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부상



## 제4절 지방분권 강화와 계획의 중요성 증대

### 1. 균특회계 개편 가능성

- 2018년 현재 균특회계 사업은 4개 계정, 8개 사업군(42개 세부사업)으로 2017년과 유사하며 일부 명칭의 변화만 있었음.

(표 2-2) 2018 균특회계 구성

| 계정<br>편성방식      |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br>계정     | 세종특별<br>자치시계정                                      | 제주특별<br>자치도계정   |
|-----------------|-------|-------------------|----------------|--|---|
| 지자체<br>자율<br>편성 | 시·도   | ① 시·도<br>자율편성사업   | -              | ③ 시·도 시·군·구<br>자율편성사업<br>* 시·군·구<br>기반구축사업<br>등 포함 | ④ 시·도, 시·군·구<br>자율편성사업<br>* 시·군·구 기반구축사업<br>등 포함<br>⑤ 특별지방행정기관<br>이관 사무수행경비 |
|                 | 시·군·구 | ② 시·군·구<br>자율편성사업 | -              |  |   |
| 부처직접편성          |       | -                 | ⑥ 부처직접<br>편성사업 | ⑦ 부처직접<br>편성사업                                     |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201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이 중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하는 포괄보조금 사업이 현행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단계임.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3.5조 원에 해당하는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다만, 그 이양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내 관계부처 TF를 통해 결정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2. 포괄보조금제도 개선 필요와 계획의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제도는 2005년 분권교부세와 균특회계로 시작됨.<sup>3)</sup> ‘사업 간 재원 칸막이’를 제거하여 중복사업을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음. 2014년에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편입된 후 현재는 균특회계가 유일한 포괄보조금에 해당함.
  - 포괄보조금제도는 예산한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느냐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개별 사업별 예산심의를 부처별로 받고, 부처가 지자체로 예산을 배분하며, 사업 평가 역시 국고보조사업 일부로 추진함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포괄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자체에 사업 편성 권한이 있고 국회의 예산사업 증감 대상에서는 제외됨으로(특정 국회의원의 자의적 요구로 특정 지자체 예산이 침해당하지는 않음) 재정분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한다는 의견도 있음.
  
- 포괄보조금제도는 도입 목적에 비추어 균형발전 효과 미흡, 제한적 재원규모, 포괄보조금으로서의 성격 미흡, 차등보조율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포괄보조금 성격을 가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은 집행률이 낮고 내역사업 신규신청 등이 저조하여 인해 포괄보조사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기도 했음.
  
- 이런 즈음에 문재인정부의 공약에 포괄보조금제도 개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sup>4)</sup>

---

3)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개편작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주도로 진행되었음. 그 기준은 ①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교육 관련 사업 ② 국고보조금 존치사업은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강한 복지, 농림, 환경 관련 사업 ③ 균특회계사업은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 농림, 문화관광 산업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었음.

4) 조임곤·송미령(2018).

- 몇 개의 단위사업을 묶어서 이를 포괄보조사업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을 자치단체 신청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예산액의 규모도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에 기초로 함.
  - 소액 보조사업의 통합을 위하여 중앙부처별로 일정액 미만 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이를 부처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자체 자율예산 편성을 유도하도록 함.
  - 현행 포괄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칸막이 제거, 계획계약제도 도입과 계획 실행력 제고, 중앙, 지방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과 지방의 역량 강화,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정교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지방세 개편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며, 포괄보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함.
  - 다만,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새로운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자주성을 존중한 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제도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그 계획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을 필요로 함.

제 3 장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 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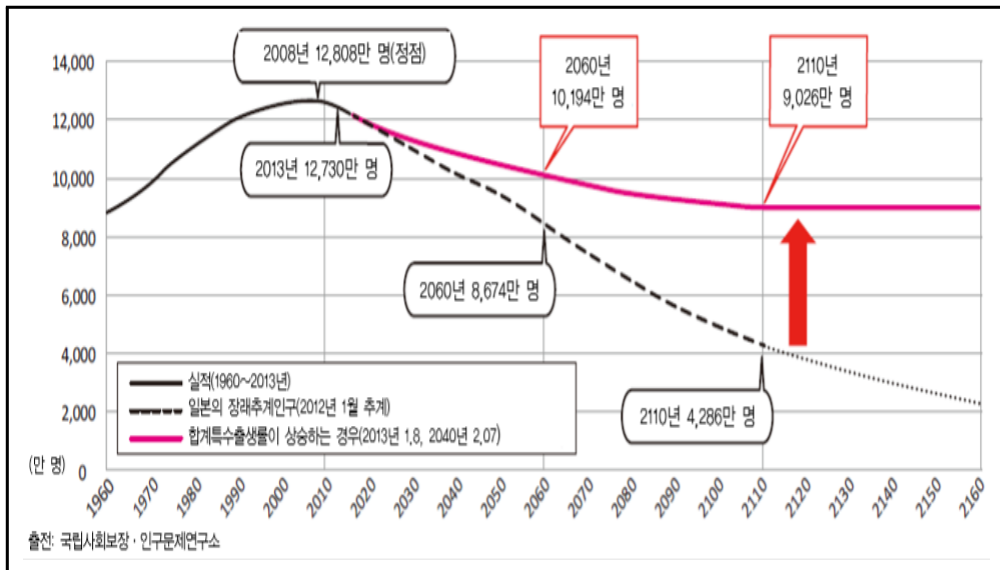
#### 제1절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일본 지방창생정책

##### 1. 정책 추진 배경

###### 가. 일본의 장래인구 감소 및 고령화 증가 가속화 전망

○ 일본의 인구는 2008년을 정점(1억 2,808만 명)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2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의 일본 장래인구 전망(현 추세 기반) 결과, 2060년에는 8,674만 명, 2110년에는 4,28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차미숙, 2016).

- 동시에 고령화율은 2008년에 23.0%에서 2060년에 39.9%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사무국; 차미숙(201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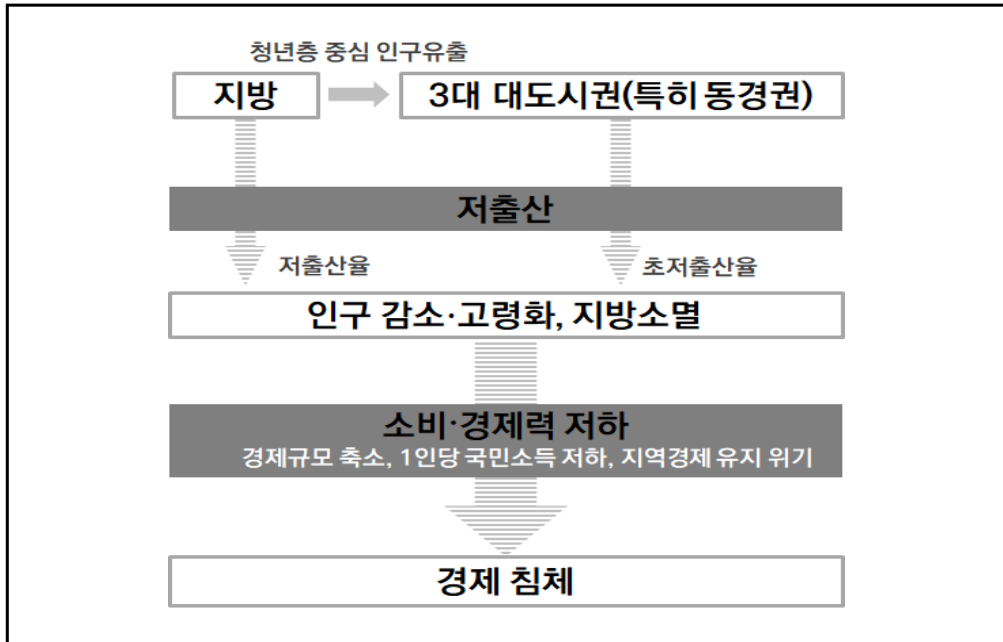
<그림 3-1> 일본의 장래인구 전망(1960~2160년)

## 나. 지방소멸론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 인구감소 심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2014년 5월, 전 총무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1,727개 시구정촌(市區町村) 가운데 896개가 소멸되고, 그 중 523개는 소규모(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는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지방소멸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함.
- 더불어 국토교통성의 국토형성계획에서 수행한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화지역 추정 결과, 2010년 대비 2050년에 60% 이상의 지역에서 현재의 절반 이하로 인구가 감소하며, 특히 현재 거주지역의 19%는 무거주지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방창생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차미숙, 2016).

## 다. ‘일본창생=지방창생’ 인식에 따른 지방창생정책 구체화

- 일본의 지방은 3대 대도시권, 특히 동경권으로의 젊은 층 유출로 인하여 15세 미만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대도시권은 지방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젊은 층의 대도시권 집중은 일본의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됨.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지방의 소멸은 경제규모 축소와 1인당 국민소득 저하 및 지역경제 사회 유지 위기 등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결국 일본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됨.
- 이와 같이 지방의 쇠퇴는 도시 쇠퇴와 일본 전역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일본창생=지방창생’), 아베정부는 로컬 아베노믹스의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정책을 구체화함.



자료: 內閣官房 まち・ひと ・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임성호 외(2017)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 일본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의 흐름

## 2. 정책 추진 경과

- 2014년 지방창생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2014년 9월: 추진 전담기구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신설함(각 정부부처가 일체화되어 일본 사회 주요 현안문제에 대응하고자 본부장은 총리, 부분부장은 지방창생담당상과 내각관방장관으로 구성되는 총리직속기구로 신설).
  -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제정으로 ‘지역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함.
  - 2014년 12월: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비전(중앙정부 차원, 2060년) 및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을 확정함.
  
- 2015년 지방창생 정책의 본격적 추진
  - 지방 인구비전, 지방판 창생종합전략(도도부현·시정촌)을 수립함.

- 2015년 3월: ‘콤팩트시티 형성지원팀’을 설치함.  
지방창생특구 3개 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단위 규제 개혁 실시
- 2015년 4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가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제공함.
- 2015년 6월: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을 발표함.

### 3. 정책 내용

#### 가. 지방창생정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 지방창생정책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며,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결론적으로 미래 일본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창생정책의 추진 방향은 일자리와 사람, 마을(지역)의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임.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마을’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임성호·최용준, 2016).
  - ‘일자리 창생’은 고용의 질과 양의 확보와 향상을 강조하며, ‘사람 창생’은 유용한 인재의 확보·양성과 결혼·출산·자녀교육을 강조함. ‘마을창생’은 지방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기존 정책들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요인들을 분석하여, ‘자립성(일회성 지양), 장래성(정책의 큰 그림 강조), 지역성(협업의 중시), 직접성(집중적), 성과중시(PDCA: Plan-Do-Check-Act 메카니즘 강조)’라는 5가지 원칙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나. 지방창생정책의 장기비전 및 국가차원의 정책패키지

- 중앙정부는 206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인구감소문제 극복과 성장력

확보의 두 축으로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비전을 설정함. 구체적으로 국민희망출생율(1.8) 실현 및 동경일극집중 시정을 통한 2060년 인구 1억 명 유지와 2050년 GDP 성장률 1.5~2% 유지를 목표로 설정함.

- 일본은 장기비전을 통한 중장기 전망을 세우고 이와 연계하여 5년 후의 단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지방창생 종합전략, 2015~2019)을 수립함. 중앙정부는 ‘정책 패키지’, 지방정부는 ‘지방판 종합전략’의 형태로 수립됨(임성호·최용준, 2016).
  - 지방창생 종합전략에서는 정책의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주요 시책과 평가·지원방안을 체계화함.
  -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는 정부 관계부처가 일체가 되어 준비한 시책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목표에 따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PDCA(Plan-Do-Check-Act) 정책 단계별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토록 함(차미숙, 2016).

(표 3-1)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                      |   |  |  |
|----------------------|---|--|--|
| 장기 비전<br>(중장기<br>전망) | 인구감소문제의 극복: 2060년 1억 명 인구확보 목표, 도쿄일극집중 시정 |  |  |
|                      | 성장력 확보: 2050년 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        |  |  |

| 정책 패키지                   | 기본 목표   | KPI                                       | 주요 추진시책  |
|--------------------------|---|---|--|
| 사람과<br>일자리<br>창생의<br>선순환 |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 창출<br>(2020년까지<br>젊은 세대를 위한<br>30만 명분의 일자리<br>창출)            | 젊은 층 고용창출수,<br>여성취업률,<br>재일외국인<br>관광소비액 등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
|                          |   |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
|                          |   |   | 지방에 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
|                          |   |   |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
|                          |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br>(2020년까지 도쿄 → 지방 전출 4만 명 증가,<br>지방 → 도쿄 진입 6만 명 감소) | 지방이주건수,<br>기업의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br>지방대학 진학률 등 | 지방이주 촉진  |
|                          |   |   |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 추진 |
|                          |   |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br>지방채용·취업 확대                           |
|                          |   |   | 지방대학 등 활성화   |

(계속)

| 정책 패키지         | 기본 목표  | KPI   | 주요 추진시책  |
|----------------|--|---|--|
|                |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br>(경혼희망률 증가, 부부당 자녀수 2.12명에 95% 도달) |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계속취업률 등      |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br>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br>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 변화)   |
|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br>(안심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 작은거점 수, 정주자립권 협정체결, 입지적정화 계획 수립, 중고·리폼시장 규모 등 | 작은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형 집락생활권)형성 지원<br>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br>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br>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

자료: 차미숙(2016).

- 지방창생 전략에 포함된 개별 시책으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빈 점포·유휴 농지·고(古) 민가 등 유휴 자원 활용, 지역경제 견인 사업 투자 촉진, DMO 형성 및 지원을 통한 관광 지역 조성 촉진, 지방대학 진흥, 지방창생 인턴쉽 및 장학금 지원, 지방거점 강화 기업 세제 지원, 중앙정부 위성 사무소 운영, 평생 활약마을(CCRC) 추진, 도시 콤팩트화와 교통 네트워크 형성, 작은 거점 및 지역운영조직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등이 있음 (송미령 외, 2017).

#### 다. 지방관 종합전략

-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에 따른 단기, 중장기적인 다양한 시책들 중, 어떤 메뉴를 선택하여 조합하고 채용할지의 사안은 최종적으로 ‘지방관 종합전략’을 통하여 결정됨. 이를 통해 각 시정촌에서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식임. 각 지자체는 국가의 기본 목표와의 관계를 반영하여 지역 목표를 설정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방 인구비전’과 ‘지방관 종합전략’을 수립하게 됨(나주몽, 2016).
- 그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특히 민간을 세분하여(산관학금노언(産官學金勞言, 산업계, 관,

대학, 금융기관, 노동단체, 언론계))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함. 이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지역을 재건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각의 대표가 함께 PDCA사이클에 근거하여 전략의 수립에서부터 담당자의 선정, 구체적인 진행방식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시책 실행을 꾀함(서진원, 2017).

|     |   |
|-----|---|
| 「産」 | : 지역의 산업으로서 상공회의소, 건설업협회, 상점가, JA 등이 포함됨                        |
| 「官」 | : 시청, 혹은 읍촌동사무소 등   |
| 「學」 | :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고등학교, 지역에 따라서는 중학교도 포함되며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멤버가 될 수 있음 |
| 「金」 | :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금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        |
| 「勞」 | : 노동조합  |
| 「言」 | : 지방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

## 라. 지역공간구조 재편- 새로운 지역거점 만들기

- 일본은 새로운 국토형성계획(2015.8) 수립을 통해 국토·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제시하고,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도시계층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추구함. 이는 필요 기능에 따라 권역인구를 확보하기 위함임. 이러한 흐름 하에 지방창생정책에서는 작은거점 수, 정주자립권 협정 체결 및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수 등을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의 주요 성과지표(KPI)로 선정함.

### 1) 지방도시 경제·생활권 형성: 다극형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 ‘입지적정화계획(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 2014.8)
  - 입지적정화계획은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서, 도시계획과 공공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콤팩트시티와 네트워크화를 실현하고 지역내 공공시설 활용 및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임.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을 거점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함. 2015년 7월 기준,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했거나 추진 중인 시정촌은 198개소에 달함.

- \* 도시기능유도구역은 도시기능을 도시의 중심거점과 생활거점에 유도하고 집약함으로써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도모하는 구역이며, 거주유도구역은 인구감소 속에서도 일정구역에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말함.
- 콤팩트 시티 실현을 위해 지역공간구조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평가지표 및 측정기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정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공공교통시책, 상업시설, 주택시책, 의료복지시책, 농업시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연계 필요(차미숙, 2016).

#### ○ 정주자립권

- 정주자립권은 중심도시와 주변 시정촌이 자유의사로 1대1의 협정을 체결하여 형성되는 권역을 의미하며, 권역별 집약과 네트워크 구축에 바탕을 두고 있음. 중심 도시에는 권역 전체에 필요한 도시기능을 집약적으로 정비하고, 인접 시정촌에는 필요한 생활기능(환경, 지역커뮤니티, 식료생산, 고령자 생활, 역사 및 문화 보전 등)을 확보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권역 전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주자립권에서의 중심都市는 인구 5만 명 이상이고 주야간 인구비율이 1 이상인 도시여야 하며, 도쿄권, 간사이권, 나고야권의 3대 도시권 이외의 도시여야 한다는 제약 존재(송미령 외, 2013a).

#### ○ 연계중추도시권

- 연계중추도시권은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기능에 따른 권역 인구 확보를 도모하고자 설정됨. 시정촌 연계를 통한 콤팩트와 네트워크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차 도시기능의 축적 및 생활 관련 기능과 서비스의 향상을 실시함으로써 인구 감소 사회에서도 인구 30만 명 수준의 일정한 권역 인구를 보유하여 활력 있는 경계를 유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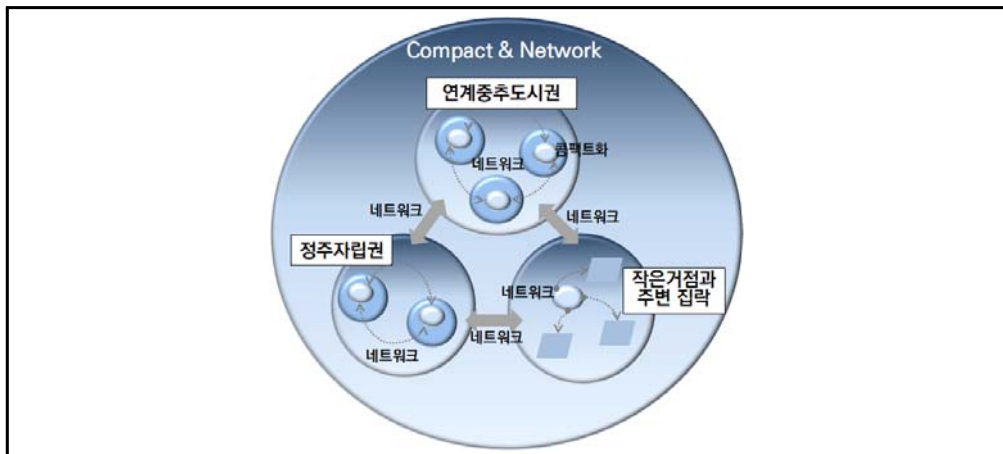


- 거점 지역으로의 의료·복지·상업 등의 도시 기능을 유도, 순환형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기능의 집적·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 부처별로 거점 형성을 추진 중임(총무성의 지방중추 거점도시권, 국토교통성의 고차지방도시연합, 경제산업성의 도시 고용권 등 설정)(김선희, 2018).
- 2017년 1월 기준, 17개의 중추도시권이 형성되었음(차미숙 2016).

## 2) 중산간지역 공간구조 재편: 작은거점

### ○ ‘작은거점(Compact Village)’을 중심으로 공간구조 재편

- 작은거점과 주변집락 간 연계를 통해 ‘집락생활권’을 형성함. 집락 생활권의 유지를 위해 작은거점에 생활서비스 기능(진료소, 보육소, 마을회관, 상점, 주유소 등)을 집약·확보하고, 커뮤니티 버스 등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작은 거점이 사람·물품·서비스 순환 등의 교류거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지역 주민이 지역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다기능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운영조직’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2020년까지 작은 거점을 전국에 1,000개소, 지역운영조직 3,000단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송미령 외, 2017).



자료: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2015a.; 차미숙(2015).

<그림 3-3> 콤팩트와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층적 국토공간형성전략

마. 지원 제도

○ 정보지원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을 구축하여, 국가가 지역경제에 관한 빅데이터(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를 수집·제공함. RESAS는 산업구조와 인구 동태 및 이동 등 민·관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역 종합전략을 수립, 실행,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RESAS에서 제공하는 지도 정보로는 인구, 지역경제, 산업구조, 기업활동, 관광, 마을 만들기, 고용 및 의료·복지, 지방재정 지도 등이 있음.

(표 3-2) RESAS에서 제공하는 지도 정보

| 구분         |      | 세부 정보           |  |
|------------|------|-----------------|--|
| 인구 맵       |      | 인구 구성           |  |
|            |      | 인구 증감           |  |
|            |      | 인구의 자연 증감       |  |
|            |      | 인구 사회 증감        |  |
|            |      | 졸업자 취업·진학       |  |
|            |      | 미래 인구 추계        |  |
|            |      | 인구 메쉬           |  |
|            |      | 미래 인구 메쉬        |  |
| 지역 경제 순환 맵 |      | 지역 경제 순환도       |  |
|            |      | 생산 분석           |  |
|            |      | 분배 분석           |  |
|            |      | 지출 분석           |  |
|            |      | 노동 생산성 등의 동향 분석 |  |
| 산업 구조 맵    | 전 산업 | 전체 산업의 구조       |  |
|            |      | 산업 특화계수 분석      |  |
|            |      | 기업 수            |  |
|            |      | 사업소 수           |  |
|            |      | 종업원 수 (사업장 단위)  |  |
|            |      | 부가가치 액 (기업 단위)  |  |
|            |      | 노동 생산성 (기업 단위)  |  |
|            | 제조업  | 제조업의 구조         |  |
|            |      | 제조업의 비교         |  |
|            |      | 제조품 출하액 등       |  |
|            |      |                 |  |
|            |      |                 |  |
|            |      |                 |  |

(계속)

| 구분                |            | 세부 정보                |
|-------------------|------------|----------------------|
|                   | 도소매 업 (소비) | 상업 구조                |
|                   |            | 상업의 비교               |
|                   |            | 연간 상품 판매액            |
|                   |            | 소비 동향 (POS 데이터)      |
|                   |            | From-to 분석 (POS 데이터) |
|                   | 농업         | 농업의 구조               |
|                   |            | 농업 산출액               |
|                   |            | 농지 분석                |
|                   |            | 농업인 분석               |
|                   | 임업         | 임업 총수입               |
|                   |            | 산림 분석                |
|                   |            | 임업자 분석               |
|                   | 물 산업       | 해수면 어획물 등 판매 금액      |
|                   |            | 해수면 어선·양식 면적 등 분석    |
|                   |            | 해면 어업 종사자 분석         |
| 내수면 어획물 등 판매 금액   |            |                      |
| 내수면 어선·양식 면적 등 분석 |            |                      |
| 내수면 어업자 분석        |            |                      |
| 기업 활동지도           | 기업 정보      | 표창·보조금 채택            |
|                   |            | 창업 비율                |
|                   |            | 흑자 적자 기업 비율          |
|                   |            | 중소·소규모 기업 재무 비교      |
|                   | 해외 거래      | 해외기업 진출 동향           |
|                   |            | 수출입                  |
|                   |            | 기업의 해외 사업 실적 분석      |
|                   | 연구 개발      | 연구 개발비의 비교           |
|                   |            | 특허 분포도               |
| 관광지도              | 국내         | 목적지 분석               |
|                   |            | From-to 분석 (숙박자)     |
|                   |            | 숙박 시설                |
|                   | 외국인        | 외국인 방문 분석            |
|                   |            | 외국인 체류 분석            |
|                   |            | 외국인 메슈               |
|                   |            | 외국인 입출국 공항 분석        |
|                   |            | 외국인 이동 상관 분석         |
|                   |            | 외국인 소비의 비교 (신용 카드)   |
|                   |            | 외국인 소비 구조 (신용 카드)    |
|                   |            | 외국인 소비의 비교 (면세 거래)   |
| 외국인 소비 구조 (면세 거래) |            |                      |

(계속)

| 구분             | 세부 정보              |
|----------------|--------------------|
| 마을 만들기 맵       | From-to 분석 (체류 인구) |
|                | 숙박 인구 비율           |
|                | 통근 통학 인구           |
|                | 유동 인구 메쉬           |
|                | 사업장 입지 동향          |
|                | 시설 주변 인구           |
|                | 부동산 거래             |
| 고용 / 의료 · 복지 맵 | 인당 임금              |
|                | 유효 구인 배율           |
|                | 구인 구직자             |
|                | 의료 수급              |
|                | 간호 수급              |
| 지방 재정 맵        | 지자체 재정 상황의 비교      |
|                | 일인당 지방세            |
|                | 일인당 시읍면 민세 법인 분    |
|                | 인당 재산세             |

출처: <https://resas.go.jp>. 검색일 2018.10.30.

○ 재정지원<sup>5)</sup>

- 일본정부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종합전략>을 고려한 개별 시책에의 예산, 지방재정계획의 세출 항목에 책정된 창생사업비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방창생제도 수행을 위한 재정을 지원함. 이러한 지원 예산의 재원은 기존의 지방 사업비를 흡수하거나 지방법인과세의 편재시정 등을 통해 확보함.
-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은 각 지자체가 설정한 <지방관 종합전략>에 기초하여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며,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에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으로 1,000억 엔이 책정되었음. 이 외에 지방창생가속화교부금이나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 등으로 지급된 추가 교부금이 존재함.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은 국비에 매칭하여 지방비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존재함.
- 일본정부는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교부금 이외에 <종합전략>을 고려한 지방창생 관련 개별 시책 대응 예산으로 6,579억 엔을 책정하였고, 2017년도 일반회계에서도 6,536억 엔으로 유사한 금액

5) 이정환(2018) 내용 참조.

을 책정하였음.

- 지방재정계획의 세출 항목에 책정된 창생사업비는 2016년도 회계연도와 2017년도 회계연도 모두 1조 엔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됨.

(표 3-3) 2016년도 일본정부 지방창생관련 예산

| 구분  | 예산액(억엔)          |
|---|------------------|
| 1. 지방창생추진교부금                                | 1,000(지방비 2,000) |
| 2. 종합전략의 개별시책                               | 6,579            |
| 지방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 1,895            |
|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 이주                              | 649              |
| 청년층 결혼·출산·육아 희망실현                           | 1,009            |
| 새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지역간연계                         | 2,936            |
| 3. 마을·사람·일자리창생사업비(지방재정계획)                   | (지방비 1조)         |
| 4. 사회보장<br>(보육지원 신제도 시행, 의료·간병서비스제공 체제개혁 등) | 7,924            |
| 합 계 (지방비 제외)                                | 15,503           |

자료: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6; 하혜영·김유정(2016)  
국회입법조사처 재인용

#### ○ 인적지원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국가 공무원, 대학 연구자, 민간 인력을 각 시정촌에 지자체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함. 2015년에 69개 시정촌으로, 2016년에 58개 시정촌으로 지원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기간은 상근직원의 경우 2년, 비상근직원의 경우 1~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하혜영·김유정, 2016).

####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의 시사점

##### <도시와 농촌, 상생적 관점>

-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은 분권화나 재정건전의 방향이 아니라, 일극집중을 줄이고 출생률을 증대시켜 국가적 인구감소를 막고, 경제 활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지방정책과 차별화됨. 즉, 지방을 살림으로써 일본의 경제사회에 부담이 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이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상생적 정책을 펼칠 때 양자 간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일본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지방 쇠퇴 모습은 우리나라도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 농촌 활성화 자체에만 초점을 둔 방식이 아닌,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장기적 국가 발전 과제 추진을 이끌어가는 농촌을 지향하기 위한 사회·행정·경제정책 영역의 확장이 필요함.

##### <연계·종합·포괄화>

- 지방창생전략을 통해 추진되는 세부 사업들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닌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사업들인 경우가 많음. 이를 ‘지방창생’이라는 네이밍을 통해 연계·종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또한 지방창생정책을 통한 사업들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던 다양한 부처의 정책(산업정책, 도시개발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을 총망라하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음.
- 농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은 많으나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단일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음.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종합화하여 단기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문제는 단일한 문제로 귀결되지 않으며 국토, 산업,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이에 농촌을 대상으로 농림부와 국토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부처를 망라하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담조직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콤팩트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정비>

-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방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을 대상으로도 콤팩트화와 네트워크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공급의 실용성 있는 방안으로 ‘작은거점’이 고려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향후 지자체로서의 규모와 기능이 미흡한 시·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지역의 권역 재설정 및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구분>

- 지방창생 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의 기반구축(추진 전담기구 신설 및 관련 법 제정,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 수립 등)이 선행되었으며, 이후에 지방에서의 인구비전과 지방판 종합전략이 수립되어 각 시정촌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됨. 이는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때 이후 정책 추진 과정이 원활해지며, 다양한 지역별 정책들이 공동의 목표(지방창생을 통한 일본창생)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역개발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일괄적 방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필요 정보와 재정, 인적 지원의 수행 등에 있음.

## <성과 분석 및 효과 검증>

- 일본 정부는 기존의 지역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기본목표에 따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 PDCA(Plan-Do-Check-Act) 정책 단계별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음.
  - 효과검증을 수반하지 않는 선심성·단기성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요 성과 지표를 통해 정책 단계별 효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가동해야 함. 이를 위해 RESAS와 같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종합적 데이터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제2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프랑스 계획협약 제도

### 1. 프랑스 국가-지역 계획협약(contrats de plan État-Région, CPER) 제도의 개요

#### 가. 계획협약 제도의 개념과 배경

- 계획협약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이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상호 약속하는 활동”임(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sup>6)</sup>
- 계획협약은 ‘계획계약’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프랑스에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전국계획(plan de nation)과 레지옹계획(plan des régions)을 연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알려짐.
  - 1982년 지방분권화 이전의 프랑스의 레지옹계획은 국가계획의 지역화 내지는 국가계획의 하위체계로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함.
  - 1982년 이후 지방분권화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은 독자적인 레지옹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
  - 전국계획과 레지옹계획 간의 일관성이나 조화를 해치지 않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로 ‘계획협약’을 도입함.
-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의 분권화 추진 경과를 3단계로 구분함.
  - 1단계인 ACT1은 1982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분권화를 위한 기초 단계를 준비하였음. 2단계인 ACT2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레지옹(Région)이라는 광역지자체가 설정되었고 많은 역할이 레지옹으로 이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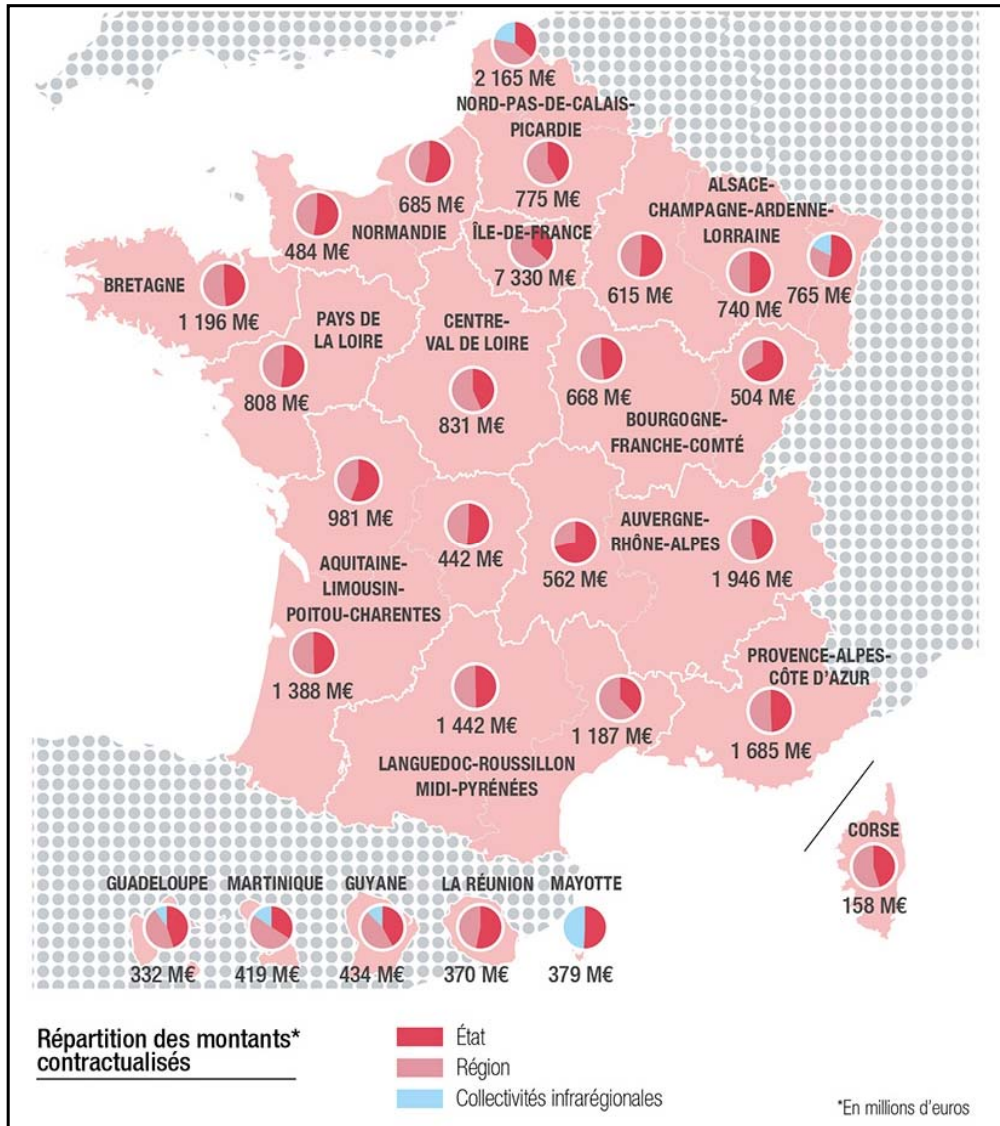
6) 한국행정학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542&page=4&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542&page=4&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검색일 2018.11.13

- 2007년부터 현재까지를 ACT3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22개에 달했던 레지옹은 13개로 축소되었고, 정책 전달 체계를 국가-레지옹-꼬뮌연합체(EPCI)로 재편하고 있음.
- 각 위계마다 주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레지옹은 경제발전,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데파르트망은 사회복지 및 문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프랑스의 정책 담당자들은 데파르트망은 점차 기능이 축소되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리고 꼬뮌 연합체(EPCI)가 이외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나. 최근 계획협약 동향

- 1984년부터 현재 6차례의 국가-지역 계획협약이 체결되어 지금은 제6차 계획협약 (2015~2020년)기간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8.6.8.일자 보도자료).
- 프랑스의 국가-지역 계획협약은 시기별로 명칭이 조금씩 변경되었지만 2000년 이후 최근 국가-지역 계획협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CGET 홈페이지 참고).
  - 국가-지역 계획 협약(2000~2006: 4기): 이 시기에는 국가는 17.51억 유로, 지방의회는 17.5억 유로, 지방정부는 5.75억 유로를 계약함. 이는 3기 계획협약(1994~1999)보다 56% 증가한 예산이며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s)의 102.1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됨.
  - 국가-지역 프로젝트 계획 협약(2007-2013: 5기): 이 시기에는 계획 및 개발 계획에 대한 부처 간 위원회 (CIADT)가 주도하여 ① 영토의 경쟁력 및 매력, ②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③ 사회적 결속 등 3가지 목표로 계획 내용을 설정함(도로의 확충은 프로젝트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 초기 자금 투입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취소되었으며, 유럽자금(ERDF, ESF)등과 연계하기 위해 7년 단위로 체결하였음. 이때 유럽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지역 계획협약의 내용 중 75%를 리스본 전략 및 예테보리 전략에 의한 혁신과 경쟁력 및 개발에 투자하도록 계획함.



자료: <http://www.cget.gouv.fr/dossiers/contrats-de-plan-etat-region>, 검색일 2018.11.13.

**<그림 3-4> 2015~2020 국가-지역 계획협약 예산 분포**

- 국가-지역 계획협약(2015~2020: 6기): 가장 최근에 체결된 국가-지역 계획협약은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6가지 필수 구성요소 및 기본 항목으로 고용분야에 협약을 체결함. 국가와 레지옹은 총 3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임.

### <프랑스의 미래 투자를 위한 6가지 요소 및 기본 항목>

1. **멀티 모달(multi modal) 이동성 증대:** 효율적인 운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 철도 및 하천과 같은 기존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거나 개선하여 지상 운송 서비스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2. **고등 교육과 연구 혁신:** 매력적이고 기능적인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주택의 개조 및 창의적 디지털 사용의 개발을 추구, 또한 연구 및 혁신 측면에서는 과학 장비 투자, 혁신 연구 프로젝트 지원, 기술 이전 구조 지원 등을 수행
3. **생태 에너지 전환:**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 활동을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순환 경제의 개발, 폐기물 관리 개선, 대기 질 개선 등의 목표를 지원.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장려함.
4. **디지털:** 초고속 유선 광대역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확대
5. **혁신, 미래 분야 및 미래 공장:** 미래 산업 및 9가지 산업 솔루션과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에 투자.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공동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되며, 지역 특화 분야와 관련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
6. **국토 개발:** 영토 평등을 위한 개발 정책의 조직 및 시행을 위한 자원을 지역에 제공  
※ **고용:** 국가-지역 계획협약의 개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오리엔테이션, 훈련, 통합·유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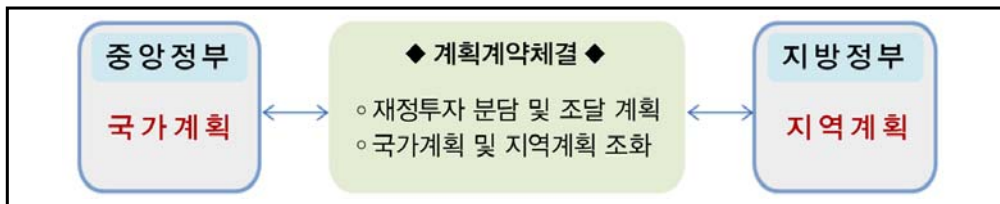
자료: <http://www.cget.gouv.fr/dossiers/contrats-de-plan-etat-region>, 검색일 2018.11.13

## 2. 계획협약 추진체계

- 계획협약은 「계획의 개혁(reforme de la planification)에 관한 법률 (82.07.29)」에 따라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적 사업에 대하여 중앙의 대리인인 레지옹 지사(préfet de région)와 레지옹 의회 의장이 합의하는 것임(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중앙정부와 모든 레지옹들은 공동으로 착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5년에서 7년 사이에 계획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8.6.8.일자 보도자료).<sup>7)</sup>
- 레지옹 지사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레지옹개발담당보좌관의 자문을 받아 국가의 관점을 표현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레지옹이 주도하는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8.6.8.일자 보도자료

- 레지옹계획위원회 및 레지옹 내 사회·경제단체들은 계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레지옹 의회는 레지옹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협약 예산을 심의함. 이때 의회의 의장은 레지옹 지사와 계획협약에 대한 협의 결정권을 가짐(이원섭, 2011).<sup>8)</sup>
-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 간의 협상은 CGET(이전 DATAR)가 관여하며 협상의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이 참여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이나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은 사업의 예산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관련 장관이나 수상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수상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중재하기도 함.
  - 계획협약의 수립은 CGET의 지침 마련에서 시작되고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 의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완료(차미숙 외, 2009)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8.6.8.일자 보도자료.

<그림 3-5> 프랑스의 계획협약 체계

### 3. 계획협약의 특성 및 유형

- 계획협약은 국가 및 지역이 단순히 자신들의 의향을 선언하는 목록이 아니라 그 목표와 재정을 인정하는 사업계획으로 매우 구체적인 협약임(한국행정학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레지옹의 각 사업계획들은 국가의 주요 목표(6개 요소 및 고용) 등과 연계되어 있고, 협약은 재정 계획과 시행기간을 갖게 됨.
  - 더불어 레지옹은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사업을 수반할 수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데파르트망, 꼬뮌, 자문기관들과의 협력을 도모함.

8) 이원섭(2011) 참조.

- 계획협약은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한국행정학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계획협약은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생산 활동의 지원, 취업 문제 등에 우선적 비중을 두고 이를 위해 국가와 레지옹의 협력을 유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목표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함.
  
- 또한 계획협약은 레지옹별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레지옹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한국행정학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이러한 계획협약은 광역계약, 초광역계약, 특정지역계약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이원섭, 2011).

(표 3-4) 국가-지역 계약협약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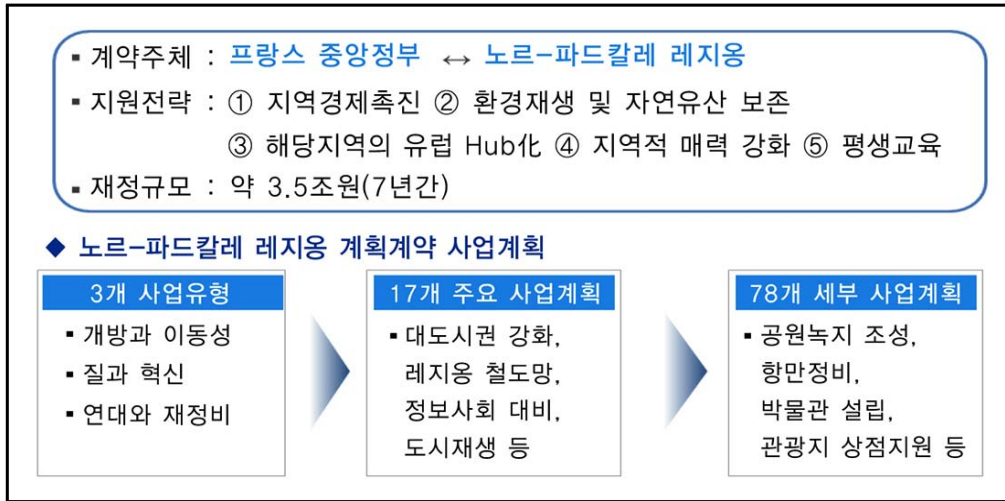
| 계약유형   | 대상                   | 주체                                     | 재원   |
|--|----------------------|--|--|
| 광역계약<br>(Contrat de Plan:<br>volet régional)       | 레지옹                  | 국가, 레지옹,<br>데파르트망, 코뮌 및<br>협력체, 도농연합체  | 국가와 레지옹의 동등부담<br>원칙  |
| 초광역계약<br>(Contrat de Plan:<br>volet interrégional) | 산악지역<br>하천지역<br>연안지역 | 국가, 레지옹,<br>데파르트망,<br>공공기관(수자원공사<br>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레지옹 동등 부담<br/>원칙, 기타 지자체</li> <li>• 유럽연합지역개발기금</li> </ul> |
| 특정지역계약<br>(Contrat de Plan:<br>volet territorial)  | 도농권지역<br>도시권지역       | 코뮌 및 협력체,<br>도농연합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교부금, 단일<br/>사업세 등</li> <li>• 상호 부담</li> </ul>            |

자료: 이원섭(2011).

#### 4. 계획협약의 사례

##### 가. 국가 ↔ ‘노르-파드칼레’ 레지옹간 체결계약 사례(2007~2013년)

- 프랑스 중앙정부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노르-파드칼레 레지옹간의 계획협약은 17개 사업에 대해 총 262만 유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1.4%인 82만 유로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계획임. 나머지 68.6%인 180만 유로는 레지옹이 부담하여 7년(2007-2013년)간 사업을 추진(장철순, 2011)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8.6.8.일자 보도자료.

<그림 3-6> 프랑스의 중앙정부-레지옹 간의 계획협약 사례

#### 나. “산악지역 및 강 유역의 레지옹 간 협약” 사례9)

- 프랑스는 산악지역(환경, 관광, 농업, 산림, 자연재해 예방 등), 연안 지역 등과 같은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레지옹 간의 연계·협력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수행함.
  - 알프스, 쥐라, 마시프 샹탈, 피레네, 보주 등 대표적인 프랑스의 산악지역을 레지옹 간 협약을 토대로 계획협약을 체결
  - 프랑스의 5대 강(르와르, 뫼즈, 론, 센, 가론)의 경우도 각 강 유역 계획을 토대로 계획협약을 체결
  
- 2007~2013년 국가와 레지옹 간에 체결된 산악지역 또는 강 유역의 레지옹 간 협약에는 레지옹지사(국가의 대표), 관련 지자체(레지옹, 데파르트망), 공기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9) 배준구(2015) 참조.

- 레지옹지사는 산악지역의 조정자로서 산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며, 지사는 산악지역 사무국장에 의해 보좌. DATAR는 6개 산악지역의 사무국장을 관리하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매월 회의를 통해 정책 조화를 도모하고 산악사무국의 예산을 지원함.

#### 다.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 사례<sup>10)</sup>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임.
-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contrats de reciprocite 《Ville-Campagne》)은 2015년 범부처 농촌성 위원회(CIR)<sup>11)</sup>에서 도출된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임.
  - CIR은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2015~2016년 동안 3번의 위원회가 개최 됨. 핵심 아젠다는 ‘우리의 농촌성, 프랑스를 위한 단 하나의 기회(Nos ruralites: Une chance pour la France)’임.
  - 농촌발전 정책 추진의 원칙을 ‘평등과 형평성’, ‘지역 및 지역주체의 책임 강화 및 역량 배양’, ‘도시와 농촌의 유대 연계 강화’, ‘상호보완성’으로 정함.
  - 이러한 원칙 아래에 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서비스 접근성 보장 ② 지역 역량 및 매력도 강화 ③ 지역 간 경쟁 논리 배제의 3가지로 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함.
  - 1차 위원회에서는 3가지 농촌발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46개 정책 과제를 제시(2015.3), 2차 위원회에서는 46개 정책과제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21개 정책 과제를 추가 제시(2015.09). 3차 위원회에서는 1차, 2차 위원회에서 제시된 67개 정책과제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37개 정책과제를 추가 제시함(2016.05).
- CGET<sup>12)</sup>가 시범사업의 가이드 역할(pilote)을 하고 있으며,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 프레임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코뮌·코뮌

10) 심재현·이정해 2018. “프랑스 농촌발전 정책 및 농촌성 협정 이행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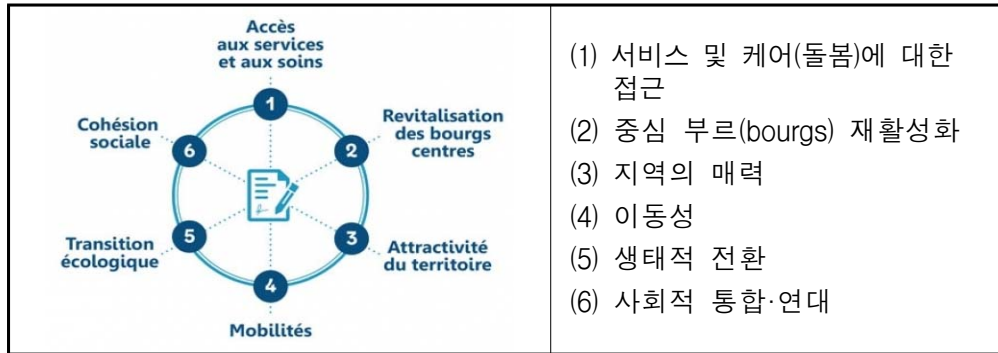
11) 농촌을 위한 범부처위원회.

12) 국토평등위원회, 국토개발청 등으로 번역.



연합체들을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추진하고 있음.

- 협약내용 수립 시 ‘국가-지역 간 계획 계약’(CPER)<sup>13</sup>의 핵심영역(volets)을 적용하며 크게 6가지 카테고리의 계획을 선택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T/F 내부회의 자료.

### <그림 3-7>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의 6가지 주제

-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40개의 농촌성 협정이 체결되었음.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은 2017~2020년이며 정부 예산 약 21억 6,000만 유로(한화 가치 약 2조 8,0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심재현·이정해, 2018)
-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꼬뮌)는 범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인 PETR이나 EPCI를 구성하여 농촌발전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연합체가 농촌성 협정 체결 및 이행 주체가 됨(심재현·이정해, 2018).
  - PETR(pôles d'équilibre territoriaux et ruraux, 2018년 1월 기준 112개)과 EPCI(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2018년 1월 기준 1,263개)는 범부처 농촌성 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목적, 사업 내용, 일정, 예산 등)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레지

13) 국토/지역(territoires)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5-2020년 기간에 대한 ‘국가-지역 간 계획 협약’(Les Contrats de plan État-Région: CPER)을 체결함. 국가는 143억 유로, 레지옹은 152억 유로를 계약함(contractualisé).

용 또는 데파르트망)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속해 있는 지방정부 (데파르트망)와 농촌성 협정을 체결

- 서비스 접근성, 중심지 활성화, 지역 매력, 이동성, 사회 결속,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을 협정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
- 데파르트망 정부는 PETR과 EPCI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속해 있는 레지옹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협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 레지옹 정부는 농촌성 협정 이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인 국토결속부(Ministre de la Cohesion des territoires)와 CGET에 제출

####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 사례: CCPV EPCI사례>

- 범지방자치단체연합체(EPCI)의 하나인 Communaute de Communes de la Picardie Verte(CCPV)는 파리 북서부의 우아제 데파르트망에 속하며, 89개 꼬뮌의 연합체로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을 2017년 5월에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
  - 89개 꼬뮌 연합(EPCI)은 1명의 회장과 8명의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부회장들은 문화·관광, 경제, 오물수거, 사회복지, 지역개발, 스포츠, 건설, 미래 구상(지속가능한 개발) 담당으로 업무를 나누어 EPCI 관내의 업무를 관리
  - CCPV의 면적은 633km<sup>2</sup>으로 우리나라의 나주시와 비슷한 면적이며 약 3만여 명이 거주
-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Marseille-an-Beauvaisis 꼬뮌에 50만 유로를 투입하여 보건센터를 설립 (꼬뮌 소유 부지에 설립)
  - 29만 5,750 유로를 투입하여 Blarigies 꼬뮌에 MAM(Maison d'Assistants Maternels) 운영
  - Grandvilliers, Formerie, Feuquieres, Crillon, Roy-Boissy, Halloy 등에서 중심지 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고, 약 500만 유로를 투입하여 문화·체육 시설, 지역 유산 복원, 주차장, 운동장,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추진

- Songeons에 12만 유로를 투입하여 지역사회활동존(ZCA)을 구축
- 3개 지역에서 Jobijoba Institute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2만 5,000유로를 투입
- 농산업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Compagnon 플랫폼(Open Agrifood/Oreleans)을 구축하는 데 5만 유로를 투입. GreenFiex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며 100명 이상이 이에 참여 중
- Herperie Valley에 위치한 오래된 Oudeuil역을 복원하는 데 25만 유로를 투입
- Songeons와 Gerberoy 꼬뮌의 Caumont 숲에 위치한 기차길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Songeons에는 지역사회 캠핑장 설립)을 추진하는 데 4만 유로를 투입
- Songeons 꼬뮌은 1만 9,048유로를 투입,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 강습과 함께 필요한 장비도 지원하고 시합도 개최
- Songeons와 Gerberoy 꼬뮌에는 2만 유로를 투입하여 VaSlee de Therain으로 불리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
- 5만 유로를 투입하여 TEPcv와 COTR라는 이름으로 지역 택시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수요응답형 택시인 TAD 택시/전기차 사업을 추진
- FISAC과 CCPV를 광고하는 프로모션 간판을 각각 18개씩 활용하려고 12만 6,000유로를 투입
- 열 네트워크 효율성 연구, 메탄화 연구, 마이크로 메탄화 등 생태적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20만 유로를 투입
- MSA(Mutualite Sociale Agricole)와 파트너십을 맺고 MAPRA(노인 리셉션 하우스)를 Feuquieres에 설립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전화 보조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을 지원하고 60만 유로를 투입
- Fontaine-Lavaganne의 SIRS가 수행하는 RPC(Regroupement Pedagogique Concetre) 사업에 205만 2,271유로를 투입
- 8만 유로를 투입하여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일반적인 협약을 맺도록 지원하며 캠페인을 진행
- Songeon 꼬뮌의 RSP를 MSAP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Cenbter Social de Grandvillers에서 MSAP 프로젝트를 지속하도록 2만 유로를 투입
- 8만 유로를 투입하여 청년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Academie de la Picardie Verte를 구축하고, 여기서 CCPV에 새롭게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

자료: 심재현·이정해(2018). 프랑스 농촌발전 정책 및 농촌성 협정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미발간)

## 5. 계획협약제도 및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의 시사점

- 분권화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계획협약 제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조정 및 정책 촉진기능을 유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제도임.
  - 중앙 및 지역이 공감하는 목적이 제시되며, 사업의 목적과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협약이 작동하는 것이 장점임. 또한 중앙과 지방의 상호책임 하에서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임.
  - 특히, 계획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임.
  
-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도 계획협약의 큰 틀에서 유사한 시사점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구상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이러한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지자체가 동조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음.
  -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재원이 투입되지만,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지자체 내 다양한 부문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게 함으로써 통합적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셋째, 물리적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자체가 자유롭게 재원을 투자하여 성과를 얻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시·군 정도의 크기에서 5년간 중심지 사업 정도의 예산만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올림.

- 넷째, 협약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향후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협약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제 4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요구와 시사점**





##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요구와 시사점

### 제1절 개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정립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지역 개발, 농정, 기획 등)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 4-1)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성과,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조사 기간: 2018. 8. 10. ~ 9. 18.
  - 조사 방법: 이메일 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
  - 응답자: 시·군 공무원 104명, 도 공무원 17명, 전문가 50명
  
- 농촌 여건 변화 및 지방분권 강화 등 향후 정책 환경을 고려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방향 도출을 위해 다음 주제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함.
  - 농촌 발전 현안과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비롯한 주요 계획 현황
  - 농촌 지역개발 추진 현황 및 관련 의사결정 특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
  - 지방 분권 강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 지역개발 전망
  - 신활력 플러스, 농촌 계획협약 등 향후 정책 대응 방향

(표 4-1) 설문 응답자 특성

| 응답자                                 | 구분       | 항목              | 집계치                         |    |
|-------------------------------------|----------|-----------------|-----------------------------|----|
| 전문가<br>(센터, 공사,<br>대학, 연구원 등<br>소속) | 담당분야     | 지역·농촌계획, 정책, 연구 | 20                          |    |
|                                     |          | 지역·농촌개발, 사업     | 23                          |    |
|                                     |          | 지역·농업경제         | 3                           |    |
|                                     |          | 복지              | 2                           |    |
|                                     |          | 기타              | 2                           |    |
|                                     | 연령대      | 40대             | 18                          |    |
|                                     |          | 50대             | 24                          |    |
|                                     |          | 60대             | 8                           |    |
|                                     | 시·군공무원   | 지역구분            | 도농복합시                       | 32 |
| 군                                   |          |                 | 62                          |    |
| 미상                                  |          |                 | 10                          |    |
| 담당분야                                |          | 기획, 예산          | 17                          |    |
|                                     |          | 농업정책, 농정기획 관련   | 18                          |    |
|                                     |          | 농촌개발, 사업, 건설 관련 | 55                          |    |
|                                     |          | 기타 및 미상         | 14                          |    |
| 담당 업무경력                             |          |                 | 평균 2.9년<br>(최대 10년, 최소 1개월) |    |
| 연령대                                 |          | 30대             | 13                          |    |
|                                     |          | 40대             | 31                          |    |
|                                     |          | 50대 이상          | 55                          |    |
|                                     |          | 미상              | 5                           |    |
| 시·도공무원                              |          | 담당분야            | 예산                          | 1  |
|                                     |          |                 | 농업정책, 농정기획                  | 4  |
|                                     | 농촌개발, 사업 |                 | 9                           |    |
|                                     | 기타       |                 | 1                           |    |
|                                     | 미상       |                 | 2                           |    |
|                                     | 담당 업무경력  |                 | 평균 2.9년<br>(최대 7년, 최소 1개월)  |    |
|                                     | 연령대      | 50대             | 3                           |    |
|                                     |          | 60대             | 12                          |    |
|                                     |          | 미상              | 2                           |    |

자료: 연구진 작성.

##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 1. 농촌 발전에 중요한 현안

- 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 확보와 농가경제 다각화를 답한 비율이 높음.
  - 전문가 및 도 공무원은 시·군 담당자에 비해 인구 감소 대응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농촌 현안으로 답함.
  - 도농복합시 공무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복지·문화·교육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중요하게 응답함.

(표 4-2) 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

단위: %

| 구 분                       | 지자체 담당자         |             |             | 전문가<br>(n=50) |
|---------------------------|-----------------|-------------|-------------|---------------|
|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도<br>(n=17) |               |
|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와 농가경제 다각화     | 37.5            | <b>40.3</b> | <b>52.9</b> | <b>32.0</b>   |
| 농업 후계 인력 확보               | 0.0             | 3.2         | 0.0         | 2.0           |
| 기업체 또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         | 6.3             | 11.3        | 0.0         | 0.0           |
| 인구 감소 대응(귀농·귀촌 유입, 정착 지원) | 18.8            | 17.7        | <b>29.4</b> | <b>32.0</b>   |
| 특화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 12.5            | <b>17.7</b> | 0.0         | 6.0           |
| 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 <b>25.0</b>     | 9.7         | 11.8        | 24.0          |
| 기타                        | 0.0             | 0.0         | 0.0         | 4.0           |
| 합 계                       | 1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 시·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내용과 역할

- 지역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강조점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지자체 유형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서 수립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로서 군 응답자들은 6차산업화 육성을 답

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밖에 농산물 유통·마케팅, 소득작목 개발 등 농가경제와 관련한 영역을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응답함.

- 도농복합시의 경우 보건·복지·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답한 비율이 군 지역보다 높고, 주민 역량 강화, 환경·경관 보전 등 소득 외 분야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함.
- 도 담당 공무원의 경우 6차산업화와 지역 농산물 유통·마케팅을 역점 분야로 응답한 데 이어 귀농·귀촌 활성화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지역 비교)

단위: %

| 구 분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도<br>(n=19) |
|--------------------|-----------------|-------------|-------------|
| 전략작목, 소득작목 육성 개발   | 6.6             | <u>13.9</u> | 0.0         |
| 지역 농산물 유통, 마케팅     | <u>18.0</u>     | <u>13.1</u> | <u>18.2</u> |
| 농특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 <u>14.8</u>     | <u>21.3</u> | <u>21.2</u> |
|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 4.9             | 8.2         | 3.0         |
| 친환경농업 육성           | 6.6             | 6.6         | 9.1         |
| 농업 후계인력 육성         | 3.3             | 0.8         | 6.1         |
| 마을, 중심지 등 농촌 공간 정비 | 6.6             | 12.3        | 9.1         |
| 주민 보건복지, 교육, 문화 개선 | <u>14.8</u>     | 11.5        | 9.1         |
| 귀농귀촌 활성화           | 1.6             | 2.5         | <u>15.2</u> |
| 농촌 환경, 경관 보전 및 활용  | 4.9             | 3.3         | 0.0         |
| 주민 역량 강화           | 8.2             | 4.1         | 3.0         |
| 지역 농정 거버넌스 구축      | 3.3             | 1.6         | 6.1         |
| 기타                 | 1.6             | 0.0         | 0.0         |
| 잘 모르겠음             | 4.9             | 0.8         | 0.0         |
| 합 계                | 100             | 100.0       | 100.0       |

주: 복수응답 문항(1, 2순위 답변 집계)으로서 응답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항목에 대해 밑줄로 강조함.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에 대한 응답은 (표 4-4)와 같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영역에 따라 명확히 다른 결과를 나타냄.
- 농촌개발 분야 담당자의 경우 ‘6차산업화’와 함께 ‘농촌 공간 정비’ 및 ‘보건·복지, 교육, 문화 개선’을 답한 비율이 높음.
  - 반면에 농정 분야 담당자는 작목 개발과 농산물 유통·마케팅, 6차 산업화 등과 같이 지역 농업 육성 부문을 우세하게 답함.
  - 기획·예산 분야 응답자는 지역 농업 관련 항목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항목을 답한 비율이 높음.
  -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업무가 농정 분야의 고유 영역임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이 공간계획 영역의 내용이나 정주 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표 4-4)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업무 영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업무 구분  |              |                |
|--------------------|----------------|--------------|----------------|
|                    | 농촌개발<br>(n=55) | 농정<br>(n=18) | 기획예산<br>(n=17) |
| 전략작목, 소득작목 육성 개발   | 9.3            | <u>22.2</u>  | 12.1           |
| 지역 농산물 유통, 마케팅     | 9.3            | <u>33.3</u>  | <u>15.2</u>    |
| 농특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 <u>18.7</u>    | <u>16.7</u>  | <u>18.2</u>    |
|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 8.4            | 2.8          | 9.1            |
| 친환경농업 육성           | 6.5            | 5.6          | 9.1            |
| 농업 후계인력 육성         | 1.9            | 2.8          | 0.0            |
| 마을, 중심지 등 농촌 공간 정비 | <u>13.1</u>    | 2.8          | 9.1            |
| 주민 보건복지, 교육, 문화 개선 | <u>13.1</u>    | 8.3          | <u>18.2</u>    |
| 귀농귀촌 활성화           | 1.9            | 0.0          | 6.1            |
| 농촌 환경, 경관 보전 및 활용  | 4.7            | 2.8          | 0.0            |
| 주민 역량 강화           | 7.5            | 0.0          | 0.0            |
| 지역 농정 거버넌스 구축      | 2.8            | 2.8          | 0.0            |
| 기타                 | 0.9            | 0.0          | 0.0            |
| 잘 모르겠음             | 1.9            | 0.0          | 3.0            |
| 합 계                | 100            | 100.0        | 100.0          |

주: 복수응답 문항(1, 2순위 답변 집계)으로서 응답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항목에 대해 밑줄로 강조함.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지자체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농촌에서 갖는 역할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는 다소 인식 차이가 존재함.
  -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농업 육성 중심이어서 농촌 발전에 관해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거나 관련 예산을 얻는 목적에서 의무적·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지역의 농촌 발전 비전을 충실히 담아서 수립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도 공무원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는데, 광역 단위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전략적 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함.

(표 4-5)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역할 인식

단위: %

| 구 분                                  | 공무원             |             |             | 전문가<br>(n=50) |
|--------------------------------------|-----------------|-------------|-------------|---------------|
|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도<br>(n=17) |               |
| 지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계획들보다 농촌발전을 위한 중요성 큼    | 71.9            | 88.7        | 100.0       | 86.0          |
| 지역농업 육성 내용 위주이고 농촌발전예 관해 충분히 담지 못함   | 50.0            | 40.3        | 64.7        | 68.0          |
| 실질적 내용보다 사업 예산 확보 목적상 의무 수립하는 계획임    | 53.1            | 32.3        | 29.4        | 78.0          |
| 시·군의 농촌발전 비전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담아 수립되는 계획임 | 78.1            | 83.6        | 82.4        | 28.0          |

주: 각각의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을 집계  
 자료: 시·군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3. 지자체의 농촌 지역개발 추진 여건

- 조사 결과 농촌 지역개발 분야를 지자체 차원에서 총괄 기획·관리 하는 행정 조직이 구성된 시·군이 일부 있으나, 대체로 개별 사업 부서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 담당자 조사 결과 농촌 지역개발 총괄 조직이 없다고 답한 시·군은 38.5%로 집계됨.

- 농촌 지역개발 총괄 조직을 갖추었다고 응답한 나머지 시·군들의 경우도 대체로 농정 부서나 건설·교통 부서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임.
- 지자체 내 여러 부서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농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농정 부서 또는 건설·교통 부서 이외의 다른 조직들로는 기획·예산과 3.8%, 별도의 미래전략과(단) 4.8%, 농촌개발과(또는 활력과 등) 5.8% 등의 비율로 집계됨.
- 지자체 유형별로는 도농복합시는 농정 부서가 일반농산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고, 군은 건설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별도의 농촌개발과(활력과) 조직을 갖춘 경우는 도농복합시가 많고, 군 지역은 기획예산 부서나 미래전략과(단)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6) 시·군별 농촌 지역개발 총괄(전담)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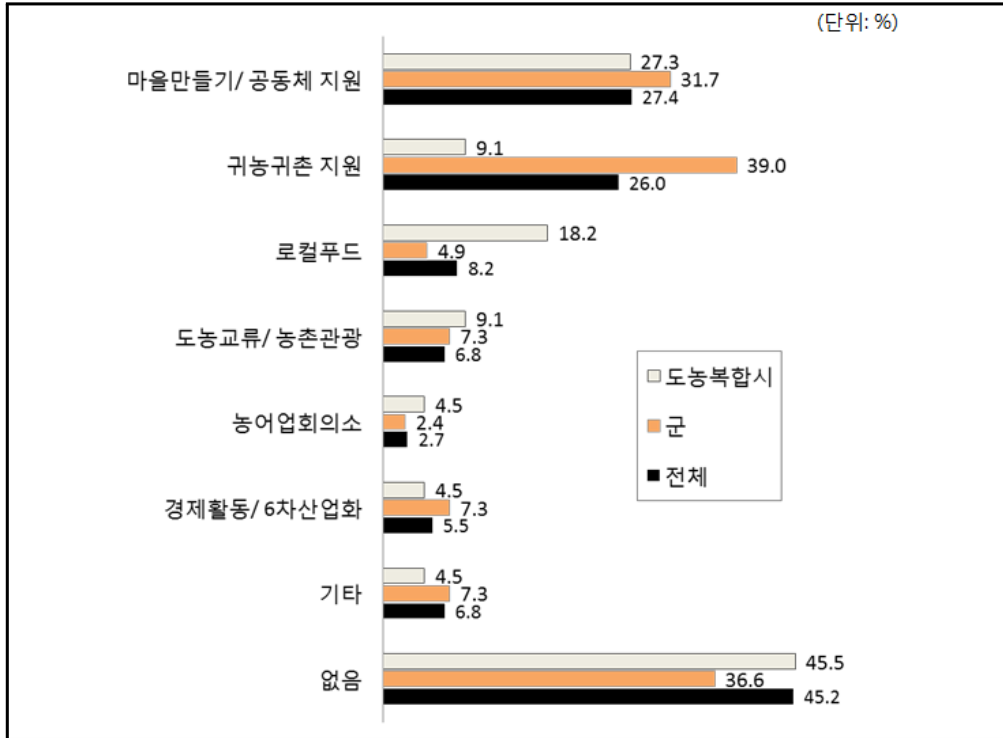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전 체<br>(n=104) |
|--------------|-----------------|-------------|----------------|
| 농정           | <b>37.5</b>     | 19.4        | 24.0           |
| 건설(도시, 교통)   | 12.5            | <b>21.0</b> | 17.3           |
| 기획예산         | 0.0             | <b>6.5</b>  | 3.8            |
| 농촌개발(활력, 진흥) | <b>9.4</b>      | 3.2         | 5.8            |
| 미래전략(과/단)    | 0.0             | <b>6.5</b>  | 4.8            |
| 기타           | 6.3             | 6.5         | 5.8            |
| 없음/무응답       | 34.4            | 37.1        | 38.5           |
| 합 계          | 100             | 100.0       | 100.0          |

주: 농촌 지역개발 총괄 조직으로 시·군 공무원이 응답한 결과를 '과' 단위로 분류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시·군 담당자 응답 결과에 의하면, 농촌 지역개발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 비율은 54.8%인 것으로 집계됨.
- 단, 이들 중 상당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로컬푸드지원센터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농촌 지역개발 분야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지는 않음.

-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지원 기능으로 한정할 경우 중간지원조직 구성 시·군 비율은 약 27.4%인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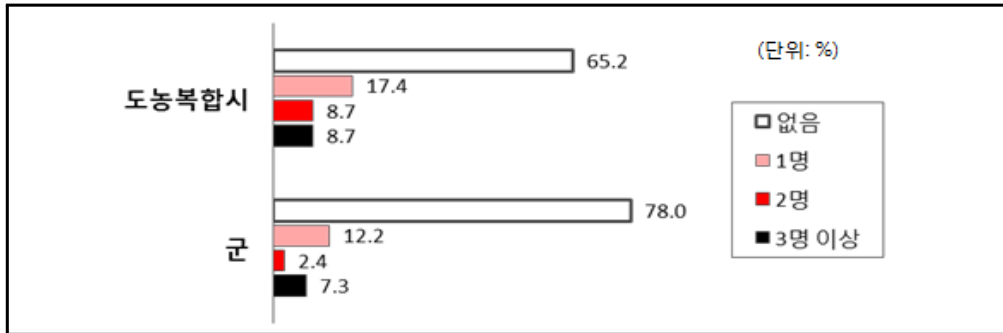


주: 시·군별로 복수 응답자가 있을 경우 하나의 대표 결과만 취하여 집계(104명 응답 결과 중 복수 응답을 제외한 73개 시·군 집계 결과)  
 자료: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상황

- 농촌 지역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 중인 지자체 비율은 23.6%로 집계되었음(중복 응답을 제외한 72개 시·군 중 17개 시·군).
- 도농복합시가 34.8%로서 더 높은 활용 비율을 기록하였고, 군 지역은 22.0%에서 지역개발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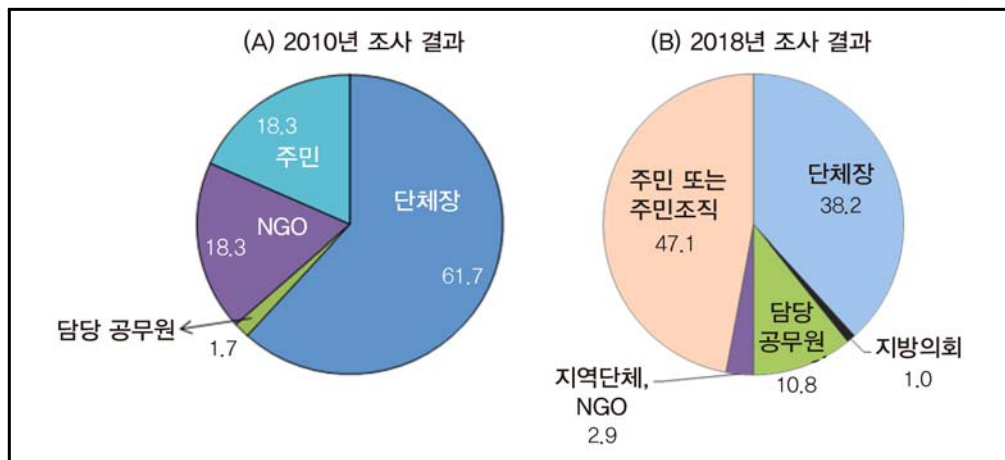


주: 시·군별로 복수 응답자가 있을 경우 하나의 대표 결과만 취하여 집계(104명 응답 결과 중 복수 응답을 제외한 72개 시·군 집계 결과)  
 자료: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그림 4-2> 시·군의 지역개발 전문직 활용 현황

-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를 파악한 결과, 주민 또는 주민조직을 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체장(38.2%), 지자체 공무원(10.8%)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 이는 동일 내용으로 2010년에 조사한 결과(송미령 외, 2010)와 대조를 보이는데, 당시에는 단체장을 답한 비율이 61.7%로서 2018년 집계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된 2010년 이후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과정이 확대되어왔음을 시사함.
  
-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응답 결과는 지자체 유형 및 업무 영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도농복합시에서는 주민이나 주민 조직을 답한 비율이 59.4%인 반면, 군 지역은 단체장을 답한 비율이 53.2%로 나타나고 있음.
  - 업무 분야별로는 농촌개발 담당자의 경우 주민 및 주민조직 응답 비율이 58.2%였으며, 농정과 기획예산 분야 응답자는 단체장을 답한 비율이 각각 61.1%와 64.7%를 기록함.
  - 농촌 지역개발 분야의 대표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중앙 차원의 지침에 입각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 바,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 같은 특정 주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시사함.

단위: %



자료: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및 송미령 외(2010).

<그림 4-3>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

(표 4-7) 시·군 지역개발사업 결정 시 영향력 있는 주체

단위: %

| 구 분       | 지자체 유형 간 비교  |             | 업무 영역 간 비교  |             |             | 전 체 (n=102) |
|-----------|--------------|-------------|-------------|-------------|-------------|-------------|
|           | 도농복합시 (n=32) | 군 (n=62)    | 농촌개발 (n=55) | 농정 (n=18)   | 기획예산 (n=17) |             |
| 단체장       | 9.4          | <b>53.2</b> | 21.8        | <b>61.1</b> | <b>64.7</b> | 38.2        |
| 지방의회      | 3.1          | 0.0         | 1.8         | 0.0         | 0.0         | 1.0         |
| 담당 공무원    | <b>21.9</b>  | 6.5         | 14.5        | 11.1        | 0.0         | 10.8        |
| 지역단체, NGO | 6.3          | 1.6         | 3.6         | 0.0         | 5.9         | 2.9         |
| 주민, 주민조직  | <b>59.4</b>  | 38.7        | <b>58.2</b> | 27.8        | 29.4        | 47.1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영역에 따라 구별되는 결과를 나타냄.
  - 농촌개발 분야 담당자들은 농촌발전계획에 입각하거나 현장포럼 및 주민 수요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음.
  - 농정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획예산 분야 담당자들 역시 더욱 높은 비율로 그와 같이 응답함.

- 한편 전문가 집단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4-8)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 방식

단위: %

| 구 분                       | 공무원 업무 구분      |              |                | 전문가<br>(n=50) |
|---------------------------|----------------|--------------|----------------|---------------|
|                           | 농촌개발<br>(n=54) | 농정<br>(n=18) | 기획예산<br>(n=17) |               |
| 농촌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에 관해 결정    | <b>33.3</b>    | <b>22.2</b>  | 5.9            | 2.0           |
|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별 의사결정   | 16.7           | <b>38.9</b>  | <b>58.8</b>    | <b>70.0</b>   |
| 단체장, 지역유지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결정 | 7.4            | 11.1         | 11.8           | 24.0          |
|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 대의기구 심의로 결정  | 14.8           | <b>22.2</b>  | 5.9            | 0.0           |
| 현장포럼, 주민 수요 기초로 사업 추진 결정  | <b>27.8</b>    | 5.6          | 17.6           | 2.0           |
| 기타                        | 0.0            | 0.0          | 0.0            | 2.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처럼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의사결정은 업무 성격이나 부서 특성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역개발 추진체계 작동 양상이 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임.
  -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 중인 지자체에서는 농촌발전계획에 입각하거나 위원회·협의체·대의기구 심의로 결정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중간지원조직이 없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지침 또는 단체장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9) 지역개발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 의사결정 방식

단위: %

| 구 분                       | 중간지원조직       |              | 지역개발 전문직     |              |
|---------------------------|--------------|--------------|--------------|--------------|
|                           | 있다<br>(n=53) | 없다<br>(n=48) | 있다<br>(n=23) | 없다<br>(n=78) |
| 농촌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에 관해 결정    | <u>30.2</u>  | 18.8         | <u>30.4</u>  | 23.1         |
|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별 의사결정   | 18.9         | <u>37.5</u>  | 21.7         | <u>29.5</u>  |
| 단체장, 지역유지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결정 | 5.7          | <u>16.7</u>  | 0.0          | <u>14.1</u>  |
|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 대의기구 심의로 결정  | <u>20.8</u>  | 6.3          | <u>21.7</u>  | 11.5         |
| 현장포럼, 주민 수요 기초로 사업 추진 결정  | 24.5         | 20.8         | 26.1         | 21.8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이후 농촌의 변화

- 포괄보조사업 실시 이후의 변화된 점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도 담당자보다는 시·군 담당자에서 그러한 응답 비율이 높음.
  - 업무 영역별로는 농촌개발 분야는 ‘시·군 가용예산 증가’, 농정 분야는 ‘주민 소득 기회 증대’, 기획예산 분야는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답한 비율이 타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도 응답자의 경우 ‘리더나 민간조직 등 현장 주체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주민 참여 기회 증대’에 이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는데, 시·군 담당자들의 응답 결과와는 차이를 보임.
  - 전체적으로 ‘공무원 기획 역량 제고’ 응답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의 경우도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농촌 활성화 주체 증가, 공공시설 및 인프라 개선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
  - 반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지자체의 가용 예산 증대, 공무원의 기획 역량 제고 등의 경우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더 높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률도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후 지역의 변화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             |             | 도 담당자 (n=17) |
|------------------------|-------------|-------------|-------------|--------------|
|                        | 농촌개발 (n=54) | 농정 (n=18)   | 기획예산 (n=17) |              |
| 담당 공무원의 사업 기획 역량 제고    | 7.3         | 5.7         | 3.0         | -            |
| 시·군의 가용예산 규모 증가        | <u>14.7</u> | 5.7         | 9.1         | <u>15.2</u>  |
| 관련 사업 간 연계로 효율적 예산 사용  | 8.3         | 8.6         | 12.1        | 12.1         |
| 주민의 농촌개발사업 참여 기회 증대    | <u>27.5</u> | <u>31.4</u> | <u>27.3</u> | <u>24.2</u>  |
| 리더, 민간조직 등 농촌 현장 주체 증가 | 13.8        | 11.4        | 12.1        | <u>21.2</u>  |
| 농촌의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22.9        | 28.6        | <u>30.3</u> | 24.2         |
|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 증가       | -           | <u>8.6</u>  | 3.0         | 3.0          |
|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음           | 5.5         | -           | 3.0         | -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1, 2순위 응답 결과 집계  
 자료: 시·군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 4-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후 변화 (전문가 응답)

단위: %

| 구 분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담당 공무원의 사업 기획 역량 제고     | 4.0        | 42.0        | 32.0 | <u>20.0</u> | 2.0        | 100.0 |
| 지역개발을 위한 시·군 가용예산 증가    | 2.0        | 46.0        | 28.0 | <u>24.0</u> | 0.0        | 100.0 |
| 관련 사업 연계 추진으로 효율적 예산 사용 | 4.2        | 18.8        | 45.8 | <u>25.0</u> | <u>6.3</u> | 100.0 |
| 주민들의 농촌개발사업 참여 기회 확대    | <u>6.1</u> | <u>57.1</u> | 28.6 | 8.2         | 0.0        | 100.0 |
| 리더, 민간조직 등 농촌의 활동 주체 증가 | <u>6.0</u> | <u>64.0</u> | 28.0 | 2.0         | 0.0        | 100.0 |
| 농촌의 각종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확충  | 4.0        | <u>70.0</u> | 20.0 | 6.0         | 0.0        | 100.0 |
|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 증대        | 0.0        | 32.7        | 51.0 | 14.3        | 2.0        | 100.0 |

주: 전문가 n=50명, 일부 무응답 제외  
 자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지자체의 지역개발 추진체계 특성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후 변화에 대한 평가 내용에서 차이를 보임.
  - (표 4-12)에 나타나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 중인 시·군에서는 ‘농촌 현장 주체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대로 그 같은 추진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군은 ‘인프라 개선·확충’을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도 더 높게 집계됨.

(표 4-12) 지역개발 추진기반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효과

단위: %

| 구 분                    | 중간지원조직       |              | 지역개발 전문직     |              |
|------------------------|--------------|--------------|--------------|--------------|
|                        | 있다<br>(n=54) | 없다<br>(n=48) | 있다<br>(n=23) | 없다<br>(n=79) |
| 담당 공무원의 사업 기획 역량 제고    | 7.5          | 3.2          | 4.3          | 5.8          |
| 시·군의 가용예산 규모 증가        | 10.3         | 14.9         | 10.9         | 12.9         |
| 관련 사업 간 연계로 효율적 예산 사용  | 10.3         | 7.4          | 13.0         | 7.7          |
| 주민의 농촌개발사업 참여 기회 증대    | <b>25.2</b>  | <b>29.8</b>  | <b>23.9</b>  | <b>28.4</b>  |
| 리더, 민간조직 등 농촌 현장 주체 증가 | <b>17.8</b>  | 6.4          | <b>21.7</b>  | 9.7          |
| 농촌의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24.3         | <b>28.7</b>  | 21.7         | <b>27.7</b>  |
|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 증가       | 2.8          | 1.1          | 4.3          | 1.3          |
|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음           | 1.9          | <b>8.5</b>   | 0.0          | <b>6.5</b>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1, 2순위 응답 결과 집계  
 자료: 시·군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최근 개편 내용 평가

- 2018년 이루어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지자체 자율성 확대’, ‘농촌다움 복원 등 새로운 영역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됨(표 4-13).
  - 부정적 의견의 경우, 도농복합시와 군 담당자들은 ‘이전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도 담당자들은 ‘중앙정부 역할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표 4-13)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사항에 대한 평가

단위: %

| 구 분                         | 지자체 담당자         |             |             | 전문가<br>(n=50) |
|-----------------------------|-----------------|-------------|-------------|---------------|
|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도<br>(n=17) |               |
| 사업 칸막이를 없애 지자체 자율성 확대 예상    | 25.0            | 19.4        | 35.3        | 30.0          |
| 이전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서 영향 적을 것   | 37.5            | 27.4        | 5.9         | 28.0          |
|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로 포괄보조 취지에 배치    | 3.1             | 14.5        | 23.5        | 12.0          |
| 농촌다움 복원 등 신규 영역 포함, 바람직한 개편 | 31.3            | 35.5        | 35.3        | 28.0          |
| 기타                          | 3.1             | 3.2         | -           | 2.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군 담당자 업무 영역에 따라 개편 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차이를 보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개발 분야 응답자는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긍정적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동시에 ‘중앙정부 역할 강화로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응답 비율도 높음.
- 농정 분야 응답자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포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4)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업무 영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업무 구분  |              |                |
|-----------------------------|----------------|--------------|----------------|
|                             | 농촌개발<br>(n=55) | 농정<br>(n=18) | 기획예산<br>(n=17) |
| 사업 칸막이를 없애 지자체 자율성 확대 예상    | 23.6           | 16.7         | 17.6           |
| 이전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서 영향 적을 것   | <b>32.7</b>    | 27.8         | 29.4           |
|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로 포괄보조 취지에 배치    | 9.1            | 5.6          | 23.5           |
| 농촌다움 복원 등 신규 영역 포함, 바람직한 개편 | 30.9           | <b>44.4</b>  | 29.4           |
| 기타                          | 3.6            | 5.6          | -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향후 개편 방향

- 농촌 중심지 대상 지역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군 지역 공무원 및 전문가는 ‘수위 중심지와 배후 농촌 연계 사업’을 가장 우선하게 응답하였고, 도농복합시 공무원은 ‘모든 읍·면 소재지 대상 기능 정비’를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함(표 4-15).
  - 전문가들 중 18.0%는 ‘2~4개 면이 포함된 소생활권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는 해당 항목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4-15) 농촌 중심지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             | 전문가<br>(n=50) |
|---------------------------------|-----------------|-------------|---------------|
|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
| 시·군청 소재지 등 수위 중심지 자체를 더욱 육성     | 15.6            | 16.1        | 4.0           |
| 수위 중심지와 배후 농촌 연계 사업을 중점 추진      | 25.0            | <b>33.9</b> | <b>38.0</b>   |
| 2~4개 면이 포함된 소생활권 중심지 사업 중점 추진   | 6.3             | 11.3        | 18.0          |
| 거점 읍·면이 아닌 모든 읍·면 소재지 기능 재정비 추진 | <b>34.4</b>     | 25.8        | 26.0          |
| 중심지 사업은 더 이상 추진 않고 다른 신규 사업 발굴  | 12.5            | 12.9        | 10.0          |
| 기타                              | 6.3             | 0.0         | 4.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놓고는 전문가와 시 및 군 지자체 담당자 각각의 응답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표 4-16).
  - 전문가들의 경우 ‘복수 마을들을 묶어 새로운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응답 비율이 31.8%로서 시·군 담당자 응답 결과(도농복합시 12.5%, 군 6.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전문가 집단과 비교해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일부 마을을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비율이 특히 높음.
  - 군 응답자들은 ‘최대한 많은 마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4-17)의 업무 영역별 비교 결과를 보면, 농촌개발 담당자는 선별적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며, 농정 분야 담당자는 복수 마을을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육성하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6)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             | 전문가<br>(n=50) |
|-------------------------------|-----------------|-------------|---------------|
|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
| 사업 의지, 역량 있는 마을에 선별적으로 사업 추진  | <b>71.9</b>     | <b>59.7</b> | <b>38.0</b>   |
| 최대한 많은 마을에 대해 마을개발사업을 지속 확대   | 9.4             | <b>21.0</b> | 16.0          |
| 복수 마을을 묶어 새로운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 추진 | 12.5            | 6.5         | <b>32.0</b>   |
|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개발사업 제한  | 6.3             | 9.7         | 4.0           |
| 기타                            | 0.0             | 3.2         | 10.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 4-17) 농촌 마을개발사업 방향(업무 영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업무 구분  |              |                |
|-------------------------------|----------------|--------------|----------------|
|                               | 농촌개발<br>(n=55) | 농정<br>(n=18) | 기획예산<br>(n=17) |
| 사업 의지, 역량 있는 마을에 선별적으로 사업 추진  | <b>72.7</b>    | 50.0         | 58.8           |
| 최대한 많은 마을에 대해 마을개발사업을 지속 확대   | <b>18.2</b>    | 5.6          | 17.6           |
| 복수 마을을 묶어 새로운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 추진 | 0.0            | <b>27.8</b>  | 17.6           |
|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개발사업 제한  | 7.3            | 11.1         | 5.9            |
| 기타                            | 1.8            | 5.6          | 0.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수준보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답한 경우가 많았음(표 4-18).

- 또한 지자체 응답자들은 전문가에 비해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답한 비율이 높음.
- 지자체 유형별로 보면, 도농복합시는 농촌다움 복원, 군 지역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8) 향후 확대 추진이 필요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

단위: %

| 구 분         | 지자체 담당자         |             | 전문가<br>(n=50) |
|-------------|-----------------|-------------|---------------|
|             | 도농복합시<br>(n=32) | 군<br>(n=62) |               |
| 농촌 중심지 활성화  | 9.4             | 11.3        | 18.0          |
| 창조적 마을 만들기  | <u>28.1</u>     | <u>27.4</u> | 10.0          |
| 시·군 역량강화    | 12.5            | 16.1        | 18.0          |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u>21.9</u>     | <u>19.4</u> | 4.0           |
| 농촌다움 복원     | <u>21.9</u>     | 12.9        | 18.0          |
| 농촌 신활력 플러스  | 6.3             | 11.3        | <u>30.0</u>   |
| 없다          | 0.0             | 1.6         | 2.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표 4-19)와 같이 지역개발 추진기반을 기준으로 지자체를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 중인 시·군은 농촌다움 복원사업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러한 기반을 갖추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답한 비율이 높음.
  -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같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업일수록 지역의 일정한 역량 기반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표 4-20)과 같이 지자체 담당자 업무 영역에 따라서도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확대 수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농촌개발 담당자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한편 농정 분야 담당자의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및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해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함.

- 기획예산 분야 담당자는 시·군 역량강화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남.

(표 4-19) 지역개발 추진기반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요

단위: %

| 구 분         | 중간지원조직       |              | 지역개발 전문직     |              |
|-------------|--------------|--------------|--------------|--------------|
|             | 있다<br>(n=54) | 없다<br>(n=48) | 있다<br>(n=23) | 없다<br>(n=79) |
| 농촌 중심지 활성화  | 14.8         | 6.3          | 8.7          | 11.4         |
| 창조적 마을 만들기  | <b>25.9</b>  | <b>29.2</b>  | <b>34.8</b>  | <b>25.3</b>  |
| 시·군 역량강화    | 14.8         | 14.6         | 17.4         | 13.9         |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9.3          | <b>33.3</b>  | 4.3          | <b>25.3</b>  |
| 농촌다움 복원     | <b>24.1</b>  | 4.2          | <b>30.4</b>  | 10.1         |
| 농촌 신활력 플러스  | 9.3          | 12.5         | 4.3          | 12.7         |
| 없다          | 1.9          | -            | -            | 1.3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에 대한 1, 2 순위 응답 결과 집계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 4-20)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요 (업무 영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업무 구분  |              |                |
|-------------|----------------|--------------|----------------|
|             | 농촌개발<br>(n=55) | 농정<br>(n=18) | 기획예산<br>(n=17) |
| 농촌 중심지 활성화  | 12.7           | 5.6          | 17.6           |
| 창조적 마을 만들기  | <b>38.2</b>    | 22.2         | 11.8           |
| 시·군 역량강화    | 12.7           | 5.6          | <b>29.4</b>    |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18.2           | <b>33.3</b>  | 5.9            |
| 농촌다움 복원     | 14.5           | 22.2         | 17.6           |
| 농촌 신활력 플러스  | 1.8            | 11.1         | <b>17.6</b>    |
| 없다          | 1.8            | -            | -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7.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변화와 지역의 준비 정도

- 최근 논의되는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표 4-21).
  - 시·군 응답자의 경우 재정분권이 바람직한 방향이어서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도 담당자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sup>14)</sup>
  - 다른 한편 지역 여건상 재정분권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응답 비율 역시 시·군이 도보다 높게 집계됨.
  - 전문가들의 경우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40.9%로 가장 높지만, 방향은 맞으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2위로써 지자체 담당자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함.

(표 4-21) 재정 분권 강화 기조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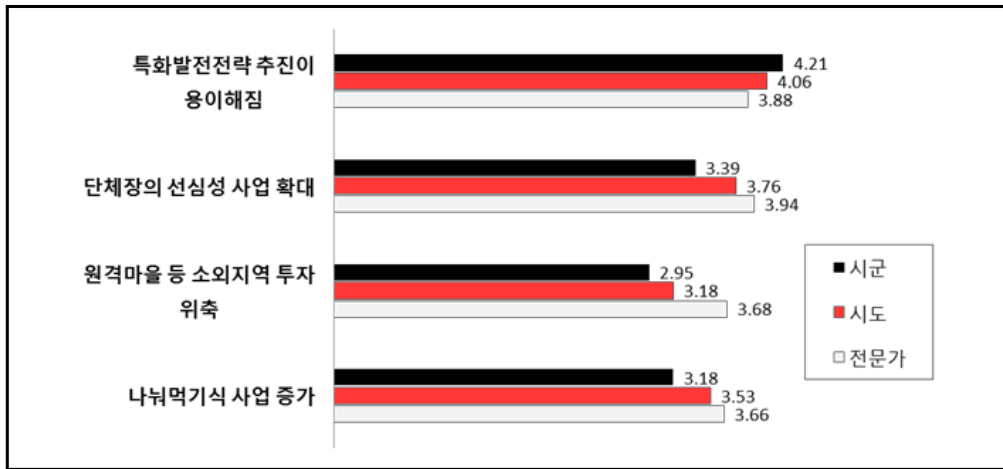
| 구 분                               | 지자체 담당자        |             | 전문가<br>(n=50) |
|-----------------------------------|----------------|-------------|---------------|
|                                   | 시·군<br>(n=101) | 도<br>(n=17) |               |
| 시대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바로 시행 필요    | <b>65.3</b>    | <b>58.8</b> | 40.0          |
| 필요한 방향이나 지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 20.8           | 11.8        | <b>32.0</b>   |
| 지방재정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보조사업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음 | 10.9           | 23.5        | 18.0          |
| 현 수준 이상의 지방 재정 확대는 불필요            | 1.0            | 5.9         | 2.0           |
| 기타                                | 2.0            | -           | 8.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재정분권 확대 이후 향후 농촌에서 예상되는 여러 변화를 5점 척도 (1: 낮음 ↔ 5: 높음)로 질문한 결과 <그림 4-4>와 같이 대체로 전문가보다 지자체 공무원이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중에서도 특히 도보다는 시·군 담당자들이 분권 확대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점수가 집계됨.

14) 본 문항에 대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담당자의 답변 결과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설명함.

-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발전이 용이해진다’는 데 대해 시·군 담당자들은 평균 4.2점, 도 담당자들은 4.1점으로 전문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나눠먹기식 사업 증가’나 ‘소외지역 투자 위축’, ‘선심성 사업 확대’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시·군 담당자들은 3점대 전후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선심성 사업 확대’가 3.9점을 기록하는 등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재정 분권 확대의 부정적 측면을 좀 더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 5점 척도 평균값임(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 5: 매우 그렇다)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그림 4-4> 재정 분권 강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 지방분권 확대 이후 사업 기획과 계획 수립, 사업 실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일련의 지역개발사업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 주체별 역량 수준을 점수화하여 집계한 결과, 응답자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인식을 나타냄(표 4-22).
  - 전문가들은 농촌 주민과 시·군 행정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우 각기 자신이 속한 행정조직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농촌 주민 및 리더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시·군 응답자들은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 활동가 집단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서, 기초 지자체 수준에 이룰수록 행정조직을 제외한 지역 내 민간 주체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눈에 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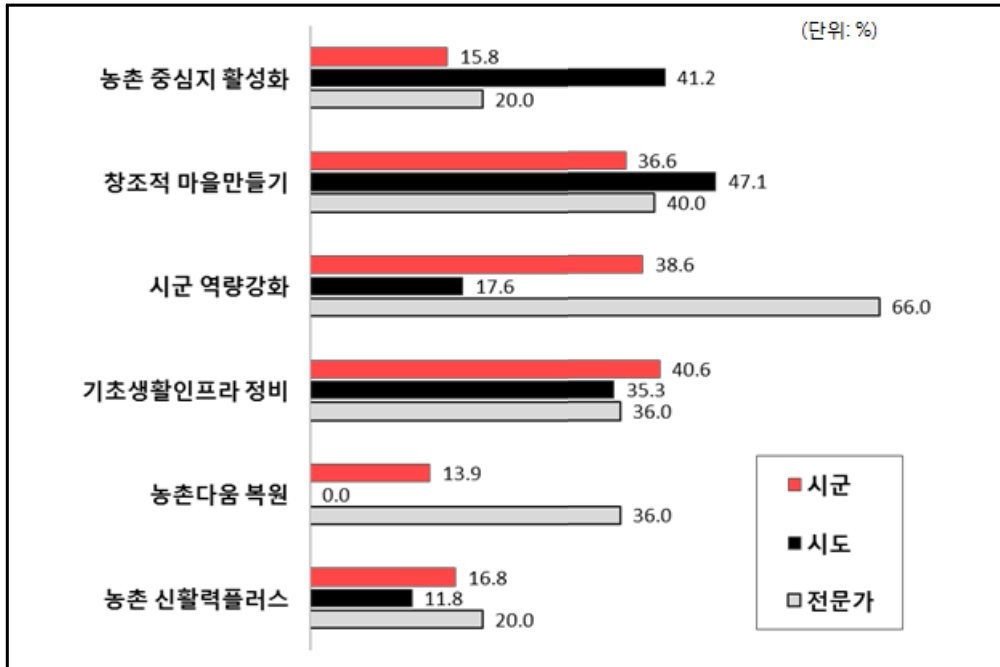
(표 4-22) 지방 분권에 대비한 지역 주체별 역량 수준값

| 구 분 |               | 지자체 담당자     |             |             | 전문가         |
|-----|---------------|-------------|-------------|-------------|-------------|
|     |               | 도농복합시       | 군           | 도           |             |
| 주체  | 시·도 행정조직      | 4.30        | 4.77        | 5.71        | 4.22        |
|     | 시·군 행정조직      | 4.94        | 5.05        | 4.65        | <b>3.63</b> |
| 구분  | 농촌 주민 및 리더    | <b>4.16</b> | <b>3.98</b> | <b>4.06</b> | 3.68        |
|     | 중간지원조직, 지역활동가 | <b>4.13</b> | <b>4.13</b> | 4.82        | 4.52        |
|     | 컨설팅회사, 지역 대학  | 4.68        | 4.51        | 4.71        | 4.28        |

주: 각각의 역량 수준을 7점 척도로 답한 결과의 평균값(1: 낮음, 4: 보통, 7: 높음)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8. 분권화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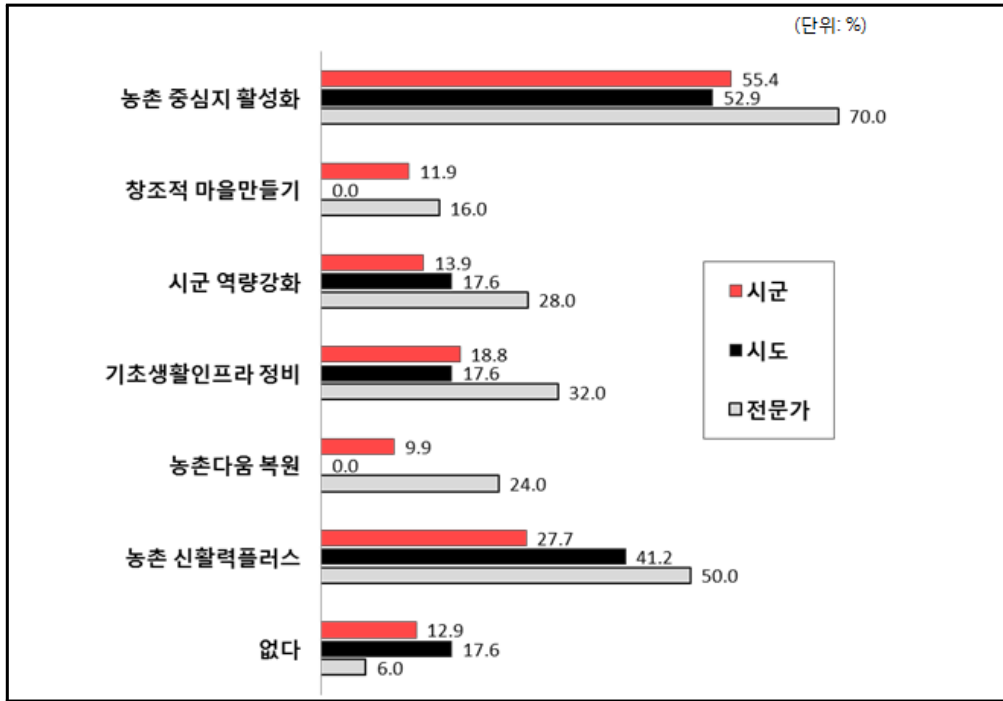
- 분권 확대 이후 현행 농촌 지역개발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 중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 4-5>에서 제시함.
  - 사업별 집계 결과, 전문가들은 지방 이양 필요 사업으로 시·군 역량 강화 및 농촌다움 복원 사업에 대해 타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지자체의 경우 시·군 응답자들은 도 응답자에 비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답한 비율이 높았고, 도 담당자들의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이양을 더 많이 응답함.
  - 공무원과 전문가 공통적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나, 향후에도 이 사업에 중앙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서 각 사업별로 응답자 기준 답변 비율을 집계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그림 4-5> 지방에 우선 이양할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

- 반대로 지방분권 확대 이후에도 모니터링, 평가 등에서 지속적인 중앙정부 역할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집계한 결과를 <그림 4-6>에서 보여주고 있음.
-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와 시·군 및 도 공무원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집단의 경우 농촌 신활력 플러스에 대해서도 50.0%가 중앙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해 모든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이외에는 모두 20% 미만으로 낮은 비율로 응답함.
- 전문가 집단일수록 분권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농촌 지역개발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서 각 사업별로 응답자 기준 답변 비율을 집계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림 4-6> 중앙정부 역할이 계속 요구되는 사업

## 9. 농촌 공동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정책 방향

- 한편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개발 투자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 (표 4-23)에서 제시함.
  - 도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자는 의견은 극히 소수이며, 배후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농촌에 대한 투자 방향에서는 응답자 그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시·군 기획예산 담당자와 도 공무원은 중심지와 거점마을 육성을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정 담당자의 경우 배후 농촌 마을 정주 여건 개선 투자를 다수가 답하였으며, 농촌개발 담당자는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3) 농촌 공동화 심화 상황에서 향후 공간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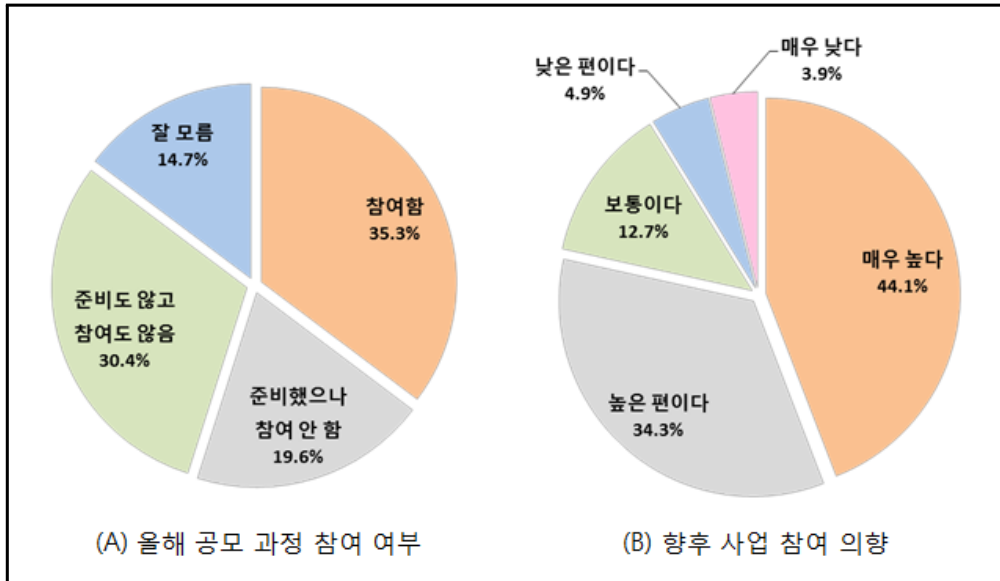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시·군 담당자      |             |              | 도 담당자 (n=16) | 전문가 (n=50)  |
|--------------------------|--------------|-------------|--------------|--------------|-------------|
|                          | 농촌 개발 (n=54) | 농정 (n=17)   | 기획 예산 (n=17) |              |             |
| 농촌보다는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에 투자 집중 | 0.0          | 0.0         | 0.0          | 0.0          | 2.0         |
| 농촌에 투자하되 중심지와 거점마을 중점 육성 | 31.5         | 35.3        | <b>41.2</b>  | <b>75.0</b>  | <b>40.0</b> |
| 배후 농촌 마을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 지속 | 33.3         | <b>52.9</b> | 29.4         | 25.0         | 32.0        |
|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가 알아서 대응 | <b>33.3</b>  | 11.8        | 29.4         | 0.0          | 16.0        |
| 기타                       | 1.9          | 0.0         | 0.0          | 0.0          | 10.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0.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수요

- <그림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한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 과정에는 약 35.3%의 시·군에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준비를 했으나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19.6%로 나타났으며, 준비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비율은 30.4%를 기록함.
  -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약 78.4%로 나타나 일선 시·군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매우 높은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줌.
  - 농촌 지역개발 추진기반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비교한 결과가 (표 4-24)에 제시되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있거나 지역개발 전문직을 활용 중인 시·군일수록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공모 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높음.
  -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도입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자료: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그림 4-7>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여부 및 향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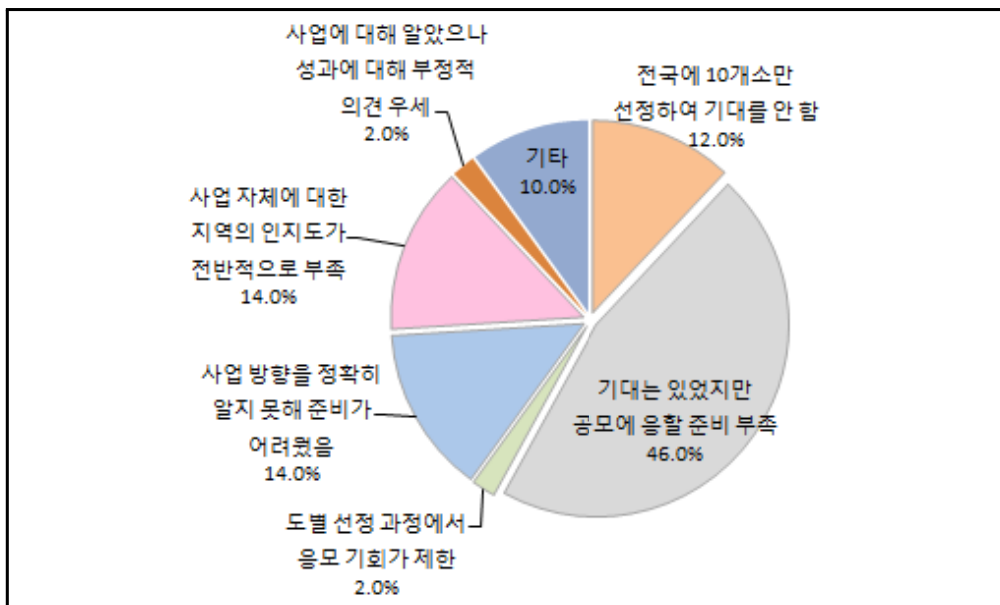
(표 4-24) 시·군 여건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현황

단위: %

| 구 분               | 중간지원조직 유무    |              | 지역개발 전문직 유무  |              |
|-------------------|--------------|--------------|--------------|--------------|
|                   | 있다<br>(n=54) | 없다<br>(n=48) | 있다<br>(n=23) | 없다<br>(n=79) |
| 참여하였다             | <u>42.6</u>  | 27.1         | <u>47.8</u>  | 31.6         |
| 준비를 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 24.1         | 14.6         | 13.0         | 21.5         |
| 준비도 않고 참여도 하지 않았다 | 18.5         | <u>43.8</u>  | 21.7         | <u>32.9</u>  |
| 잘 모르겠다            | 14.8         | 14.6         | 17.4         | 13.9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1, 2순위 응답 결과 집계  
 자료: 시·군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018년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집계한 결과 <그림 4-8>에서와 같이 지역의 준비 부족을 응답한 비율(46%)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정부의 사업 방향을 알지 못했거나(14%)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다(14%)는 응답 비율을 합산하면 28%의 지자체가 효과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주: 올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준비를 했으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및 '준비도 않고 참여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유 조사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림 4-8>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현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농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신활력 플러스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대다수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모두 사업의 추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소수 의견에 머무름.
  - 특히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낙후도가 높은 시·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남.

(표 4-25) 향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확대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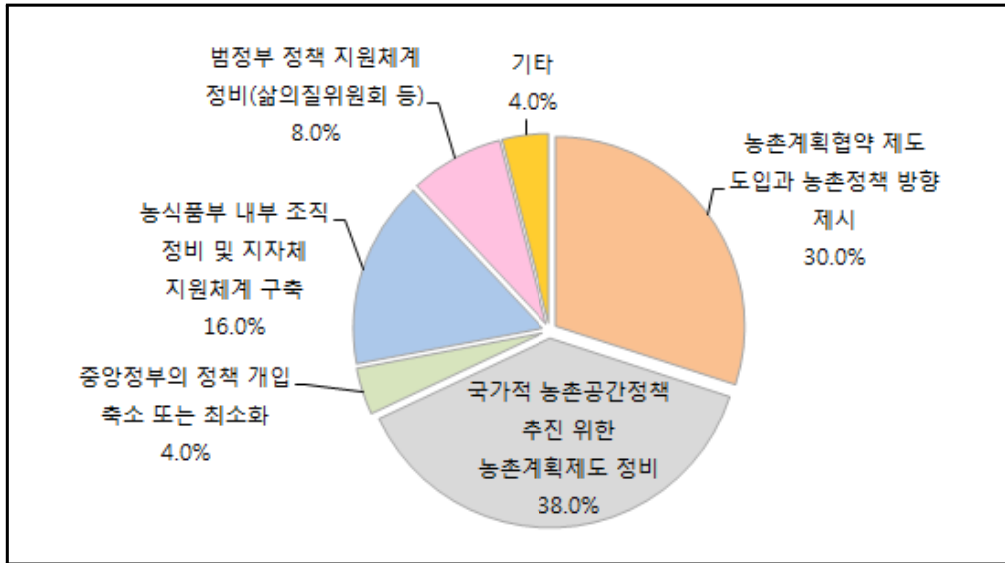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지자체 담당자        |             | 전문가<br>(n=50) |
|---------------------------------|----------------|-------------|---------------|
|                                 | 시·군<br>(n=101) | 도<br>(n=17) |               |
| 올해 선정된 곳 이외 추가 사업 확대 불필요        | 6.9            | -           | 8.0           |
| 향후에도 매년 올해 수준의 신규 사업 지속 추진      | 34.7           | 35.3        | <b>36.0</b>   |
| 낙후도 높은 시·군(ex: 하위 30%) 대상 사업 확대 | <b>50.5</b>    | <b>58.8</b> | <b>36.0</b>   |
| 일반농산어촌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시·군 확대      | 5.9            | 5.9         | 14.0          |
| 기타                              | 2.0            | -           | 6.0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및 도 공무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1. 분권 확대 이후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과제

-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농촌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가 <그림 4-9>에 제시됨.
  - 조사 결과 ‘국가적인 농촌 공간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계획제도 정비’를 응답한 비율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농촌정책 방향에 맞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농촌 계획협약 제도 도입’, ‘농식품부 조직 정비를 통한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집계됨.



자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림 4-9> 재정 분권 강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 재정분권 확대 이후 농촌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농촌 계획협약 제도에 대해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은 현재까지 높지 않은 상태임.
  - (표 4-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5.5%의 지자체 담당자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농촌개발 담당자가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계획협약 참여 의향은 기획예산 담당자 그룹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이 제도에 대한 일선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 분야에서 강한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으로 농촌 계획협약 제도가 설계된다면 다부문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됨.

(표 4-26) 농촌 계획협약 제도 인지도 및 참여 의향

단위: %

| 구 분                 |           | 시·군 담당자 업무 구분  |              |                |               |
|---------------------|-----------|----------------|--------------|----------------|---------------|
|                     |           | 농촌개발<br>(n=55) | 농정<br>(n=18) | 기획예산<br>(n=17) | 전체<br>(n=102) |
| 농촌<br>계획협약<br>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b>36.4</b>    | 0.0          | 23.5           | 25.5          |
|                     | 이름은 들어보았다 | 34.5           | 55.6         | 47.1           | 40.2          |
|                     | 잘 모른다     | 29.1           | 44.4         | 29.4           | 34.3          |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농촌<br>계획협약<br>참여 의향 | 매우 높다     | 16.4           | 5.6          | <b>17.6</b>    | 13.7          |
|                     | 높은 편이다    | 38.2           | 55.6         | <b>70.6</b>    | 46.1          |
|                     | 보통이다      | 34.5           | 33.3         | 11.8           | 31.4          |
|                     | 없는 편이다    | 5.5            | 5.6          | 0.0            | 4.9           |
|                     | 전혀 없다     | 5.5            | 0.0          | 0.0            | 3.9           |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농촌 계획협약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데, (표 4-27)에 제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참여 시·군을 확대하기에 앞서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군을 엄격히 선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견이 월등히 우세함.
  - 그리고 ‘타 부처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농식품부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협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기록함.

(표 4-27) 농촌 계획협약 제도 쟁점별 전문가 의견

단위: %

| 구 분                     | 농촌 계획협약 추진 방향                  | 응답 비율       |
|-------------------------|--------------------------------|-------------|
| 대상 시·군<br>선정 시<br>고려 기준 | 협약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충실한 시·군을 엄밀히 선별 | <b>70.0</b> |
|                         | 가급적 많은 시·군의 협약 참여에 우선권을 둠      | 16.0        |
|                         | 낙후도 높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협약 대상으로 함    | 14.0        |
|                         | 합 계                            | 100.0       |
| 계획협약<br>대상 사업<br>설정 원칙  | 높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핵심 사업 중심         | <b>40.0</b> |
|                         | 패키지화해서 지원할 농림사업들을 최대한 다수 발굴    | <b>36.0</b> |
|                         | 연계 지원할 다양한 부문의 타 부처 사업을 중점 발굴  | 24.0        |
|                         | 합 계                            | 100.0       |
| 협약 사항<br>결정 시<br>우선순위   | 주요 아젠다별 지자체 희망 사업 지원에 초점       | <b>52.1</b> |
|                         |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이행사항에 초점   | <b>47.9</b> |
|                         | 합 계                            | 100.0       |

자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제3절 시사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10년 도입된 이후 주민들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나 공공시설 개선 등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중간지원조직 운영,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개선 시도가 확인되며, 농촌 지역개발 관련 총괄 부서를 행정 조직에 두는 곳들도 일부 나타남.
  - 일부 지역에서 이런 노력들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 기획 역량 제고라든지 현장 활동 주체 육성 측면에서 지자체 간 상당한 편차가 확인됨.
  - 이는 농촌 활성화 성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낳을 수 있으며, 향후 재정 분권 확대에 따라 그 편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이후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다수 지자체들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제임.
  - 단순한 주민 참여 확산에 머물지 않고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민간 주체들을 양성하는 작업이 앞으로 요구됨.
  - 행정 조직 차원의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한 지자체들은 있지만, 지역 내 민간 주체들의 농촌 지역개발 역량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함.
  - 이러한 한계는 분권 이후 농촌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인바, 다양한 지역 주체 육성이 앞으로 당면한 농촌 지역개발 과제임.
  - 일선 지자체에서 앞으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나 농촌계획협약 제도 등의 설계 시에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 강화 이후 예산이 지방에 이관되더라도 지역개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은 계속해서 요구됨.
  - 포괄보조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지침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 분권 강화에 대해 다수 지자체 담당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 지방에서도 중앙정부 사업의 무조건적인 이양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지자체의 창의적인 기획 역량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지방에서 추진토록 하되, 중앙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사업(예: 농촌 신활력 플러스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추진 방안을 도출해야 함.
  
- 농촌의 과소화·공동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역개발 관련 공무원 다수는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거점 읍·면이나 중심마을뿐 아니라 기초거점이나 공동화가 진행되는 마을에 대해서도 어떤 식이든 정책 개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는 것이 일선 지자체의 인식임.

- 최근 제기되는 ‘지방소멸론’에 대한 해법이 농촌에 대한 정책 개입을 줄이고 도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일 수는 없다는 것을 시사함.
  
- 분권적 농촌 지역개발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새로운 공간계획제도를 형성하고 계획협약제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구됨.
  -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비전, 전략 등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의 존재 필요성이 중앙 및 지자체 공통적으로 요구됨.
  -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상당수가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이 소득 및 경제 다각화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확인됨.
  -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농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아닌 새로운 공간계획 수단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계획 실행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계획협약제도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제 5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을 위한  
FGI 주요 결과**



##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을 위한 FGI 주요 결과

### 제1절 개요

#### 가. FGI 조사 대상 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향후 정책발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FGI 조사를 위한 사례지역을 도 단위로 선정함.
  -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과 별도의 계정을 운용하는 제주도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 분포가 많은 강원도를 제외함.
  - 이에 따라 충청권, 경북권, 전라권에서 각각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를 선정하여 FGI 조사를 실시함.
  
- 해당 도의 지역개발 예산 담당자(예: 포괄보조금 예산 담당자), 관내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또는 기획 담당) 공무원, 농촌정책 전문가 등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함.
  - 충청북도: 도 예산담당관실 공무원, 증평군 미래전략과 공무원, 충북연구원 전문가, 충남대학교 전문가
  - 경상북도: 도 농축산유통국 농촌개발과 공무원, 영주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공무원, 대구경북연구원 전문가
  - 전라북도: 도 농축수산물국 농촌활력과 공무원, 진안군 전략산업과 마을공동체팀 공무원, 전북연구원 전문가

(표 5-1) FGI 실시 개요

| 구분     | 일시                           | 장소                         | 대상 지역 |     | FGI 대상 참석자   |
|--------|------------------------------|----------------------------|-------|-----|--|
|        |                              |                            | 도     | 시·군 |  |
| 1차 FGI | 2018년 8월 14일<br>10:00~13:00  | 오송<br>KREI<br>관측상황실<br>회의실 | 충청북도  | 증평군 | 도 예산담당관실 공무원,<br>증평군 미래전략과 공무원,<br>충북연구원 전문가,<br>충남대학교 전문가 |
| 2차 FGI | 2018년 9월 6일<br>12:00~16:00   | 오송<br>KREI<br>관측상황실<br>회의실 | 경상북도  | 영주시 | 도 농촌개발과 공무원,<br>영주시 건설과 공무원,<br>대구경북연구원 전문가                |
| 3차 FGI | 2018년 10월 24일<br>10:30~13:00 | 전북연구원<br>회의실               | 전라북도  | 진안군 | 도 농촌활력과 공무원,<br>진안군 전략산업과 공무원,<br>전북연구원 전문가                |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FGI 주요 내용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후 농촌지역개발 예산 및 사업 추진 변화의 대략적인 내용
- 지역 자체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실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조직에 대한 인식과 해당 지역의 실태
-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변화(개편)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책 수요 등

##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 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후 농촌지역개발 예산 및 사업 추진 변화

- 균특회계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증가도 하지 않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지역개발 예산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
  - 정부 세출 규모는 2010년(292조 8천억 원) 대비 2018년(428조 8천억 원)에 46.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균특회계 예산 규모는 제자리걸음으로 2018년 9조9천억 원 수준임(기획재정부, 2009; 기획재정부, 2017)
    - \* 연도별 균특회계 규모: 2010년 9조9000억 원, 2014년 9조4000억 원, 2015년 10조3000억 원, 2016년 10조 원, 2017년 9조8000억 원, 2018년 9조9000억 원 등으로 매년 10조 원 내외(권영섭 외, 2017)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자율편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구분 내에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균특회계 사업 추진은 미미한 상황임.
  - 도 자율편성 37개 정책군 안에서만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배분되며, 그 외에 다른 창의적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거의 없음(표 5-2).
  - 해당 37개 사업 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자는 것이 포괄보조금제도의 취지이지만, 대체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의 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상당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면서 복지 등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 예산의 감소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 \* 도의 경우 도지사의 의지가 예산 배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경우 도 포괄보조금에 대한 실·국 및 실·과별 사업수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후, 필요성 및 필요 시기 등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충북 5% 경제’ 공약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음.

(표 5-2)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현황

| 부처           | 세부사업명               | 보조율           | 예산 내역사업                |
|--------------|---------------------|---------------|------------------------|
| 고용부          | ① 사회적기업육성           | 70~75%        | ·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지원 등     |
| 국토부          | ② 대중교통 지원           | 70~90%        | ·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
|              | ③ 지역거점 조성지원         | 50~100%       |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
|              | ④ 주차환경개선지원          | 50%           | · 공영주차장건설지원            |
|              | ⑤ 공공형택시지원           | 50%           | · 공공형택시지원              |
|              | ⑥ 지방하천정비            | 50%           | · 지방하천정비               |
|              | 농식품부                |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50%                    |
| ⑧ 농업기반정비     |                     | 80%           | · 발기반 정비 등             |
|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 50%           | · 향토산업육성 등             |
| ⑩ 농촌형교통모델    |                     | 50%           | · 농촌교통지원               |
| 농진청          | ⑪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50%           |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
| 문체부          | ⑫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40%           | · 박물관, 문예회관 등          |
|              | ⑬ 관광자원 개발           | 50%           | · 관광지 개발 등             |
|              | ⑭ 체육진흥시설 지원         | 30%           | · 생활체육공원 등             |
|              | ⑮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 50%           |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
|              | ⑯ 산업단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50%           | · 산업단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              | ⑰ 지역문화행사지원          | 40~50%        | · 비엔날레지원, 종교문화행사지원 등   |
| 문화재청         | ⑱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50%           | · 지역문화유산 개발            |
| 복지부          | 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50~80%        |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
| 산림청          | ⑳ 산림경영자원 육성         | 80%           | · 임산물 수출촉진 등           |
|              | ㉑ 산림휴양 · 녹색공간조성     | 50%           | · 숲길 조성 · 관리 등         |
|              | ㉒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 70%           | · 임도시설                 |
| 산업부          | ㉓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50%           |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
| 새만금          | ㉔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100%          | ·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
| 여가부          | ㉕ 청소년시설 확충          | 30~88%        | · 청소년시설 확충             |
| 중기부          | ㉖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60%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
| 해수부          | ㉗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30~50%        | ·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
|              | ㉘ 어업기반정비            | 80%           | · 지방어항 등               |
|              | ㉙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50%           | · 연안정비 등               |
|              | ㉚ 수산물가공산업육성         | 30~50%        |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
|              | ㉛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50%           | · 수산물분석장비 구축 및 운영      |
| 행안부          | 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50%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              | ㉝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 50%           |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
| 환경부          | ㉞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70%           |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
|              | ㉟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50%           |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
|              | ㊱ 생태하천복원            | 50~70%        | · 생태하천 복원              |
|              | ㊲ 노후상수도정비           | 50~70%        | · 노후상수관망·정수장           |

주: ⑤, ⑥, ⑩, ⑰, ㉑, ㉚는 2019년 신규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도 자율편성 예산의 경우 관내 시·군 지역 중 농촌보다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시에는 도서관을 4개소 설치한 데 반해 단양은 1개소만 설치한 상황임.
  - 균특회계의 목적과 특성 상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특회계 예산마저 인구수를 반영하여 도-농간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임.
  -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구수를 반영한 지방교부세를 받아 시·군 재원의 40% 정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인도 자율편성의 지역 간 배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집행할 경우도 도-농 간 이중 차별을 초래하게 됨.
  
-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해온 시·군의 경우 최근 시·군 자율편성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시·군들은 사업 신청이 감소하고 있어 시·군 자율편성 예산도 줄어들고 있음. 경상북도의 시·군들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들을 먼저 수행하고 나머지 5억 원 규모의 마을 사업들만 남게 되어 최근 전반적인 시·군 자율편성사업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복신청을 배제하고 있으며, 읍·면정비사업(읍·면소재지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준공지역인 경우에만 중복신청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7a).
  
- 시·군 자율편성사업 중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사업 성격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 부족한 상황임.
  -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역량강화사업비가 짊돈으로 인식되어 실제 예산이 집행될 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관련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 상당한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더해,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확보하기 힘들어 사업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시·군도 적지 않음.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의 농식품부 소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음.
  - 이는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농식품부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나 시·군 자율편성사업의 복잡다기함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인함.

(표 5-3)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변화

| 구분        | 부처   | 2009년까지                    | 포괄보조사업명   | 예산편성사업  | 실제 부처 사업  |
|-----------|------|----------------------------|---|---|---|
| 시·도<br>자율 | 문화부  | 박물관, 등<br>문예회관 등<br>18개 사업 | 문화시설 확충<br>및 운영 사업                              | 공공도서관건립지원<br>등 16개 사업   | -   |
|           | 농식품부 | 도농교류활성<br>화 등 13개<br>사업    | 농어촌자원복합<br>산업화지원<br>사업/지역전략식<br>품산업<br>육성<br>사업 | 6차산업화 지원 등<br>10개 사업  | -   |
|           | 국토부  | 물류단지 지원<br>등 5개 사업         | 대중교통 지원<br>사업/주차환경개<br>선지원 사업                   | (대중교통)지역거점<br>기반시설 지원 등<br>7개 사업  | -   |
| 시·군<br>자율 | 농식품부 | 전원마을 등<br>15개 사업           | 일반농산어촌<br>개발 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br>지역소득증대,<br>지역경관개선,<br>지역역량강화 등<br>4개 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3개,<br>창조적마을만들기<br>7개, 시·군역량 2개,<br>기초생활인프라,<br>신활력 플러스 등<br>최소 14개 이상<br>사업 |
|           | 국토부  | 주거환경 개선<br>등 15개 사업        | 도시활력증진지<br>역 개발 사업                              | 경제기반형도시재생,<br>근린재생형(일반형),<br>근린재생형(중심시<br>가지형),<br>도시생활환경개선,<br>지역역량강화 등<br>5개 사업 | -   |
|           | 행안부  | 접경지역 등<br>15개 사업           | 특수상황지역<br>개발 사업                                 | 기초생활기반,<br>지역소득증대,<br>지역경관개선,<br>지역역량강화 등<br>4개 사업                                | -   |

주: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한 내용임.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2) 국토교통부(2017),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리 및 활성화 연구.

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자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설명자료’

([https://www.mois.go.kr/frt/a02/localGovernmentArticle.do?dicaryinoid=DICARY\\_000000002092](https://www.mois.go.kr/frt/a02/localGovernmentArticle.do?dicaryinoid=DICARY_000000002092) 검색일 2018.5.23.)

## 나. 지역 자체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실태

- 충청북도의 경우 도 자율편성 예산 중 5%를 별도로 떼어 도내 7개 낙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증평군의 경우 이러한 도 균형발전사업을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하늘정원(옥상)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도서관인 증평군립 도서관을 2014년에 건립하였음. 일반적인 도서관 시설 외에도 강좌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덕에 여러 학습공동체와 동아리 활동이 도서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김광선 외, 2017).
  - 그러나 다른 시·군의 경우 공무원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농업용수 개발 등 계속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음.



자료: (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young4047/221013080618> (검색일 2018.11.13.)  
 (우) 충청일보 2018.8.28.일자 증평군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는 도서관에서 힐링하자” 기사.

### <그림 5-1>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활용 사례: 증평군립도서관

- 전라북도는 별도의 동부권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 농업, 농촌 등의 영역을 정하여 이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이들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10년간 3000억 원 규모(1년에 300억, 시·군당 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계속사업임.

- 동부권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도에 배정된 균특예산을 재원을 활용
- 진안군의 경우 마이산을 중심으로 관광·식품산업 분야의 동부권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사업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 등급을 받아 2019년에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sup>15)</sup>
  - \* 진안군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2017년 한 해 매출액 194억 원 달성과 고용 창출 44명, 체험관광객 26만 5000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과소화대응 인력육성사업(농촌 소규모지역 활동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고령화, 과소화되고 있는 농촌의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sup>16)</sup>

- 농촌 소규모화 추세에 맞추어 읍·면형, 마을형, 농장형의 3가지 사업 유형을 발굴
- 읍·면형은 농촌 소규모화의 핵심적 원인인 읍·면의 생활, 경제, 문화, 소통 기능의 저하로 인한 삶의 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으로 소규모 읍·면지역에 사회복지, 문화기획, 주민교육, 인문학, 컴퓨터 전문가, 건축·설계,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살리면서 농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읍·면에 배치하는 것임. 현재 무주군 안성면에 10명을 선발해 배치했으며, 9개월 간 각각 200만 원 정도 활동비 및 기획사업비 지급
- 마을형은 고령화로 마을의 기본적인 공동체 운영조차 어려운 소규모 마을과 보조사업 완료 후 어려움을 겪는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전담 관리하는 형태임.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8개 시·군에 각각 2명씩 배치하였으며, 9개월 간 각각 200만원의 활동비 지급. 과소화된 마을만을 대상으로 1명 당 10개 마을을 담당
- 농장형은 귀농하여 영농,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일정기간 영농실습을 하면서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농촌 정착

15) 프레시안 2018.4.18.일자 기사 “진안군 동부권발전사업 추진 ‘탄력’: 인센티브 2억 5000만원 확보 - 전북 동부권발전사업 6개 시·군 중 A등급 획득”.

16) 전라북도 대상 FGI 조사 결과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eonjunews/220943120412>의 내용을 참고(네이버 블로그 검색일: 2018.11.14.).

을을 높이기 위한 협업농장형 프로그램임.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들은 9개월간 각각 80만 원의 영농활동비를 지원받게 됨. 2017년 부안군에서 ‘디딤돌청년협업농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 여 5명의 청년을 참여시켰음.

○ 경상북도는 2018년부터 도비 15억 원을 배정하여 경북형 ‘행복씨앗 마을사업’을 주민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임.

- 행복씨앗마을사업은 기존에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 타나지 않은 마을들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추가로 시행 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농촌마을재 생사업임.
- 공모를 통해 2018년 총 17개 마을이 선정되었음.
- 울진군 매화면의 경우 매화마을 해설사 육성, 바리스타 교육 및 요 리강습 등 주민역량강화를 기본으로 만화테마 열차카페, 역사관, 매 화나무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천만 원을 지 원받음.<sup>17)</sup>
- 안동시의 경우 맹개마을의 ‘선비순례길 문화쉼터’와 구담마을의 ‘어 게인 1980, 구담시장’ 두 개 마을사업이 선정되어 총 1억2천8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음. 전자는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 쉼터 제 공으로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후자는 낙동강변에 리버마켓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sup>18)</sup>



자료: 울진21(www.uljin21.com) 2018.8.7.일자 기사

### <그림 5-2> 울진군 매화면 매화마을의 행복씨앗마을 만화거리

17) 울진21 2018.8.7.일자 기사 “매화 만화거리 ‘행복씨앗마을사업’ 선정” 참조.

18)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gim1957/221330966448> 참조(검색일 2018.11.14.).

##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조직에 대한 인식과 지역의 실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시·군 단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관련 부서(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농업 관련 부서, 도시 관련 부서, 건설 관련 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전라북도의 경우 도에서는 포괄보조사업사업 총괄 부서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부서가 모두 농촌지역개발 관련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농업 관련 부서나 건설 또는 도시 관련 부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 또는 세부사업 담당 부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순창군만이 농촌개발 담당 부서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 총괄 업무와 대부분의 세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 외에 익산시는 농촌활력과, 정읍시는 지역공동체육성과, 그리고 완주군은 농업농촌식품과와 같이 농촌지역개발과 비교적 관련성이 높은 부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세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음. 첫째, 농촌지역개발이라는 공간개발의 관점보다는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만을 보고 담당 부서에 업무를 맡기거나, 둘째, 과 단위에서 농촌지역개발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팀 또는 계 수준에서 2~3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임.
  - 경상북도의 경우도 도 차원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세부사업 담당 업무를 모두 농촌개발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문경시만이 농촌지역개발 담당 부서(농촌개발과)가 동 사업이 총괄과 세부사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주로 농업 관련 부서, 도시 또는 건설 관련 부서에서 담당할 시 농촌의 특수성과 현실을 어느 정도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농촌지역개발이 공간적 또는 영역적 차원에서 통

합적 지역개발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즉, 세부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하고 추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보다는 파편화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표 5-4) 전라북도의 포괄보조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

| 구분   | 포괄보조사업총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총괄 | 농촌중심지    | 창조적마을    | 신규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인프라 |
|------|----------|--------------|----------|----------|----------|----------|---------|
| 전라북도 | 농촌정책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 군산시  | 기획예산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익산시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    | 미래농업과   |
| 정읍시  | 기획예산과    | 지역공동체육성과     | 지역공동체육성과 | 지역공동체육성과 | 건설과      | 지역공동체육성과 | 건설과     |
| 남원시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 김제시  | 기획감사실    | 건설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설과      | 농업정책과    | 건설과     |
| 완주군  | 농업농촌식품과  | 농업농촌식품과      | 도시개발과    | 농업농촌식품과  | 농업농촌식품과  | 농업농촌식품과  | 재난안전과   |
| 진안군  | 기획실      | 친환경농업과       | 건설교통과    | 전략산업과    | 건설교통과    | 전략산업과    | 건설교통과   |
| 무주군  | 농업소득과    | 농업소득과        |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 마을만들기사업소 | 마을만들기사업소 | 건설교통과   |
| 장수군  | 건설경제과    | 건설경제과        | 건설경제과    | 건설경제과    | 재무과      | 건설경제과    | 건설경제과   |
| 임실군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건설과      | 건설과      | 농업정책과    | 건설과     |
| 순창군  | 기획실      | 농촌개발과        | 농촌개발과    | 농촌개발과    | 농촌개발과    | 농촌개발과    | 농촌개발과   |
| 고창군  | 농업진흥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 부안군  |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 농업경영과    | 건설교통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b).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조직 이외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읍·면 단위별로 관내 마을들을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과소화 및 고령화된 마을의 경우 정부사업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역량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작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참고: 「도시재생법」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규정>).

**<참고: 「도시재생법」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규정>**

-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자료: 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중간지원조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상주시와 같은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군에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경북대학교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센터는 공모사업을 위한 응모조건 갖추기의 측면에서 역량강화 및 현장포럼 위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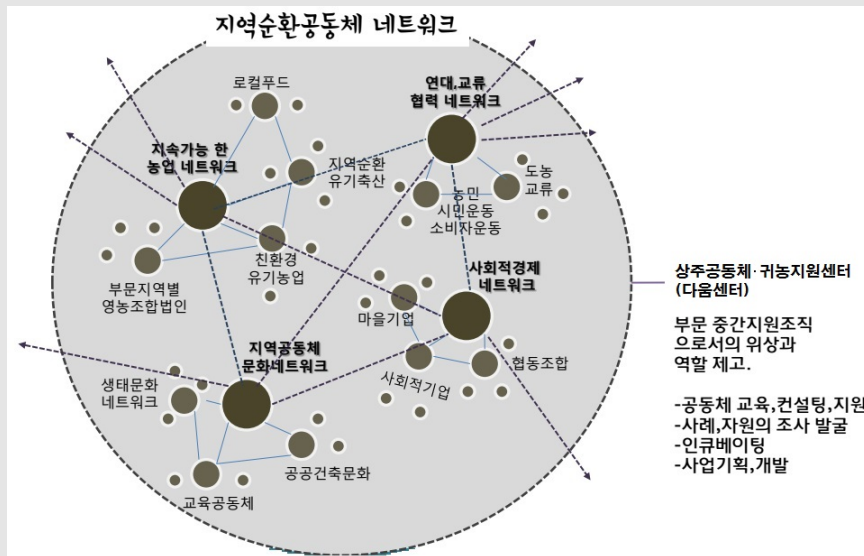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경상보조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현재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상주시를 포함한 경북의 몇몇 시·군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 있음.

- 상주시의 경우 기존의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를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다움센터)로 재편하면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음(<참고: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 사례>).

### <참고: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 사례>

- 2009년 6월 지역민과 귀농인이 함께 만든 민간자치 중간지원조직인 ‘상주 귀농·귀촌지원센터’ 개소
  - 2009년부터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예비)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활동, 생태귀농을 통한 지역인재 및 후계농업인력 확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
  - 2010년부터 농식품부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귀농귀촌교육, 귀농인 네트워크 지원, 지역민간섹터 활성화,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추진
- 2016년 공동체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사업을 통합하면서 기존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다움센터)로 새로이 출범함.
  - 지역공동체 포럼, 공동체 귀농학교, 공동체창업학교, 생활적정기술학교, 지역 대안장터,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공동체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의 비전과 역할>



자료: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다움센터) 인터넷 다음 카페(<http://cafe.daum.net/SJREFARM>) 내용 수정. 검색일 2018.11.12.

○ 전라북도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기존의 생생마을, 귀농·귀촌, 농촌관광 3개 센터를 통합하고 6차산업 지원센터,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마을통합협동조합 등의 지원업무까지 아우르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음.

- 시·군단위에서는 군산, 김제, 부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존재하며, 김제와 부안도 올해부터 조성을 시작함.

- 진안군 중간지원조직은 상근인력이 10명으로 지역에서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큼. 이들은 대부분 마을공동체팀에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거나 일부는 역량강화사업이나 중심지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의 팀원은 4대 보험을 포함해 연봉 2,200만 원(월급 실수령액 150만 원), 사무국장은 3,000만 원임. 이들은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임.



자료: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www.jbft.co.kr). 검색일 2018.11.14.

<그림 5-3>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시·군별로 중간지원조직의 인적 규모는 얼마나 많은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임.

- 진안군에서는 현재 10명의 중간지원조직 인원 중 7명은 다양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는(3명) 자체 수익사

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음.

-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을 중간지원조직과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러한 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운영하거나,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에서의 컨설팅비용, 외부에서의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에서 얻는 수익(강당 사용비 등, 강당은 과거 농업기술센터 건물), 기타 타 지자체 연구용역 등도 자체 수익사업에 포함됨.
- 이러한 자체 수익사업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도예산 등으로 존재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시·군 매칭비율 30%에 해당하는 예산 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지원조직을 포함한 추진체계 정비가 절실한 상황임. 특히 시·군 단위에서 민간협치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먼저 행정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농촌담당 부서(과)를 신설 또는 지정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 농촌지역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농촌관광, 6차 산업화, 귀농·귀촌,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등의 관련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총괄 부서인 농촌담당 부서(과)를 중심으로 시·군 행정 내에 행정지원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로 조례제정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업무분장 규정을 마련해야 함. 다만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시·군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초기에는 마을 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시·군의 역량 강화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 영역, 농촌정책 전반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이 외에도 시·군 단위 민간협치형 지원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사회 내 민간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마을

사업, 중심지사업, 6차 산업,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개별 사업별 대표들이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통합형 농촌개발협의회가 구성되어 각 사업별, 사업 공간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될 수 있어야 함.

#### 라.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표 5-5).
  -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임.
  - 2019년부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한 가지 유형으로 통합되어 기존의 선도지구, 일반지구, 통합지구 구분이 폐지될 예정이며, 기존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폐지될 예정임. 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기존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유형의 마을사업이 자율개발 유형으로 통합될 예정임.
  - 2019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농촌다움복원 사업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추가될 예정임.

(표 5-5)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과 주요 내용

| 사업유형              |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 농촌 중심지 활성화        |          | <b>150억 원 이하 ± α</b><br>- 시·군청소재 읍, 他 중심지 연계 + 30억<br>- 지역개발 전담 지원부서 + 10억<br>-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br>- 사업비 10% 이상 전달 P/G 의무                      | 5년 이내                 |
| 기초 생활 거점          |          | <b>40억 원 이하 ± α</b><br>- 면 소재지, 또는 지역 거점<br>-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br>- 1단계 거점 형성 완료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사업 추진 시 + 최대 20억 추가 지원<br>- 1단계 완료된 지구는 2단계 신청 가능 ('20년부터) | 5년 이내<br>+ α          |
| 마을 만들기            | 종합개발     | 10억 원 이하  | 5년 이내<br>(3년까지 단축 가능) |
|                   | 자율개발     | 5억 원 이하   |                       |
|                   | 신규마을     | 1.5억~36억 원 이내<br>(세대 당 0.3억~0.4억 원)   | 5년 이내                 |
|                   | 산림휴양치유마을 | (기반) 5억 원 이하<br>(종합) 10억 원 이하   | 5년 이내                 |
| 시·군 역량강화          |          | 3억 원 + α 이하<br>(50백만 원 단위 신청)   | 1년                    |
| 농촌다움 복원(신규)       |          | 20억 원 이하<br>(복수 시·군 30억 원)  | 5년 이내                 |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신규) |          | 한도 내  | 4년 이내                 |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          | 70억 원   | 4년                    |

주: 2017년 1월 1일부터 '18, '19년 산림휴양치유마을 신규사업, 산촌성격이 강한 '17년 계속사업 24개 지구를 산림청에서 관리. P/G는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a).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경우 지방분권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대상지역 선정에 지자체(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김광선 외(2018)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5-6)과 같이 시·군 공무원들은 현행과 같이 '각 도에서 복수의 시·군을 공모를 통해 추천한 후 중앙정부(균형위·농식품부)가 평가·선정'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일부는 각 도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선정하고 다른 일부는 중앙정부가 평가·선정'하

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대상지 평가·선정에 있어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지자체 특히 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표 5-6) 향후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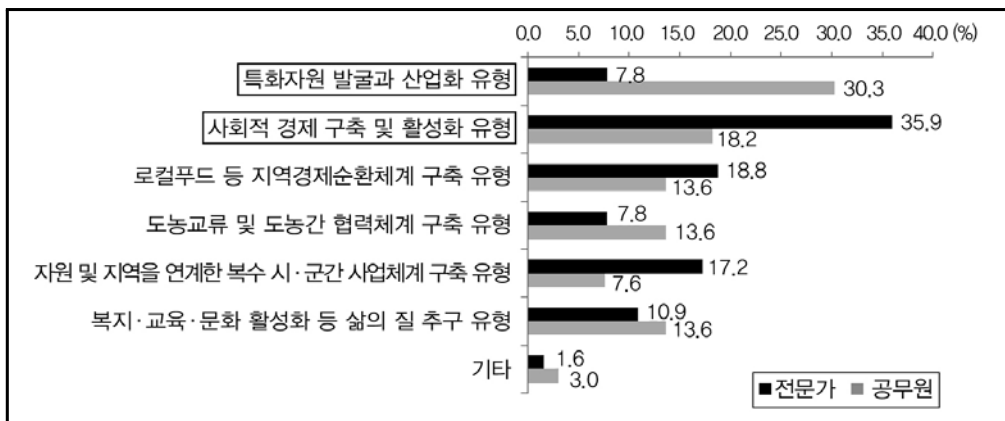
| 구분  | 전문가<br>(n=33) | 공무원<br>(n=35) | 전체<br>(n=68) |
|---|---------------|---------------|--------------|
| 각 도에서 복수의 시·군을 공모를 통해 추천한 후 중앙정부(균형위·농식품부)가 평가·선정 | 33.3          | 40.0          | 36.8         |
| 일부는 각 도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선정하고, 다른 일부는 중앙정부가 평가·선정    | 39.4          | 22.9          | 30.9         |
| 대상 시·군을 모두 중앙정부가 평가하여 선정                          | 15.2          | 25.7          | 20.6         |
| 과거 신활력사업처럼 사업 대상 시·군을 비공모 방식으로 미리 정하고 사업 추진       | 6.1           | 11.4          | 8.8          |
| 기타  | 6.1           | 0.0           | 2.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김광선 외(2018).

- 한편, 2018년에 선정된 신활력 플러스 사업 10개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이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 목적이 추구될 필요가 있음.
  - 2018년 4~6월 중 각 도에서 접수받은 40개 시·군의 신활력 플러스 예비계획서 내용에 따르면, 향토자원 활용 특화산업 육성형 23곳(57.5%), 로컬푸드 등 지역 순환 경제형 6곳(15.0%), 농촌관광 육성형 4곳(10.0%), 사회적농업 활성화형 6곳(15.0%), 복합형 1곳(2.5%)의 사업 유형 분포를 보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6차산업화 등과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농업유산·환경·경관·역사·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 증진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사업 목적이 추구되어야 함.
  - 김광선 외(2018)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의 활력증대와 자립적 성장을 위해 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 유형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는 ‘사회적경제 구축 및 활성화 유형(35.9%)’

을, 공무원은 ‘특화자원 발굴과 산업화 유형(30.3%)’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함. 두 선택지 모두 두 집단 간 응답 비중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견 차이가 명확함.

- ‘로컬푸드 등 지역경제순환체계 구축 유형’과 ‘복지·교육·문화 활성화 등 삶의 질 추구 유형’ 역시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자원 및 지역을 연계한 복수 시·군 간 사업체계 구축 유형’의 경우 전문가들의 선택 비중이 비교적 높음.



주: 다중응답 항목으로 전체 응답 수 대비 비율.  
 자료: 김광선 외(2018).

**<그림 5-4> 농산어촌 활력 증대와 자립적 성장을 위해 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 유형**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함께 계약협약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이는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 계획협약제도는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마다 상이하기 마련인 지역 여건과 전략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 지자체들은 계획협약제도에 대해, 패키지화된 여러 사업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계획협약제도에 대한 농식품의 보다 명확한 개념 및 방법 제시와 함께 이를 지자체에 이해시키고 홍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유형을 없애고 배후지역과 통합된 중심지 사업을 150억 원 규모로 통합한 점은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 소도읍의 가로 규모 정도로 물리적 공간을 정비하는 도시재생과 달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시설과 기능을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배후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에 초점을 두므로써 도시재생사업과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음.
    - \* 도시재생사업이 특정 공간을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밖으로 분산되면서 연계된 개발을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타 부처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식품부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군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시 귀농·귀촌인이나 외부 주체(활동가)들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향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는 전략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함.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두고 사업을 관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유형이 단순하게 통합된 것과 관련해, 향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전체가 중앙정부 공모를 배제하고 모두 지자체에 사업추진 권한이 이양될 수도 있으나, 현재 지자체의 역량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상당 부분도)은 각 시·군에 모든 권한을 이양해도 무방함. 마을 만들기 사업을 10년 이상 추진해 오면서 사업 역량을 갖춘 마을들 대부분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이제는 보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의 일부(약 5%)를 수단으로 농식품 부가 사업 모니터링, R&D, 현장 활동가 및 네트워크 조직 지원, 국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 새로운 사업 발굴, 마을 콘테스트 개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더라도 사업 내용에 대한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 사업 자체보다 마을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제시한 전라북도의 ‘농촌과소화대응 인력육성사업’(농촌 소규모지역 활동인력 육성사업) 중 마을형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의 중복배제 원칙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 과거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시행한 곳의 경우 사업을 함께 시행한 복수의 마을들 중 중심 마을 외에는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FAQ>와 같은 중복배제의 원칙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거의 없었던 참여 마을들이 다른 마을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에 마을 또는 권역단위 사업을 추진했던 마을들도 실질적 사업 추진 실패와 마을의 역량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규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FAQ>**

**FAQ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기 시행(시행중)한 마을에 대한 신규사업 신청 제한규정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기 시행한 마을(행정리)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 다음단계(예비단계→진입단계→발전단계→자립단계)로의 사업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음단계로의 사업신청만 가능하며 이전단계로의 단계역행은 불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a).

- 신규로 추진 예정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평수가 너무 작고 (12평 내외), 입주 기준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적어도 25평 내외의 가족형 공공임대주택이 적합하며,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농촌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안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 20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청년농촌보급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인 ‘농촌다움 복원’ 역시 시·군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의 역량 및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음.
  - 시·군 현장에서는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과거 농촌 모습의 복원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마을단위 사업과 차별성 없이 계획하고 있음.
  - 잘못된 이해의 초래는 해당 사업의 명칭 ‘복원’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음. ‘증진’과 같은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필요함.
  - 이와 함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군 포괄보조금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창의적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보다는 주로 단순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경향 발생
    - \* 이와 달리 공모방식의 사업은 주민 및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이 정착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초래했음.
  
- 농촌의 과소화와 관련해 인구과소 면 지역들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물론 기초생활거점사업조차 추진하기 힘들 수 있음. 이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향후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미래의 인구 및 공간구조 변화 상황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기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1182개 면 지역 중 2.4%에 해당하는 28개 면의 인구가 1천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예산 자율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별 시·군의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음.
  - 물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이양하면 그동안 사업 유형구분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애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반면, 시·군 역량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 단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듯이 농촌 시·군에서 장기적인 농촌종합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금까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 및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농촌개발-농촌관광-농촌복지-주민역량 등이 상호 결합된 통합적이고 영역적인 접근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업부문은 ‘주민 조직화’와 ‘역량강화’임.
  - 특히 주민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확충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어야 함.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서 지적하였듯이, 먼저 시·군 역량강화사업비의 일부를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시스템 구축에, 특히 인력운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점차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진안군의 경험에 따르면 연 3억 원이면 중간지원조직에서 1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의 시사점

####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구분 단순화와 창의적 사업 추진

-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안)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세부 사업 구분이 통합되는 등 기존 사업구조가 단순화되었지만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와 더불어 칸막이식 사업구조를 보다 더 단순화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지금까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추진되기 보다, 지역 간 특색 없는 정형화된 틀로 수행되어왔다는 인식이 높음.
  
-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일반농산어촌 사업구조를 보다 단순화하여 이를 통해 개별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고 보다 창의적인 사업을 계획·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다만,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자율권이 확대될 경우 과연 개별 시·군이 모두 이를 활용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 특성 등에 합당한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음.
  - 따라서 개별 시·군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방안이 함께 도모될 수 있어야 함.
  
- 시·군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존의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모범사례들을 발굴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음.

## 나. 통합적·영역적 농촌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 총괄부서의 확립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 담당 부서(과)가 주로 농업, 도시, 건설 및 건축 등의 분야 부서인데다 개별 세부사업의 담당 부서는 또 다시 여러 부서로 나누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
  - 과거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물리적 개발과 정비, 기반 구축 등에 주요 초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능적 네트워크, 서비스전달체계,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이는 농촌공간을 개별 중심지, 개별 거점, 개별 마을 등의 분절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연계와 통합, 체계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향후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을 통합적·영역적 농촌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 기반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부서를 과(課) 수준 이상의 농촌개발 담당부서가 담당하도록 행정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촌개발 담당 행정조직이 팀이나 계 수준인 곳은 먼저 과 수준으로 조직 구성을 재편
  - 이러한 조직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협약제도를 통해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계약(협약) 사항으로 명시

## 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지원체계 구축

- 일반농촌사업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효과성 증대 등을 위해 지역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FGI 참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심지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과거 물리적 개발이나 정비, 기반구축이 중요하던 개발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주민참여, 사업 간 및 지역 간 연계와 네트워크,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임.

-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강조될수록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FGI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최근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예: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준하는 읍·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의 지원인력 운영(예: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사례, 특히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운영비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FGI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내에 중간지원조직 인력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존의 시·군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현재(년 3억 원)보다 증액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운영과 인력운용에 따른 비용 지출이 가능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운용 방식을 재편할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
  - \* 단, 모든 시·군이 중간지원조직을 필요로 하거나, 현재 해당 조직의 운영이 적합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예산의 증액은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및 운영을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한 시·군에 한하여 실행

-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라. 신규사업 중복신청 배제 규정에 대한 유연한 운영**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규사업 신청 시기 사업 추진 읍·면이나 마을에 적용되고 있는 중복신청 배제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수정 요구가 많음.
  -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과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마을들 중 중심마을을 제외한 단순 참여 마을들이 이러한 중복신청 배제 원칙으로 인해 실질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한 사업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경험을 얻지 못한 마을들은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마을의 실태와 역량 수준에 따라 예비단계 혹은 진입단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

**마. 계획협약제도를 활용한 지방이양 시범운영 추진과 대상 지역의 중장기적인 농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의무화**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대폭 지방이양에 대해 FGI 참가자들 대부분 지금이 이를 실현할 적절한 때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군의 역량에 대해 다소 우려감을 피력함.
-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의 일괄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보다는 특정 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괄보조금 지방이양 시범운영 대상 시·도 및 시·군에게는 중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합당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계획협약제도를 활용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제 6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의 시범 적용을 위한  
특성 분석과 과제**



## 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의 시범 적용을 위한 특성 분석과 과제

###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 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DB 개요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산어촌 활용정보 관련 DB를 구축하고,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자체의 지역개발 기획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임.

#### 나. 분석 방법

- 농정원을 통해 RAISE 시스템의 2017년까지 구축된 자료를 협조 받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을 도식화하고 핫스팟 분석을 통해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태를 파악함.
- 핫스팟(Hot Spot) 분석은 Getis-Ord  $G_i^*$  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아래의 식을 사용함.

$$(1) \quad G_i^* = \frac{\sum_{j=1}^n w_{i,j} x_j - \bar{X} \sum_{j=1}^n w_{i,j}}{S \sqrt{\frac{n \sum_{j=1}^n w_{i,j}^2 - \left( \sum_{j=1}^n w_{i,j} \right)^2}{n-1}}}$$

여기서  $x_j$  는 j 지역의 속성 값,  
 $w_{i,j}$ 는 i와 j지역 사이의 공간 가중치,  $n$ 는 지역의 총수

$$(2) \quad \bar{X} = \frac{\sum_{j=1}^n x_j}{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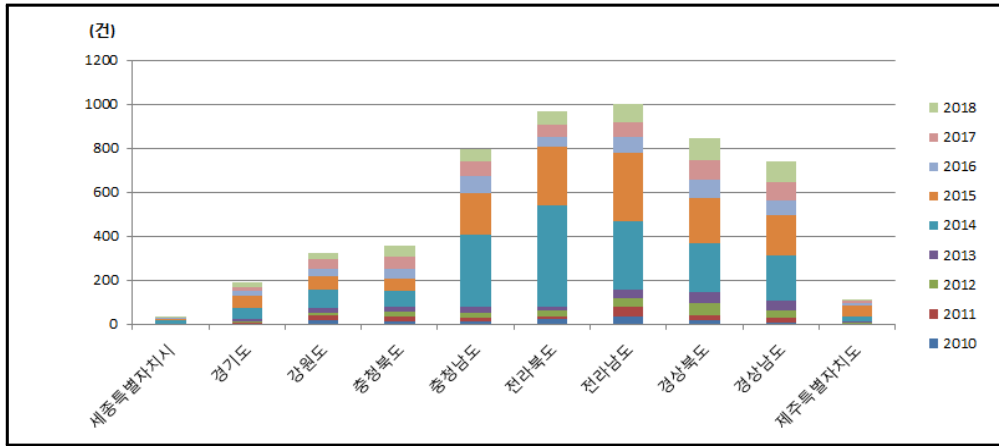
$$(3) \quad S = \sqrt{\frac{\sum_{j=1}^n x_j^2}{n} - (\bar{X})^2}$$

##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분포(2010~2018년)<sup>19)</sup>

-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지구는 총 5,393개소임. 시·도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001건, 전라북도가 970건, 경상북도가 847건, 충청남도가 800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741건, 충청북도 361건, 강원도 328건, 경기도 192건, 제주도 115건 순임.
  
-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인프라(2,459건)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1,002건), 시·군역량강화(542건) 순으로 추진됨.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주로 소재지의 기능강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들은 총 690건으로 전체 읍·면의 약 49%에 해당하는 수임(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하면 더 많은 비율).

---

19) 1차 연도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 자료를 사용(일부 공간데이터 미 구축으로 제외)했으나 2차 연도에서는 2017년까지 자료(기존 미구축 자료 포함)를 사용하여 새로이 분석함. 더불어 세부 속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되는 내용은 연계협력사업, 취약지구생활여건개조사업 등 농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한 것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임. 사업비(국비, 광역시·도비, 시·군비, 자부담)는 데이터의 누락이 많아(RAISE 자료에서는 '10년 이후 5,395개 사업지구에서 2,390 지구의 사업비가 누락되어 있음)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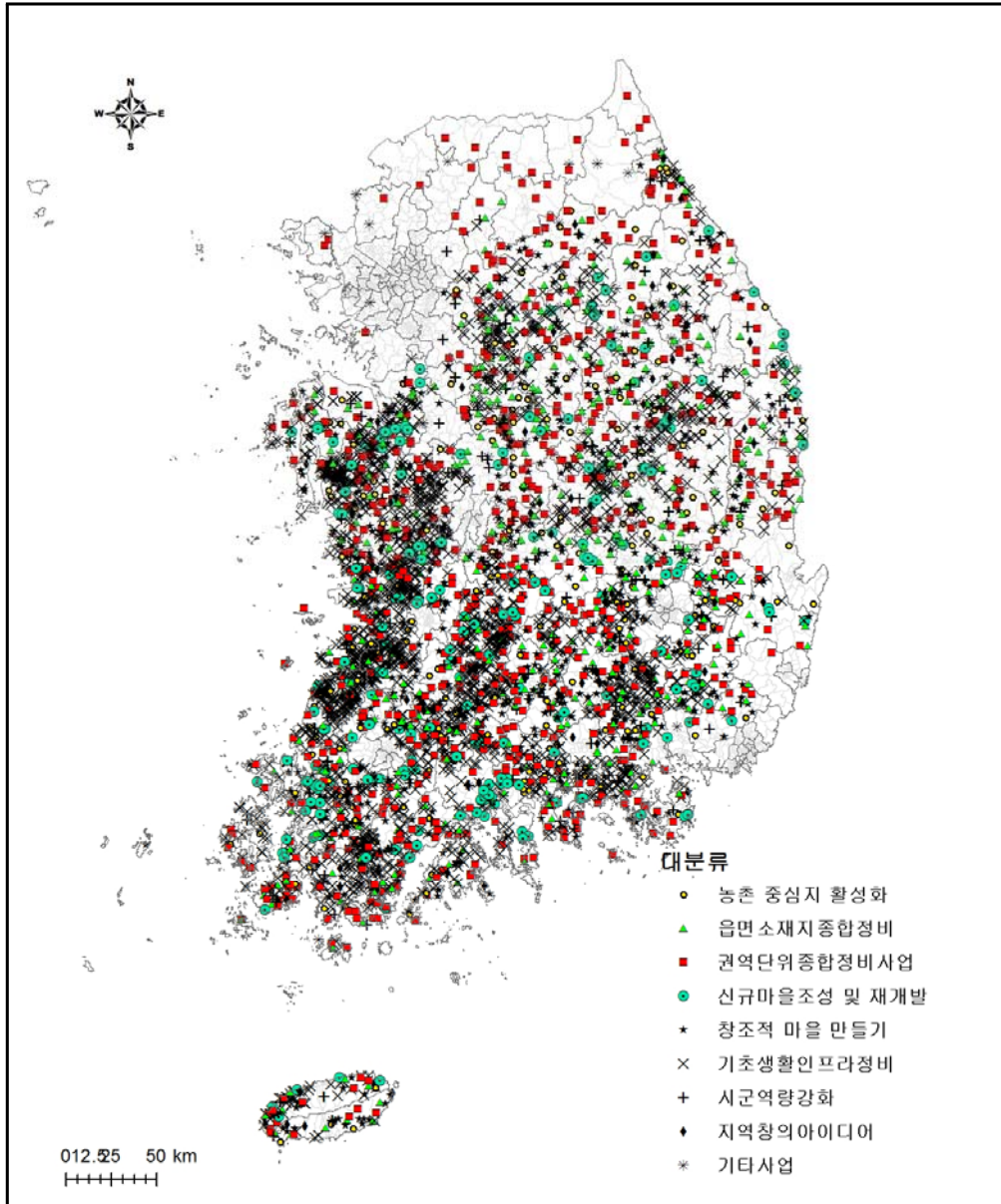
<그림 6-1> 2010년 이후 시·도-연차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누적 건수

(표 6-1) 2010년 이후 시·도-사업유형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수

| 시·도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읍·면소재지종합<br>정비     | 1  | 12  | 27  | 40  | 27  | 27  | 47    | 70  | 51  | 9   | 311   |
| 농촌 중심지<br>활성화      | 3  | 11  | 25  | 38  | 45  | 55  | 66    | 76  | 53  | 5   | 377   |
| 권역단위<br>종합정비<br>사업 | 2  | 11  | 46  | 43  | 48  | 59  | 95    | 79  | 74  | 8   | 465   |
| 창조적<br>마을 만들기      | 5  | 31  | 67  | 101 | 140 | 105 | 155   | 185 | 185 | 28  | 1002  |
| 신규마을 조성<br>및 재개발   |    |     | 7   | 4   | 8   | 10  | 36    | 22  | 10  |     | 97    |
| 시·군 역량강화           | 5  | 33  | 50  | 61  | 71  | 56  | 80    | 85  | 90  | 11  | 542   |
| 기초생활<br>인프라정비      | 21 | 91  | 94  | 63  | 429 | 645 | 506   | 303 | 259 | 48  | 2,459 |
| 맑은물 푸른<br>농촌 가꾸기   | 1  | 2   | 1   | 1   | 2   | 1   | 2     | 2   | 1   |     | 13    |
| 지역창의<br>아이디어<br>사업 |    | 1   | 11  | 10  | 30  | 12  | 14    | 25  | 18  | 6   | 127   |
| 총합계                | 38 | 192 | 328 | 361 | 800 | 970 | 1,001 | 847 | 741 | 115 | 5,393 |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sie.go.kr)

○ 2010~2017년까지 개별 사업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역은 고르게 분포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si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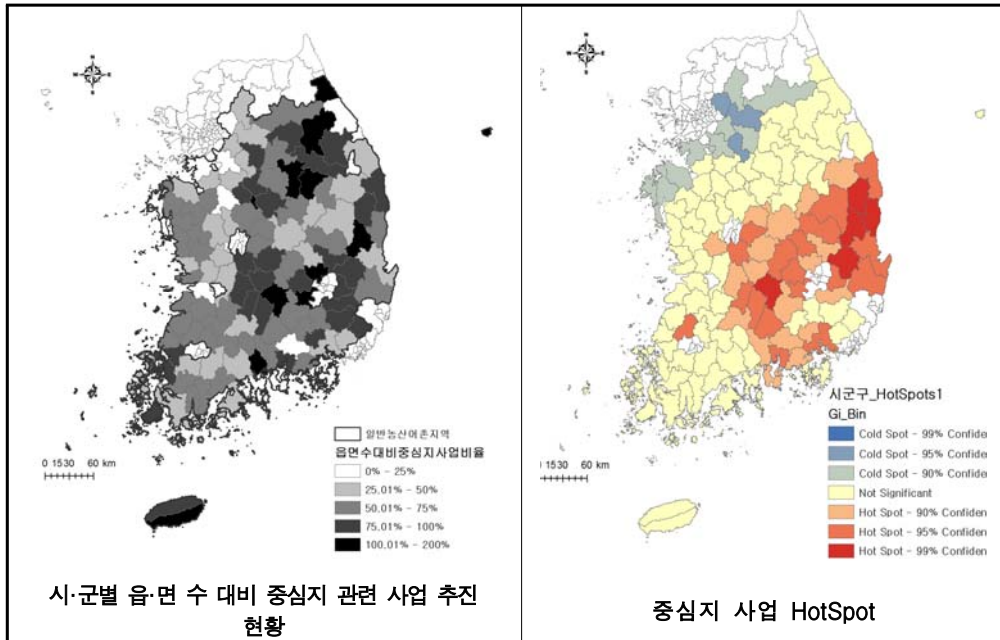
<그림 6-2>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포



###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상 특징(2010년 이전 사업 포함)<sup>20)</sup>

-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의 읍·면을 기준으로 중심지 관련 사업(2010년 이전 소도읍 육성, 2010년 이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015년 이후 중심지 활성화)의 수행 현황을 보면 21개 시·군에서 모든 읍·면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음.
  
-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관할 읍·면의 절반 이상에서 중심지 사업을 추진함.
  - 서귀포시의 경우는 읍·면 지역이 5개이지만 2010년 이후 8번 중심지 관련 사업을 추진(소도읍육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10번의 중심지 관련 사업 추진)
  - 관내 모든 읍·면에 한 번 이상 중심지 사업을 완료한 시·군은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장수군, 광양시, 진도군,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거창군, 제주시임.
  
- 반면, 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천안시, 계룡시의 경우는 중심지 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고, 강릉시, 태안군, 김제시, 여수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시 등은 관내 읍·면 중 25% 정도에서만 중심지 사업이 수행됨.
  - 중심지관련 사업 수행 현황에 관련한 시·군별 핫스팟 분석을 수행해보면, 경북 및 경남 지역 시·군에 집중되어 사업을 많이 추진되었고,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일반농산어촌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들이 군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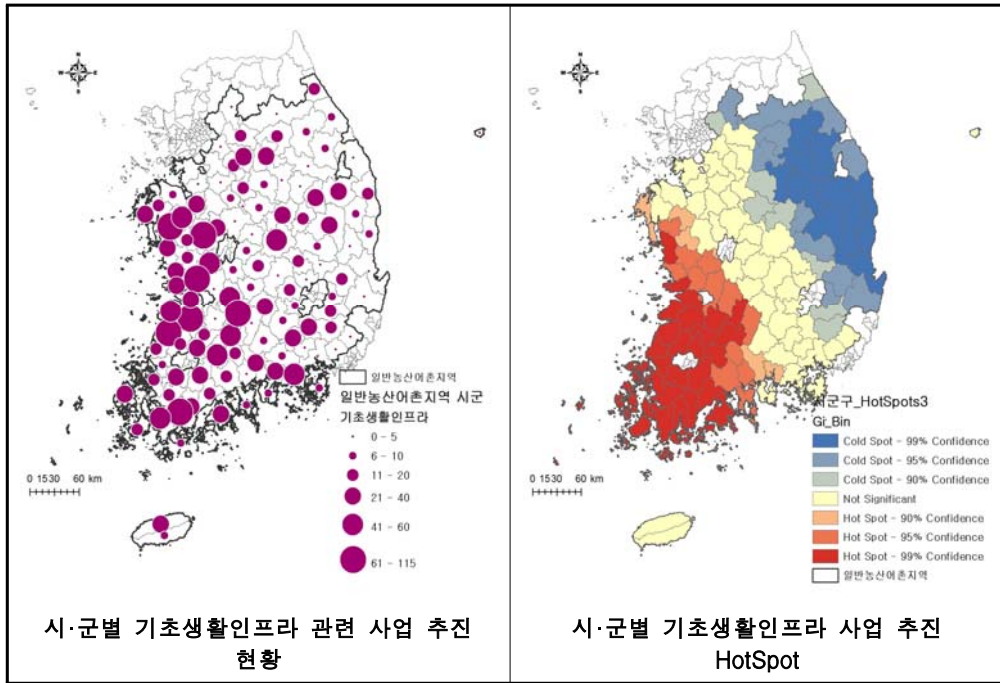
20) 여기서부터는 지역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들도 모두 포함하여 분석



<그림 6-3> 시·군별 중심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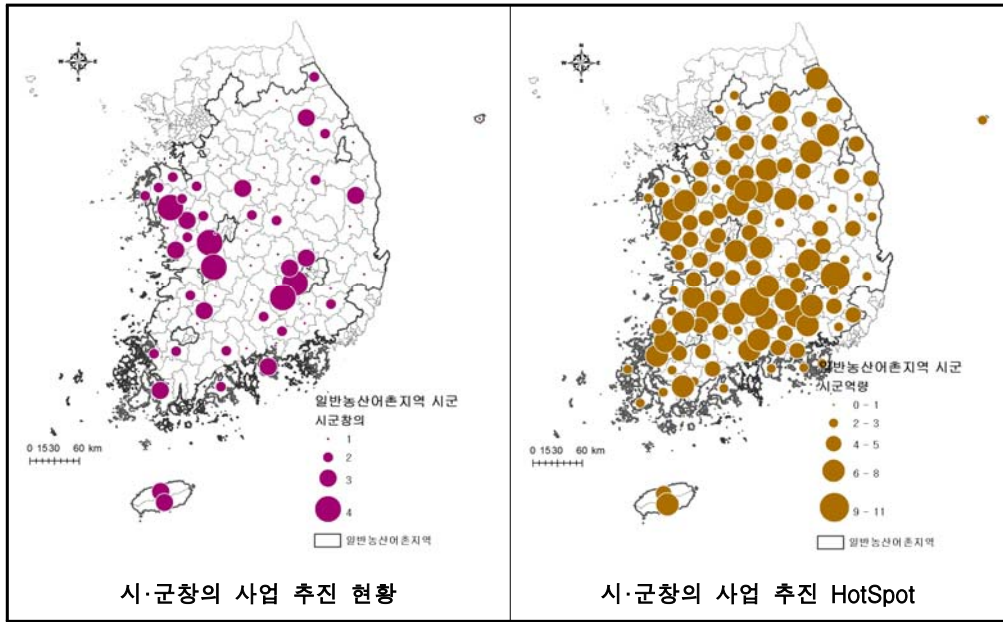
- 읍·면 수 대비 중심지 관련 사업 추진 비율과 읍·면 수 대비 마을 사업 추진 비율과의 상관관계는 0.61로 대체로 중심지 사업을 많이 추진한 시·군이 마을 관련 사업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1)</sup>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주민 및 지역 공무원 등의 참여로 인한 사업 경험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판단됨.
  
- 시·군별로 시행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은 충남의 서해안 지역 시·군과 전북, 전라의 시·군에서 강원 및 경상도 지역에 비해 다수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핫스팟 분석에서도 전북과 전남 지역은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이 다수 추진된 핫스팟으로 분류되고 강원 및 경북 일대지역은 콜드스팟으로 분류됨.

21)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중심지 사업 및 마을 사업과 특성이 달라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6-4> 시·군별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시·군창의 사업은 S/W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를 시·군 전체에 파급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은 시·군의 참여 의사가 적극적일 경우에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시·군창의 사업의 분포를 보면 특정 충남 및 전북, 경북 일대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역량강화사업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경북 일부 시·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이 적게 수행되었음.



<그림 6-5> 시·군별 시·군창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 제4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의 과제

- 2010년 이전 및 이후에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은 5천 건 이상으로 일반농산어촌 지역을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실적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심지 관련 사업의 경우 123개 일반농산어촌사업 대상 지역의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관내 읍·면의 50% 이상 사업을 추진했으며, 마을 사업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 내 읍·면의 마을 들 중 하나 정도는 사업을 추진했음.
  
- 위의 자료를 보면 사업이 고르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시·군별로 살펴보면 사업 추진량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은 사업 유형별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중심지 관련 사업, 마을 관련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시·군역량 사업 등 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심지 사업의 경우는 경상도 일대에서, 마을사업은 전라도, 기초생활인프라는 충청과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됨. 장기에 걸친 사업 현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시·군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시·군창의 사업의 경우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만 수행되는 경향이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확장될 경우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역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초기 중앙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에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RAISE 등을 활용한 지역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완 작업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 7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및 정책 추진  
방안**





## 제7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및 정책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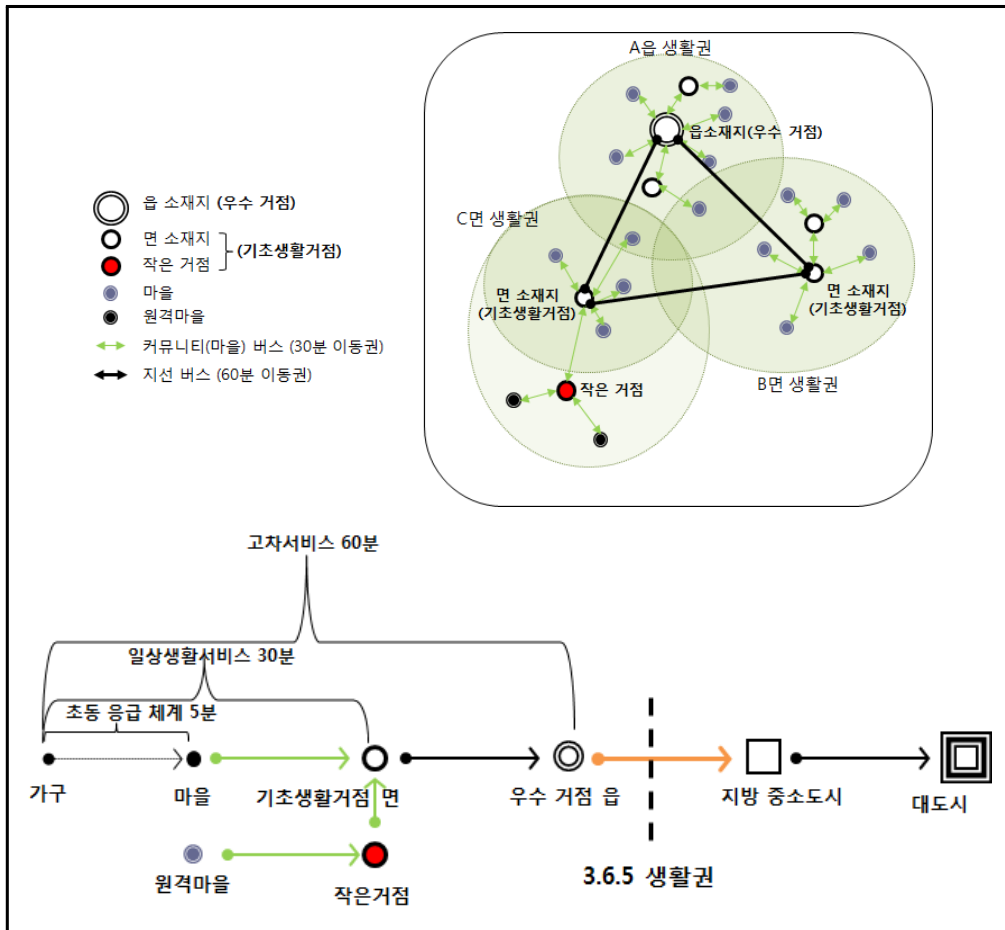
###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과 구조의 개선
  - 2019년도부터 적용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 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의 사업군을 시·군들의 수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욱 유연성을 부여하되 보다 섬세하게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마을’과 같이 공간적 사업 대상만이 강조되게 되면 사업 내용의 유연성과 통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 정주체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율적으로 공간의 틀을 활용하여 그 안에서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sup>22)</sup> 그래야만 지방분권 상황 하에서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틀이 유지될 수 있음.
  
- 3·6·5생활권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과 구조로의 전환
  - 농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촌의 수위 중심지를 거점으로 연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주민 삶의 질 향상→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정주 기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생활서비스 30분, 중·고차생활서비스 60분, 초동 응급연락체계 5분 内の 농촌 ‘서비스 생활권(3·6·5 생활권)’을 통해 구현함.
  - 특히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형 교통수단 운영을

22) 농촌 중심지는 행정 중심지로서의 전통적인 읍·면 소재지 이외에도 교통거점, 교육거점, 문화거점 등이 지역 특성에 따라 흥망성쇠를 할 수 있음.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심지의 재정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확대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을 상위 중심지와 연결되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주력함. 더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미충족 지역, 지방 도시로부터 30km 초과 지역, 인구 희박 지역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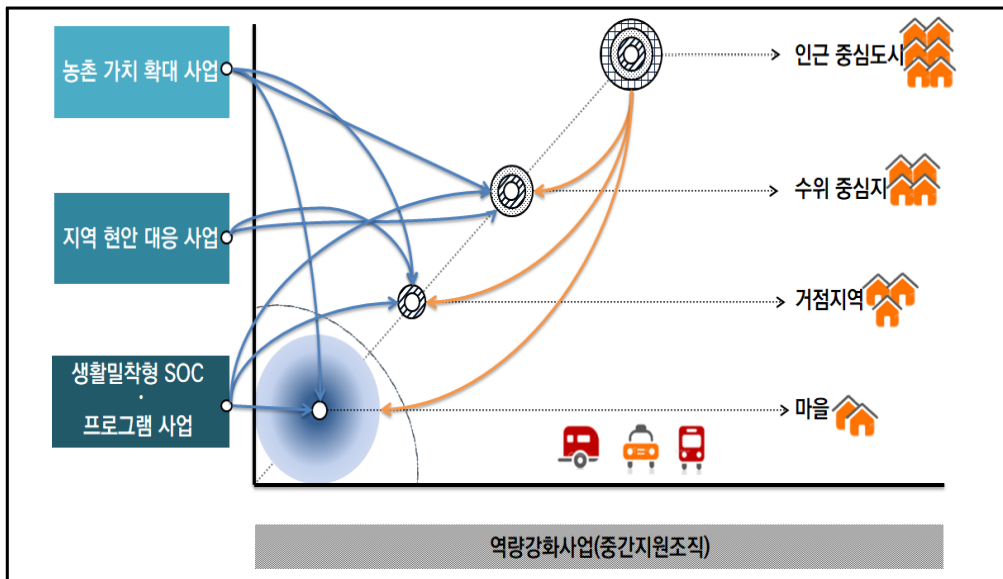
- 더불어 이웃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타 부처 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공동 활용 등을 함께 고려함. 국토부의 도시재생, 문화부 및 복지부 등의 콘텐츠와 인적자원 등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융복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송미령 외(2017).

<그림 7-1> 3-6-5 생활권의 개념도

-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시·군의 수위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재정비가 필요하며, 기초생활거점은 행정구역을 넘어서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생활거점들을 시·군 스스로 발굴하고 수요에 맞추어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 만들기는 시·군에 일임하되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베이스라인 데이터의 자율적 입력부터 최종 성과로 나타난 데이터까지를 RAISE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도록 유도함.
  
- 공간을 틀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설정하기보다는 농촌가치확대사업, 지역현안대응사업 등으로 단순화함. 특히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생활밀착형 SOC사업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역량강화사업에는 시·군 내의 사업 추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을 적시하여 운영함.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타당함. 특히 시·군 포괄보조사업과 다른 트랙으로 전국 모든 시·군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구성함.



<그림 7-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개선

- 현재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1차)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2차) - 신규사업 반영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사업의 시행 -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문제는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계획서가 대부분 용역 계획으로 수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절차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최소한의 요건과 양식을 제시하고 오히려 추진체계 상의 책임질 수 있는 행정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유무를 사업성 검토의 핵심 요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임.
  - \* 신규사업 설명 - 신규사업 신청서 및 추진조직 구성 - 기본계획 수립 - 신규사업 반영 -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준공 및 정산 사후관리
  - \*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협약제도를 적용

## 제2절 발전모델의 적용 사례 및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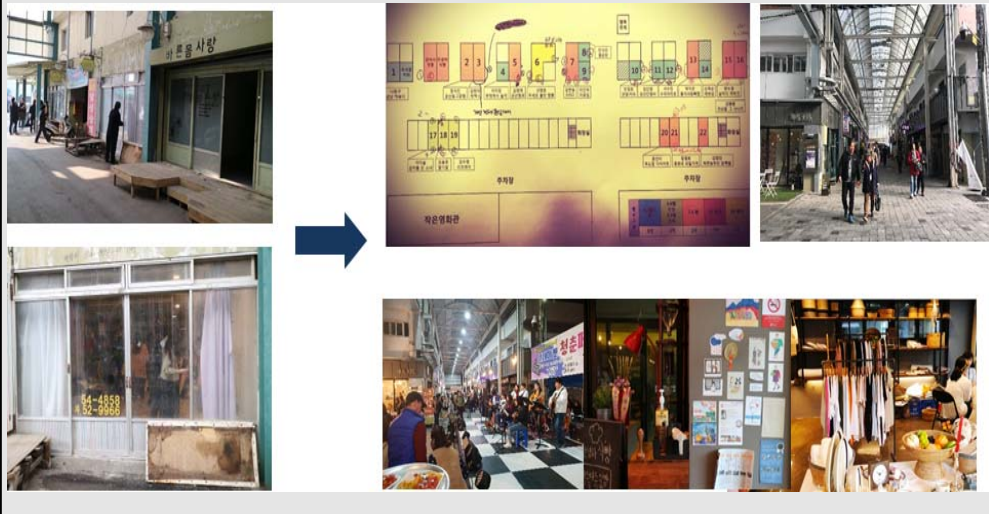
### 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 인구의 증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커뮤니티 센터 등이 설치되었고 이를 통한 도농 교류 및 주민 교류 활동이 활발해져 생활여건 개선이 나타남.
- 생활여건의 개선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2014년 46%에서 2016년 56%로 증가하였고,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 명에서 2017년 52만 명 수준으로 증가함.

#### <참고: 금산군 농촌중심지사업의 사례>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중심지 활성화 사례

- 금산읍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중심상점가의 빈점포 및 빈상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빈상가 35개에 지역상인, 청년상인이 입점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심상점가의 활력이 제고됨.



자료: 오형은(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과제 원고위탁 내용을 발췌.

##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증대

○ 일반농산어촌사업 초기에는 사업참여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논의하여 결정한 후 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를 통해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화 됨. 주민참여 강요 방식에서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 다양해짐.

-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현장포럼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기존 리더(이장단) 중심의 의사결정 논의구조에서 지역주민,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기획되고 운영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범위가 확장됨.

### <참고: 금산군 농촌중심지사업의 사례>

#### ○ 참여 주민의 다양화 및 활동

- 금산군 농촌중심지사업의 사례에서는 18년 기준 669명(팀)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지역주민, 상인, 금산시장 예비창업자, 중부대학교 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 활동내용                                      | 활동인원 | 활동거점   | 활동수 |
|---|------|--------|-----|
| <b>플라보 동아리</b><br>동아리 플라보 활동 및 신규동아리 활동   | 101명 | 금산문화의집 | 8회  |
| <b>중부대 학생</b><br>중부대학교, 금산시장인근 마을 연계 경관개선 | 70명  | 금산시장   | 6회  |

| 활동내용                                    | 활동인원 | 활동거점   | 활동수  |
|---|------|--------|------|
| <b>문화 배달부</b><br>자신의 재능을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배달  | 54명  | 금산문화의집 | 245회 |
| <b>서포터즈</b><br>금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관련 홍보활동   | 17명  | 금산지역   | 45회  |
| <b>문화리더</b><br>문화다방 프로그램 개발 관련 주민워크숍 참여 | 10명  | 금산문화의집 | 4회   |

| 활동내용  | 활동인원 | 활동거점 | 활동수 |
|---|------|------|-----|
| <b>예비창업자</b><br>금산시장 창업골목 창업자 교육수로, 금산시장 참여 | 61명  | 금산시장 | 32회 |
| <b>야시장 셀러</b><br>금산시장 야시장 셀러 참여 간식배달전지 참여   | 172팀 | 금산시장 | 8회  |
| <b>간식배달부</b><br>신청사연을 접수하여 금산시장 상인, 창업자가 배달 | 21명  | 금산시장 | 11회 |
| <b>기존상인</b><br>금산시장 기존상인 조직화                | 25명  | 금산시장 | -   |
| <b>마을장 셀러</b><br>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생산품을 월장에서 판매 | 138명 | 금산시장 | 7회  |

| 지역 내 주민 공동체활동 강화 | 활동내용                           | 활동인원 | 활동거점 | 활동수 |
|------------------|--------------------------------|------|------|-----|
| 금산시장 경제기능 회복     | 배후마을 주민 및 상인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      |      |     |
|                  | 금산시장, 금산문화의집 중심 기능 다양화 및 참여 확대 |      |      |     |

· 배후마을과의 교류를 위한 활동주민 양성  
 - 예비창업자의 셀러활동, 간식배달부 활동  
 - 문화배달부의 마을장셀러 발굴  
 - 금산시장 기존상인, 금산문화의집 문화리더그룹 활동 확대 및 사업참여 유도

자료: 오형은(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과제 원고위탁 내용을 발췌.

## 다. 사회적 자본 및 지역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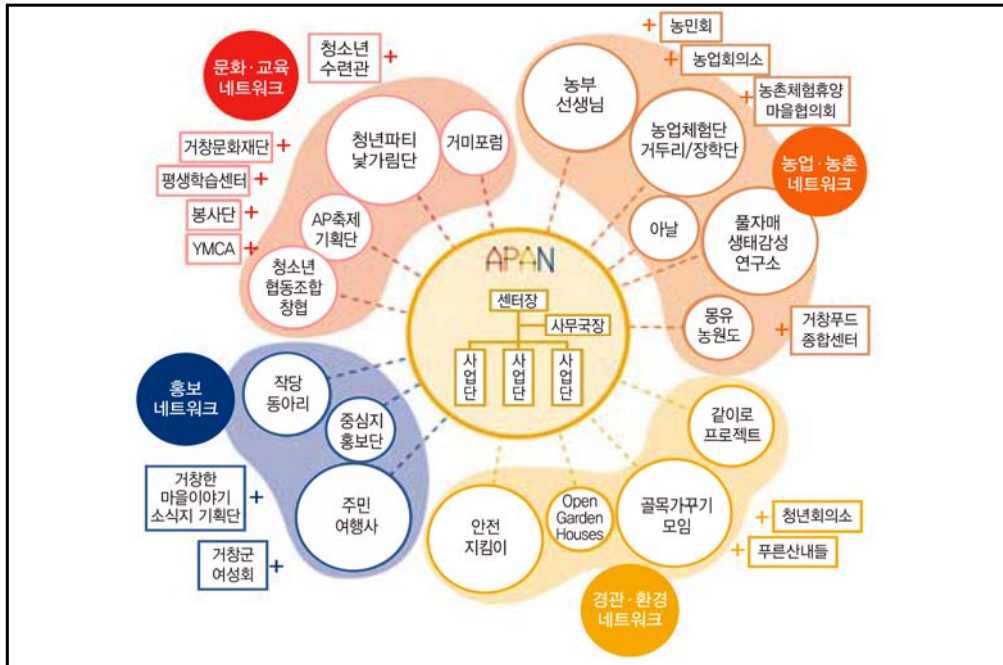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 및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됨.

(표 7-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자리 및 사회적 자본 창출 성과

| 구분                   | 내용  |
|----------------------|---|
| 지역개발<br>관련 일자리<br>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지역개발사업 컨설팅 관련 협회등록업체 52개소, 일반농산어촌입찰업체(산학연, 정부출연 연구소 제외) 28개소 창출. 약 80개소 평균 20명 상근</li> <li>- 총괄계획가, 중앙계획지원단, 현장활동가, 마을만들기 기획자 등 일자리 창출</li> <li>- 사무장, 추진위원장 등 사업관련 업무자들의 사업이해도가 증가하였고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활동이 증가함.</li> </ul> |
| 사회적 자본<br>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여 년간 지역분석(지역자산, 인적자원)의 데이터 발굴</li> <li>- 공동체 자산화 가능 자원 생성(도농교류센터, 커뮤니티센터, 권역센터 등)</li> <li>- 공동사업, 공동체의 경제활동의 경험 축적</li> </ul>   |
| 민간협력구조<br>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력적계획을 위한 이해관계자 형성(중간지원조직, 행정, 민간단체, 업체)과 역량제고</li> <li>- 민관 협력의 흥성통, 진안마을만들기, 완주사회적경제지원 등 다양한 사례 발굴</li> <li>- 타 지역 유사활동가들 간의 연계망 구축 및 협의체 구성(체험마을, 권역, 사무장)</li> <li>- 전문가와 지역주민간의 연계망 구축, 필요시 컨설팅과 자문 요청</li> </ul>   |

자료: 오형은(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과제 원고위탁 내용을 발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장포럼, 지역축제, 위원회 회의 등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사례도 발생
  - 거창읍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역 내 활동가, 민간단체, 주민간의 연계망이 구축됨.
  - 현재 거창읍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APAN(Academy Park Action Network)을 구축 운영 중임.
    - \* APAN은 농업·농촌, 경관·환경, 문화·교육, 홍보 분야로 구분되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자료: 오형은(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과제 원고위탁 내용을 발췌.

<그림 7-3> 거창군의 APAN 구축 사례

#### 라. 중심지-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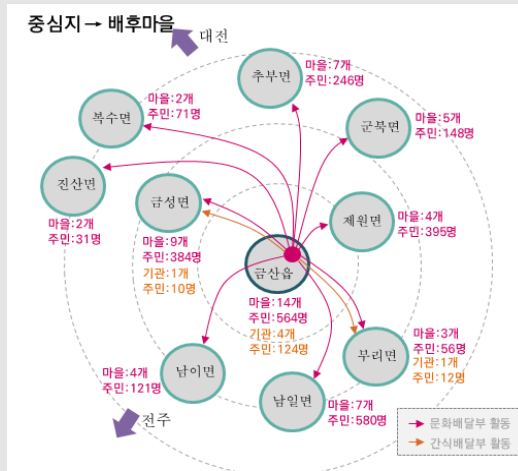
- 과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읍·면 소재지사업, 마을사업 등이 특 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사업 수혜자로 국한시켰던 반면에 개선 된 중심지 사업은 중심지가의 주민, 상인 뿐 아니라 생활권내 배 후마을주민 모두를 참여자와 수혜자로 인식하여 사업의 파급효과가 확장됨.
- 농촌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사업수혜자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
  - 중심지에서는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를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
  - 문화배달부를 통한 체험을 통해 중심지로의 문화 이용을 유도하고 배후 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개발하여 이동 편의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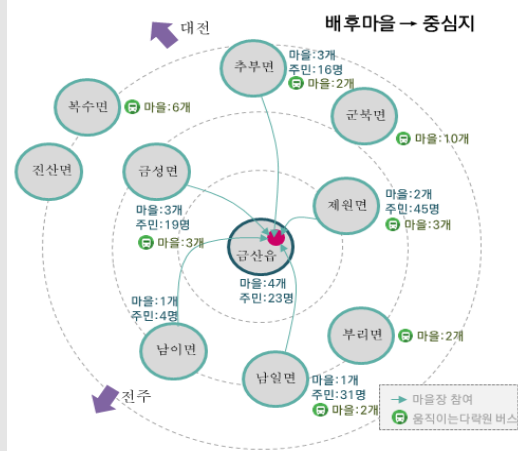
## <참고: 금산군 문화배달부 사업의 사례>

### ○ 참여 주민의 다양화 및 활동

- 금산군에서는 중심지사업을 통해 문화배달부 및 금산월장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배후 마을로 문화서비스를 전달하거나 배후 마을 주민이 중심지와 교류하는 빈도가 늘어남.



-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배달사업 운영
  - 문화배달부 1개읍 9개면 (누계) 57개 마을 대상 2,596명 참여
  - 간식배달 1개읍 2개면 (누계) 6개 기관 대상 146명 참여
  - 문화배달부, 금산시장 상인, 예비창업자 등 배후마을 활동



- 배후마을 주민대상 중심지 방문 및 활동 유도
  - 문화배달부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 금산월장 참여 유도
  - 마을장 1개읍 5개면 (누계) 10개마을 138명 참여
  -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 개발

자료: 오형은(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과제 원고위탁 내용을 발췌.

### 제3절 정책 추진 방안과 과제

####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행정 전담조직의 설치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기준인건비를 비롯해 조직의 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과’의 설치를 자율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9-18개)을 아예 삭제하고 인구 10-15만 명 규모의 도농통합시는 실·국 설치기준을 종전 1-3개에서 2-4개로 확대함. 지역별로 특화 역점과제,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를 기준으로 자율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최소한 농촌기반정비 업무와 분리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담당하는 전담부서(‘팀’ 규모)의 설치라도 해야 한다는 현장의 주장이 있음(구자인, 2018). 마침 행정안전부가 조직관리 지침을 변경하여 ‘과’ 신설도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정책의 전담 ‘과’ 신설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군이 지역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이자 지역현안으로서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을 말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평가 시에 가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더불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기본 교육 과정에 농촌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해 포함시키도록 함.

**<참고: 행정안전부(2018.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변경의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기준인건비 등 조직 관리·운영상의 자율성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1) 자치단체 정원관리 자율화: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 패널티(감액) 삭제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의회 제출 의무화
- 2) 자치단체 ‘과’ 설치 자율화
  -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9~18개) 삭제
  - 한시기구/소속기관 설치시 협의대상은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조정
- 3) 인구 10~15만 명 규모의 도농통합시는 실·국 설치기준을 종전 1~3개에서 2~4개로 확대

**3. 자치단체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 효율화**

- 1) 개요: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능 쇠퇴 분야 등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로 재배치해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
- 2) 재배치 목표: 향후 5년간 신규인력 총원규모를 반영하여 총 정원의 1~3% 재배치
- 3) 재배치 기준: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자료: 구자인(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및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 과제 원고위탁 내용을 발췌.

○ 시·군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

- 중장기적으로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합리적 구현을 위해서는 특정 사업이 아니라 시·군의 농촌 지역개발정책 전반을 추진함에 있어 자원을 찾고 현재를 진단하며 대안으로서 시·군마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선도할 수 있는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 여부가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며, 인건비의 경우 지자체 매

칭 재원을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함.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자원(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발굴과 관리와 더불어 가용한 지역 내외의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자체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교육, 소규모주민참여 활동, 지역마케팅)을 병행함.
- 특히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된 법률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원 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지만 담당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한 문제가 있음. 지원조례가 필요한 핵심적이고 당면한 과제가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라 할 때 법률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의 개정이나 새로운 조항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23)</sup>.

○ 중앙정부, 시·도, 시·군,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체계의 마련

- 중앙정부 차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함. 정책 지원 기능 강화가 요구되며, 교육 및 관련 교재 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등의 소개 등을 누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시·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역할 강화, 별도 중간지원조직과의 통합 설치 근거 마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 학교 설치(지정) 등
- 시·군: 민관협력의 지원 시스템 조기 정비, 행정 조직개편으로 농촌정책 전담부서 신설,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계획수립 및 계획협약 시범 적용

- 지자체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부처의 사업을 연계 지원함.

23) 도농교류센터 및 전담지원조직을 일종의 중앙 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보고 이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의미함. 이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위탁연구를 작성한 구자인(2018)의 의견에 대한 재해석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되,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함.
- 이를 위해서는 시·군의 통합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시·군 전체적으로 공간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함께 토지이용상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전문성이 있는 영역은 계획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시·군 내에 농촌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은 계획가와 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해 자원을 찾고 필요한 정비 사업을 목록화하는 활동이 요구됨. 마을 만들기의 경우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필요한 H/W 및 S/W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현재는 농어촌공사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지역개발전문기관을 지정 상호 협력관계에서 사업 기간 동안 책임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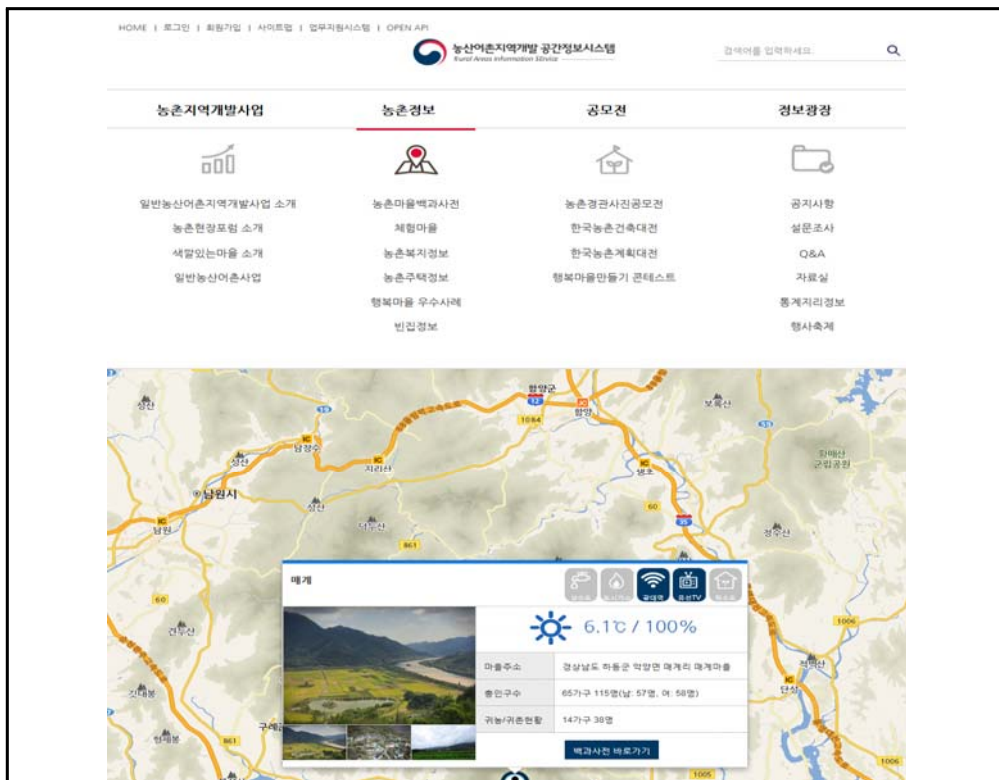
<그림 7-4> 시·군의 통합적 계획(안) 예시

## 제4절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개편

### 1.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의 개요

○ RAISE(Rural Areas Information Service)는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및 농산어촌 활용정보 DB를 확대 구축하고 일반농산어촌 지역 개발사업정보를 개방·공유하여 농산어촌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자체의 지역개발 기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임(심재현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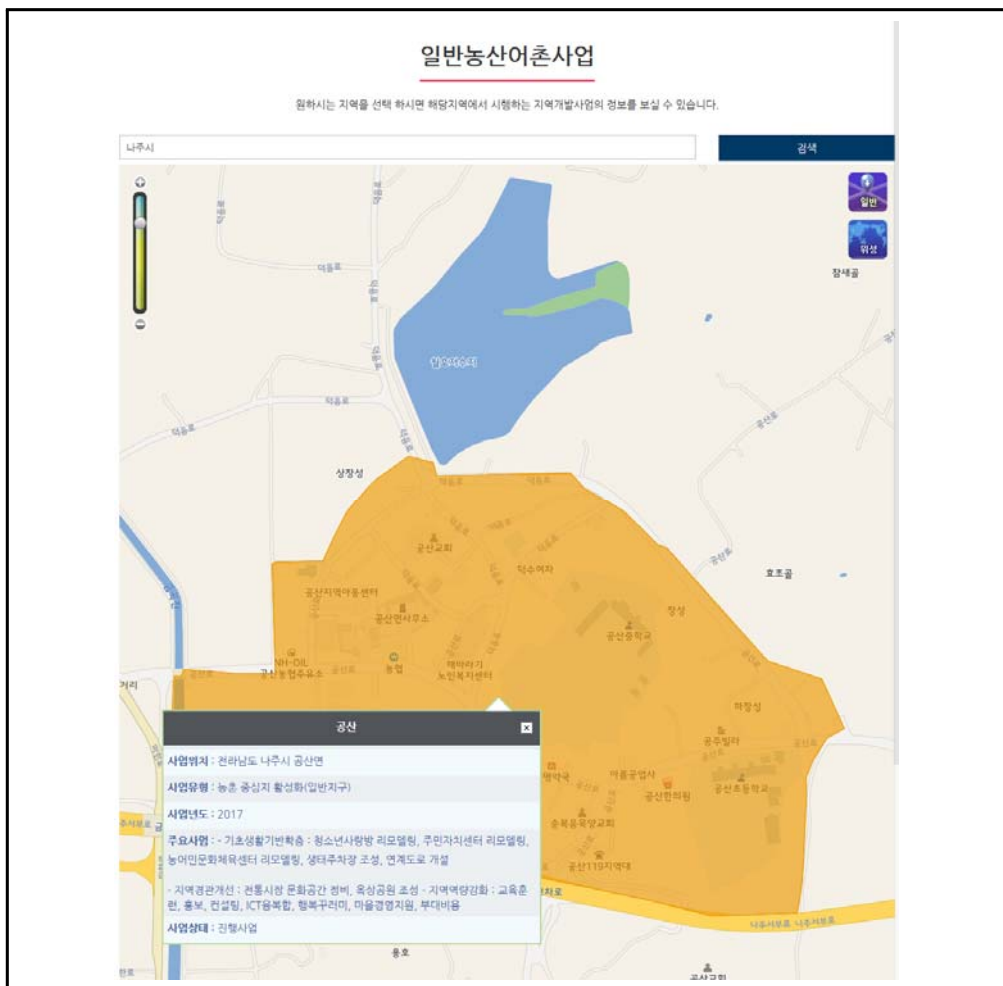
- 현재 RAISE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어메니티정보, 체험마을, 농어촌인성학교, 지역개발 우수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검색일: 2018.11.13

<그림 7-5> RAISE 홈페이지 화면

- 사용자 중심 업무 활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모바일 웹 서비스 및 업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심재현 외, 2016).
  - 이를 위해 제공되는 주요 자료는 개별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점 혹은 권역으로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관련 세부 정보는 게시판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세부 정보들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별로 사업 속성(개요 정보, 세부사업, 예산정보), 참조자료(기본계획, 시행계획, 준공정산) 등임.



자료: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검색일: 2018.11.13

<그림 7-6> RAISE 사업 검색화면

## 2.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활용 실태

○ RAISE는 다른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활용도도 높지 않은 실정임.

- 자료실 게시판 이용현황을 보면 사업설명회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지난 게시물 조회 수가 1,000건을 넘기지 못하고 있음.<sup>24)</sup>
- 그 이유를 RAISE의 구축 목적의 4가지 측면에서 다시 파악함.

### ① 지역개발사업 및 농산어촌활용정보 DB확대 구축 측면

- 대국민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RAISE의 지역개발사업정보는 크게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 색깔 있는 마을 등에 관련한 간략한 사업 소개 ② 농촌마을백과사전으로 명명된 마을 자료(2015년만 자료가 있음), 체험마을, 복지 시설 위치와 해당 시설의 간략한 프로그램 정보만 있는 농촌복지정보, 자료의 규모 측면에서 극히 빈궁한 주택 및 빈집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음.
- 현재 제공되는 자료로는 농촌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해당 자료들은 자료의 충실성, 유용성 등이 낮아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콘텐츠가 아님.
- 몇몇 DB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표출되는 DB를 통해 가시적으로 얻을 만한 정보가 부족함.

### ② 개발사업정보 개방·공유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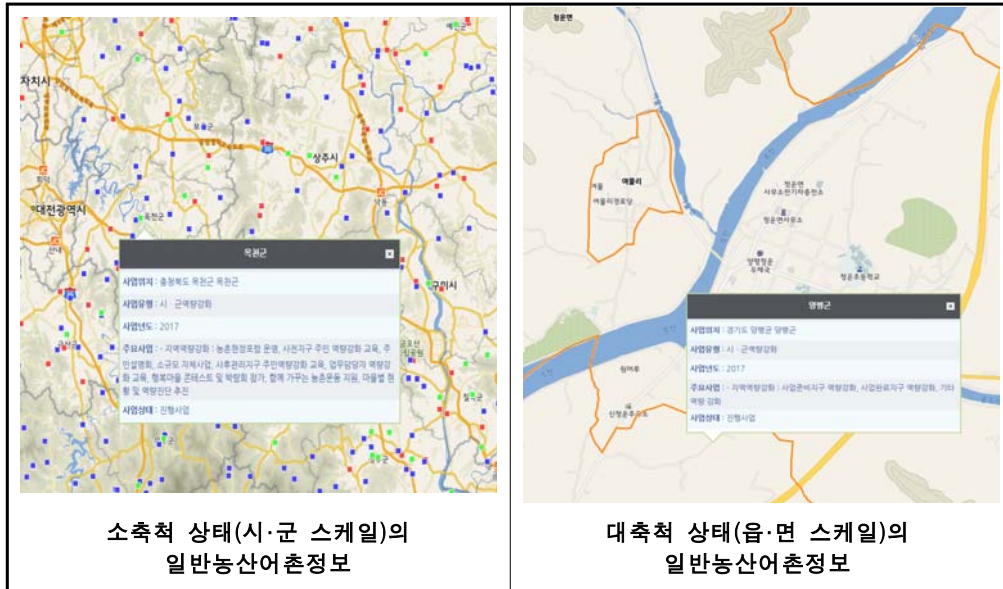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개방·공유 측면에서 RAISE를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표출하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RAISE에서는 일반농산어촌사업 정보를 공간 스케일별(축척에 따라)로 점, 면 등으로 다르게 지도화하여 표현하고 있음.
  - 제공되는 정보는 사업의 위치와 사업명, 세부 사업별 이름만 담고 있어서 RAISE에 단순 접속한 사람들은 농촌지역에 어떤 사

24) 심지어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아직도 몇 년 전(2015~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를 설명하고 있고, 빈집정보 등은 2017.12.07. 이후 업데이트 된 사항이 없음.(검색일 2018.11.15.)



업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는 없는 구조임.

- 공유 측면에서 RAISE는 총 11개의 Open API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료의 갱신 주기나 신뢰성, 충실성으로 볼 때 외부에서 사용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7-7> RAISE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간정보

### ③ 사업의 효율적 관리 측면

- 현재 RAISE는 대국민서비스 측면보다는 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관리를 위한 기능을 구현한 상황임.
- RAISE의 업무지원시스템은 대시보드, 지역개발현황정보(지도검색, 통계), 지역개발사업관리(사업관리) 중복성 검토, 시설물점검(시설물점검 등록, 시설물점검 현황, 시설물점검 통계), 지역개발이행정보관리(이행점검 등록, 이행점검 현황, 이행점검 통계), 농촌마을 현황관리(마을현황 등록, 마을현황 통계), 농촌현장포럼, 중심지커뮤니티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메뉴별 데이터는 주로 게시판 형태의 자료 구조로 되어 있고, 통계는 시스템 내 자료가 집계되어 제공되는 형태임.
- 하지만 핵심 자료들(사업계획서 등)은 대부분 문서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다시

열람해야 하는 구조임.

- 대시보드는 공지사항만이 표출되어 실제 업무 담당자가 한눈에 지역개발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자료의 입력 형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파일 형태로 작성되어 업로드되고 RAISE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그 문서를 통해 입력되거나 해당 사업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중복적인 업무 구조로 되어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조, 입력방식, 데이터 표출 방식 등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RAISE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시·군이나 사업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④ 지자체 지역개발 기능 지원 도모 측면

- 지역개발 기능 지원 도모 부문은 RAISE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계획지원시스템 등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며, 유용한 자료 및 분석 기능이 갖춰져야 함. 하지만 RAISE에서 제공하는 마을 정보는 신뢰성 및 자료의 최신성이 낮고, 분석적인 기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정보 외에도 다른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RAISE에서는 이러한 수준까지 서비스하지 못하는 상황임.
- 공간 정보의 융합·분석 기능 등을 추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사용자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활용성이 높음.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인 RESAS 처럼<sup>25)</sup> RAISE 운영주체 또는 연구 사업으로 농촌 지역개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간정보로 서비스할 것을 제안함. 생성된 지도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쉽게 인식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5) 본 보고서의 3장 일본 사례 참조

- RAISE가 지역개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서 수립 절차를 모듈화해 RAISE에 담아 계획서 작성과 자료의 입력 등이 중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주체 및 시·군 사업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3.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개선 방향

- 첫째, RAISE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 초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제시된 4가지 목적은 시스템 개발 당시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필요에 기반함.
  -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련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통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DB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도 정보의 최신성, 신뢰성, 충실성들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을 통해 자료 취득과 확인이 편리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시되는 기능으로는 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운 구조임.
  - 사업 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게시판 형태로 표출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통계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DB를 통해 필요한 정보 등을 재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지역개발 기능을 확충하여 RAISE가 사업 관리를 넘어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함. 예컨대 예비계획서 수립 기능을 지원한다면, 일반적인 마을이나 지역의 현황 등은 자동적으로 RAISE에서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나 담당 공무원 등이 필요한 계획들만 간단히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임. 이를 통해 예비계획서 준비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의 융합·분석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용자 교육 및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일본의 RESAS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분석적인 자료들이 시스템에서 시각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일본 사례 외에도 프랑스는 국토관측소(Territories Observatory)를 CGET내에 두어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역개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CGET 내 국토관측소(Territories Observatory) 사례: 프랑스

- 국토관측소는 프랑스 전역에 걸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에 관하여 지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조직임
- 2명의 공무원, 2명의 지리학자, 2명의 통계전문가 등 총 6명의 인원이 업무를 담당
- 국토관측소에서 자체 발굴하는 이슈,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이슈, CGET내 각종 위원회, 정치인 등이 요구하는 이슈 등에 대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지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행

자료: 국토관측소 홈페이지(<http://www.observatoire-des-territoires.gouv.fr>)

- 둘째, 향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계획협약제도 도입 등을 통해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RAISE의 원래 설계 목적에 적합하도록 농촌 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 예산이 이양되어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원하는 농촌 지역개발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국가 전체의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RAISE가 발전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강상균. 2004. 『SOC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수행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민간사업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경영학박사 청구논문.
- 강석보.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발전방향 수립』. 제주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8.6.8.일자 보도자료
- 김선희. 2018.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국토정책 Brief. 제648호: 1-8
- 김정연·김은순. 2013. “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일반농산어촌지역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133-152.
- 김영주·은희창·최영완·박현용·이영규·최민화·김현미. 2014. 『농촌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재완·최양부·이용만. 1982. 『2000년대를 향한 강진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나주몽. 2016.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도시정보』 제409호.
- 마사다 히로야. 2014. (김정환 역. 2015).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 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역량과 주민협력에 관한 연구 - 전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5(1): 67-95.
- 송미령·박시현·이규천·김광선·김정섭·권인혜. 2010.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권인혜. 2013a.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행복생활권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성주인·김광선. 2013b.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과제” 제11차 지역정책포럼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정섭·김광선·심재현·최지선.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1/2)』. 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김광선·김정섭·심재현·정도채·임지은. 2017.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심재현·이정해. 2017. 『일본 지방창생 전략과 과소화마을 사례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
- 서진원. 2017. “일본의 지방창생 종합전략 평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동향.
- 심재현·정도채·유은영. 2015. 『농업·농촌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사용실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정도채·유은영·이정해. 2016. 『농업·농촌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및 표준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송미령·성주인·정도채·정문수·민경찬. 2017.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추진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심재현·이정해. 2018. 프랑스 농촌발전 정책 및 농촌성 협정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미발간)
- 원광희. 2016.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개발 전략”. 『농어촌과 환경』 132: 81-93.
- 유병규·김동열. 2011.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성공·실패 사례와 핵심 성공요인(CSF). 『경제주평』 11(39). 현대경제연구원.
- 양주필, 김정욱, 강창업. 2016.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농림축산식품부.
- 이민수. 2014. “EU의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1(3): 271-305.
- 이성우·윤성도. 2008. “농업·농촌 정책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 모형 연구”, 『농촌계획』 14(4): 97-108.
- 이원섭.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 Brief. 제319호.
- 이정환. 2018.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

『국제 지역연구』 27(1): 1-32.

- 임성호·최용준. 2017. 『일본의 지방창생 사례와 경북지역 적용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장철순. 2011. “중앙-지자체 간 계약 통해 개발사업 추진하는 선진국”. 『나라경제』. 05월호. KDI
- 정광석. 2016.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 2016. 1. 15. Vol.2.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진흥재단.
-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2017 농업전망.
- 조임곤·송미령. 2018. “포괄보조금 확대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반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차미숙·김재영·김태환·박지현·남운우. 2009.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Ⅱ)』. 국토연구원.
- 차미숙. 2015.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국토』 (408): 89-96.
-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제555호
- 하혜영·김유정. 2016.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1220: 1-4. 국회입법조사처.
- 홍철 외. 2013.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지역발전위원회.
- KREI. 2017.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부록**



## <부록 1>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지

### 1)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지

농촌 지역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 농촌 발전 현안

1. 귀 시·군에는 지역발전에 대하여 모두가 알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특히 아래 상자의 ‘구체적 목표의 예’와 같이 달성코자 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① 달성코자 하는 구체적이고 공유된 목표가 있음  
⇒ (목표: )
- ②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가 있음
- ③ 특별한 목표 없음

#### <구체적 목표의 예>

- 1): ○○년도까지 연 소득 ○○원 이상 올리는 농가 ○○호 이상 창출
- 2): ○○년도까지 시·군 인구를 ○○명 이상으로 증가
- 3): ○○년도까지 사업체 ○○개 이상 유치 및 일자리 ○○개 이상 창출
- 4): ○○서비스 수준을 ○○년도까지 ○○수준으로 증대



5. 귀 시·군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를 1, 2순위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                      |                           |
|----------------------|---------------------------|
| ① 전략작목 육성 및 소득작목 개발  | ② 지역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개선      |
| ③ 농특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육성 | ④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
| ⑤ 친환경농업 육성           | ⑥ 농업 후계인력 육성              |
| ⑦ 마을, 중심지 등 농촌 공간 정비 | ⑧ 농촌 주민 보건·복지·교육·문화 여건 개선 |
| ⑨ 귀농·귀촌 활성화          | ⑩ 농촌 환경·경관 보전·활용          |
| ⑪ 주민 역량 강화           | ⑫ 지역 농정 거버넌스 구축           |
| ⑬ 기타 (      )        | ⑭ 잘 모르겠음                  |

6. 귀 시·군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 농촌 발전과 관련해서 갖는 역할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가.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계획들보다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크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나. 지역농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 위주이고,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담지 못한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다. 실질적 내용을 담기보다는, 추진하려는 농촌개발사업의 예산 확보에 필요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라. 시·군의 중장기 농촌 발전 비전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담아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7. 귀 시·군에서 각각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답해주십시오. (      )

- ① 농촌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중앙정부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단체인장, 지역 유지 등의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④ 농촌발전 관련 위원회나 지역협의체, 대의기구의 심의로 결정한다  
 ⑤ 현장포럼, 주민 수요 등을 기초로 사업 추진 여부 결정  
 ⑥ 기타 (      )

8. 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

- ① 단체장    ② 지방의회
- ③ 담당 공무원                                      ④ 지역단체, NGO
- ⑤ 주민 또는 주민조직                              ⑥ 기타 ( )

9. 귀 시·군에는 현재 농촌 지역개발 담당 총괄조직(또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

- ① 있다 (조직 명칭:                                      과                                      팀/계)
- ② 없다

10. 귀 시·군에는 행정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이 행정조직과 별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 )

- ① 있다    ② 없다

☞ 중간지원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 조직 명칭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11. 귀 시·군에서는 현재 농촌 지역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 중입니까?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계약직 전문가 인원 ( )명, 담당 분야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

12. 지난 2010년 이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한 이래 귀 시·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1, 2순위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담당 공무원의 사업 기획 역량이 높아졌다
- ② 지역개발을 위한 시·군의 가용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 ③ 관련 사업들의 연계 추진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④ 주민들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 ⑤ 리더, 민간 조직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그룹이 늘어났다
- ⑥ 농촌의 각종 공공시설,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확충되었다
- ⑦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났다
- ⑧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 ⑨ 기타 ( )

13. 2018년 정부는 아래 글상자 내용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방향을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편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 ① 기존의 사업 칸막이를 없애는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기대된다
- ② 이전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 사업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 ③ 중앙정부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어긋난다
- ④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같이 이전에 소홀했던 사업 영역을 새로 포함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⑤ 기타 ( )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 개편 내용**

- 중심지 사업을 통합, 선도, 일반지구 구분을 폐지하고, 중심지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강화
- 면 소재지 이하에 대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 마을 단위 사업은 사업 유형 구분을 통합하여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단위 종합개발 폐지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창의적 내용의 농촌다움 복원 사업을 신규 추진
- 농촌신활력 플러스를 2018년부터 신규 도입,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기업유치 등 성장동력 창출

14. 귀하께서는 농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시·군청 소재지 등 수위 중심지 자체를 더욱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 ② 수위 중심지와 배후 농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③ 2~4개 면이 포함된 소생활권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 ④ 거점 읍·면만이 아닌 모든 읍·면 소재지에서 기능 재정비 사업 추진
- ⑤ 중심지 대상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다른 신규 사업 발굴
- ⑥ 기타 ( )

15. 귀하께서는 농촌 마을개발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사업 의지, 역량이 있는 마을에 집중하여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② 최대한 많은 곳을 대상으로 마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③ 개별 마을 대상 사업은 지양하고 복수 마을들을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 ④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개발사업은 제한
- ⑤ 기타 ( )

16. 보기에 제시된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들(2019년 기준) 중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17.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 영역 이외에 정부에서 새롭게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있다면 자유롭게 답해주시오.

▣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촌 지역개발 전망

18. 현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포괄보조금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지방에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재정 분권 강화 기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시오. ( )

- ① 시대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바로 시행해야 한다
- ② 필요한 방향이지만 지방 여건, 준비 수준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다
- ③ 지방 재정 확대는 필요하나 국가보조금 사업의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④ 현 수준 이상의 지방 재정 확대는 불필요하다
- ⑤ 기타 ( )

19.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 분권 강화에 따라 앞으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시오.

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발전전략 추진이 용이해진다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나. 필수적 사업보다 단체장 등의 선심성 사업이 확대된다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 원격마을, 오지면 등 소외지역을 배려한 투자가 위축된다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라. 주민 필요나 역량 수준에 기초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사업이 늘어난다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서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21. 지방분권이 확대되더라도 사업 가이드라인 제공, 모니터링이나 평가 수행 등과 같은 중앙정부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 현행 포괄보조금 사업 예산의 지방 이관 시 이를 관리할 행정 단위로는 어디가 바람직하겠습니까? ( )

- ① 시·도
- ② 시·군
- ③ 현행 시·도 및 시·군 포괄보조금 예산 구분을 따름

23.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 사업의 기획과 계획 수립, 실행,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이 지방 책임 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분권에 대비한 지역의 준비 수준이나 지역개발 역량이 현재 어떠한지 다음 표의 각 주체별로 점수(7점 척도)를 평가해주시시오.

| 구 분                    | ←-----> |   |    |   |   |       |   |
|------------------------|---------|---|----|---|---|-------|---|
|                        | 매우 낮음   |   | 보통 |   |   | 매우 높음 |   |
|                        | 1       | 2 | 3  | 4 | 5 | 6     | 7 |
| 시·도 행정조직(단체장, 공무원, 의원) |         |   |    |   |   |       |   |
| 시·군 행정조직(단체장, 공무원, 의원) |         |   |    |   |   |       |   |
| 농촌 주민 및 리더             |         |   |    |   |   |       |   |
|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활동가 그룹     |         |   |    |   |   |       |   |
| 컨설팅회사, 지역대학 등 지원기구     |         |   |    |   |   |       |   |

24. 많은 지역에서 인구 유출, 고령화가 오랜 세월 지속된 결과 지방 소멸, 농촌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공동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촌 공간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에 대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에 투자를 집중
- ② 농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배후 마을보다 중심지나 거점 마을을 육성하는 데 초점
- ③ 배후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 ④ 지역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응
- ⑤ 기타 ( )

▣ 신활력 플러스 및 계획협약 추진 요구

25. 정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했던 신활력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킨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여 20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현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이름은 들어보았다
- ③ 잘 모른다

26. 귀 시·군에서는 올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도 단위 공모 포함)에 참여하였습니까? ( )

- ① 참여하였다
- ② 준비를 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 ③ 준비도 않고 참여도 하지 않았다
- ④ 잘 모르겠다

☞ (위 질문의 ②, ③번 응답자 해당)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① 전국적으로 10개소만 선정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 ② 기대는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서 공모에 응할 준비가 부족했다
- ③ 도별 사업 공모 과정에서부터 응모 기회가 제한되었다
- ④ 정부의 사업 방향을 정확히 알지 못해 준비를 하기 어려웠다
- ⑤ 사업 자체에 대한 우리 지역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 ⑥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 ⑦ 기타 ( )

27. 귀하께서는 2018년 10개 시·군에서 시작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올해 선정된 곳 이외에는 추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 없다
- ②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올해 수준의 신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③ 낙후도가 높은 시·군(예: 하위 30%)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 ④ 일반농산어촌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
- ⑤ 기타 ( )

28. 정부에서 앞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경우 귀 시·군에서는 이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높습니까? ( )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29.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음 내용으로 농촌계획협약을 2019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참고] 농촌계획협약 주요 추진 방향**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관련 중점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5년 주기 협약 체결
- 농촌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아젠다별 핵심사업(중심지 활성화, 신활력 플러스 등)과 연계사업 지원
- 기존 지역개발사업 외 농림사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재정사업 외에 세제 및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정책 수단까지 포함하여 협약 체결
- 협약 이행 실적 및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농촌계획협약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이름은 들어보았다                      ③ 잘 모른다

나. 농촌계획협약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면 귀 시·군에서는 이에 참여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다. (위 문항의 ④, ⑤번 응답자 해당) 농촌계획협약에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아직까지 농촌계획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
- ② 농식품부 사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지 않아서
- ③ 계획 수립, 실적 점검, 성과 평가 등의 절차 이행이 번거로워서
- ④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용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 ⑤ 기타 ( )

30. 끝으로 농촌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응답자 인적 사항

|   |
|---|
| _____시·도 _____시·군 _____과 (담당 업무_____)     |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 전체 업무경력: _____년 중 현재 담당 업무경력: _____년      |
|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

## 2) 시·도 공무원 대상 설문지

농촌 지역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지자체(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 농촌 발전 현안

1. 귀 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부문에 가장 역점을 두는지 1, 2순위로 답 해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                      |                                     |
|----------------------|-------------------------------------|
| ① 농어업기반 조성 부문        | ② 보건·복지 부문                          |
| ③ 교육 부문              | ④ 수자원 및 교통 인프라 부문                   |
| ⑤ 기초생활 인프라 부         | ⑥ 지역산업 및 농촌 경제 다각화 부문(농산물 가공 유통 포함) |
| ⑦ 문화·여가(문화·관광·체육) 부문 | ⑧ 환경·경관 부문                          |
| ⑨ 지역발전 역량강화 부문       | ⑩ 기타 부문(직접 기입: )                    |



5. 다음은 시·도 및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이 농촌 발전과 관련하여 갖는 역할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가. 지자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계획들보다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크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나. 지역농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 위주이고,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담지 못한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다. 실질적 내용을 담기보다는, 추진하려는 농촌개발사업의 예산 확보에 필요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라. 지자체의 중장기 농촌 발전 비전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담아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6. 귀하께서는 현재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지역에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② 중앙정부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③ 단체장, 지역 유지 등의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 ④ 농촌발전 관련 위원회나 지역협의체, 대의기구의 심의로 결정한다
- ⑤ 현장포럼, 주민 수요 등을 기초로 사업 추진에 관해 결정한다
- ⑥ 기타 ( )

7. 귀 도에서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

- ① 단체장    ② 지방의회
- ③ 담당 공무원                                      ④ 지역단체, NGO
- ⑤ 주민 또는 주민조직                              ⑥ 기타 ( )

8. 귀 도에서는 현재 농촌 지역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 중입니까?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계약직 전문가 인원 ( )명, 담당 분야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

9. 지난 2010년 이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1, 2순위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담당 공무원의 사업 기획 역량이 높아졌다
- ② 지역개발을 위한 시·군의 가용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 ③ 관련 사업들의 연계 추진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④ 주민들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 ⑤ 리더, 민간 조직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그룹이 늘어났다
- ⑥ 농촌의 각종 공공시설,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확충되었다
- ⑦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났다
- ⑧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 ⑨ 기타 (      )

10. 2018년 정부는 아래 글상자 내용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방향을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편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 ① 기존의 사업 칸막이를 없애는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기대된다
- ② 이전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 사업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 ③ 중앙정부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어긋난다
- ④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같이 이전에 소홀했던 사업 영역을 새로 포함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⑤ 기타 (      )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 개편 내용**

- 중심지 사업을 통합, 선도, 일반지구 구분을 폐지하고, 중심지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강화
- 면 소재지 이하에 대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 마을 단위 사업은 사업 유형 구분을 통합하여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단위 종합개발 폐지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창의적 내용의 농촌다움 복원 사업을 신규 추진
- 농촌신활력 플러스를 2018년부터 신규 도입,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기업유치 등 성장동력 창출







18. 지방분권이 확대되더라도 사업 가이드라인 제공, 모니터링이나 평가 수행 등과 같은 중앙정부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 현행 포괄보조금 사업 예산의 지방 이관 시 이를 관리할 행정 단위로는 어디가 바람직하겠습니까? ( )

- ① 시·도
- ② 시·군
- ③ 현행 시·도 및 시·군 포괄보조금 예산 구분을 따름

20.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 사업의 기획과 계획 수립, 실행,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이 지방 책임 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분권에 대비한 지역의 준비 수준이나 지역개발 역량이 현재 어떠한지 다음 표의 각 주체별로 점수(7점 척도)를 평가해주시시오.

| 구 분                    |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시·도 행정조직(단체장, 공무원, 의원) |   |   |   |   |   |   |
| 시·군 행정조직(단체장, 공무원, 의원) |                        |   |   |   |   |   |   |
| 농촌 주민 및 리더             |                        |   |   |   |   |   |   |
|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활동가 그룹     |                        |   |   |   |   |   |   |
| 컨설팅회사, 지역대학 등 지원기구     |                        |   |   |   |   |   |   |

21. 많은 지역에서 인구 유출, 고령화가 오랜 세월 지속된 결과 지방 소멸, 농촌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공동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촌 공간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에 대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에 투자를 집중
- ② 농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배후 마을보다 중심지나 거점 마을을 육성하는 데 초점
- ③ 배후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 ④ 지역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응
- ⑤ 기타 ( )

■ 농촌 신활력 플러스 관련 사항

22. 정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했던 신활력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킨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여 20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현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이름은 들어보았다  
③ 잘 모른다

23. 귀하께서는 2018년 10개 시·군에서 시작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올해 선정된 곳 이외에는 추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 없다  
②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올해 수준의 신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③ 낙후도가 높은 시·군(예: 하위 30%)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④ 일반농산어촌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  
⑤ 기타 ( )

24. 끝으로 농촌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인적 사항

|   |
|---|
| _____시·도 _____과 (담당 업무 _____)                         |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 전체 업무경력: _____년 중 현재 담당 업무경력: _____년                  |
|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

### 3) 전문가 대상 설문지

농촌 지역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 농촌 발전 현안,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 현황

1. 귀하께서는 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농가경제 다각화
- ② 농업 후계 인력 확보
-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또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
- ④ 인구 감소 대응 (인구 유지, 귀농·귀촌인 유입·정착 지원)
- ⑤ 특화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 ⑥ 주민들의 복지·문화·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 ⑦ 기타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4. 다음은 2010년 이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한 이래 농촌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가. 담당 공무원의 사업 기획 역량이 높아졌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나. 지역개발을 위한 시·군의 가용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 관련 사업들의 연계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라. 주민들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마. 리더, 민간 조직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그룹이 늘어났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바. 농촌의 각종 공공시설,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확충되었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사.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났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향후 개선 방향

5. 2018년 정부는 아래 글상자 내용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방향을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편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 ① 기존의 사업 칸막이를 없애는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기대된다
- ② 이전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 사업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 ③ 중앙정부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어긋난다
- ④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같이 이전에 소홀했던 사업 영역을 새로 포함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⑤ 기타 ( )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 개편 내용**

- 중심지 사업을 통합, 선도, 일반지구 구분을 폐지하고, 중심지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강화
- 면 소재지 이하에 대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 마을 단위 사업은 사업 유형 구분을 통합하여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단위 종합개발 폐지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창의적 내용의 농촌다움 복원 사업을 신규 추진
- 농촌신활력 플러스를 2018년부터 신규 도입,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기업유치 등 성장동력 창출

6. 귀하께서는 농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시·군청 소재지 등 수위 중심지 자체를 더욱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 ② 수위 중심지와 배후 농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③ 2~4개 면이 포함된 소생활권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 ④ 거점 읍·면만이 아닌 모든 읍·면 소재지에서 기능 재정비 사업 추진
- ⑤ 중심지 대상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다른 신규 사업 발굴
- ⑥ 기타 ( )



7. 귀하께서는 농촌 마을개발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사업 의지, 역량이 있는 마을에 집중하여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② 최대한 많은 곳을 대상으로 마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③ 개별 마을 대상 사업은 지양하고 복수 마을들을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 ④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개발사업은 제한
- ⑤ 기타 ( )

8. 보기에 제시된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들(2019년 기준) 중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9.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 영역 이외에 정부에서 새롭게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있으면 자유롭게 답해주시오.

■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촌 지역개발 전망

10. 현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포괄보조금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지방에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재정 분권 강화 기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시오. ( )

- ① 시대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바로 시행해야 한다
- ② 필요한 방향이지만 지방 여건, 준비 수준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다
- ③ 지방 재정 확대는 필요하나 국가보조금 사업의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④ 현 수준 이상의 지방 재정 확대는 불필요하다
- ⑤ 기타 ( )

1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 분권 강화에 따라 앞으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시시오.

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발전전략 추진이 용이해진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나. 필수적 사업보다 단체장 등의 선심성 사업이 확대된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 원격마을, 오지면 등 소외지역을 배려한 투자가 위축된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라. 주민 필요나 역량 수준에 기초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사업이 늘어난다 (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서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13. 지방분권이 확대되더라도 사업 가이드라인 제공, 모니터링이나 평가 수행 등과 같은 중앙정부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② 창조적 마을 만들기
- ③ 시·군 역량 강화                      ④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⑤ 농촌다움 복원                      ⑥ 농촌 신활력 플러스
- ⑦ 없다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 현행 포괄보조금 사업 예산의 지방 이관 시 이를 관리할 행정 단위로는 어디가 바람직하겠습니까? ( )

- ① 시·도
- ② 시·군
- ③ 현행 시·도 및 시·군 포괄보조금 예산 구분을 따름

15.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 사업의 기획과 계획 수립, 실행,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이 지방 책임 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분권에 대비한 지역의 준비 수준이나 지역개발 역량이 현재 어떠한지 다음 표의 각 주체별로 점수(7점 척도)를 평가해주시시오.

| 구 분                    | ←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시·도 행정조직(단체장, 공무원, 의원) |                                      |   |   |   |   |   |   |
| 시·군 행정조직(단체장, 공무원, 의원) |                                      |   |   |   |   |   |   |
| 농촌 주민 및 리더             |                                      |   |   |   |   |   |   |
|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활동가 그룹     |                                      |   |   |   |   |   |   |
| 컨설팅회사, 지역대학 등 지원기구     |                                      |   |   |   |   |   |   |

16. 지방 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농촌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새로운 역할 설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 귀하의 의견을 답해 주십시오. ( )

- ① 농촌계획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정부가 제시한 농촌정책 방향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
- ② 예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정책 방향을 실현하도록 농촌계획제도 정비
- ③ 지방 주도의 분권적 농촌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농식품부 내부 조직 정비 및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 ④ 농식품부 자체보다 범정부 차원의 지자체 농촌정책 지원체계 정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등)
- ⑤ 지자체 자율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은 가급적 축소 또는 최소화
- ⑥ 기타 ( )

17. 많은 지역에서 인구 유출, 고령화가 오랜 세월 지속된 결과 지방 소멸, 농촌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공동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촌 공간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에 대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에 투자를 집중
- ② 농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배후 마을보다 중심지나 거점 마을을 육성하는 데 초점
- ③ 배후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 ④ 지역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응
- ⑤ 기타 ( )

■ 신활력 플러스 및 계획협약 추진 요구

18. 귀하께서는 2018년 10개 시·군에서 시작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올해 선정된 곳 이외에는 추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 없다
- ②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올해 수준의 신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③ 낙후도가 높은 시·군(예: 하위 30%)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 ④ 일반농산어촌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
- ⑤ 기타 ( )

19.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음 내용으로 농촌계획협약을 2019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농촌계획협약을 제도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참고] 농촌계획협약 주요 추진 방향**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관련 중점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5년 주기 협약 체결
- 농촌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아젠다별 핵심사업(중심지 활성화, 신활력 플러스 등)과 연계사업 지원
- 기존 지역개발사업 외 농림사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재정사업 외에 세제 및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정책 수단까지 포함하여 협약 체결
- 협약 이행 실적 및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 농촌계획협약 대상 시·군 선정 시 고려할 기준 ( )

- ① 협약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충실한 시·군을 엄밀히 선별한다
- ② 엄밀한 선별보다 가급적 많은 시·군의 협약 참여에 우선권을 둔다
- ③ 낙후도 높은 시·군을 우선적인 협약 대상으로 한다

나. 지방에 제공할 농촌계획협약 대상 사업 설정 원칙 ( )

- ① 높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구성한다
- ② 패키지화해서 지원할 농림사업들을 최대한 다수 발굴한다
- ③ 연계 지원할 다양한 부문의 타 부처 사업을 중점 발굴한다

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내용 결정 시 우선순위 ( )

- ① 주요 아젠다에 대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②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을 담은 데 중점을 둔다

20. 끝으로 농촌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응답자 인적 사항**

|  |            |
|--|------------|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연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            |
| 소속: _____                                  |            |
| 전문 분야: _____                               |            |
| 성명: _____                                  | 연락처: _____ |

##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

| '10년            |                    | '11년~'12년       |                    | '13년            |                    | '14년            |                    | '15년~'16년       |                    | '17년            |                    | '18년            |                    |
|-----------------|--------------------|-----------------|--------------------|-----------------|--------------------|-----------------|--------------------|-----------------|--------------------|-----------------|--------------------|-----------------|--------------------|
| 사업유형            | 세분류                | 사업유형            | 세분류                | 사업유형            | 세분류                | 사업유형            | 세분류                | 사업유형            | 세분류                | 사업유형            | 세분류                | 사업유형            | 세분류                |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읍·면·소재지<br>종합정비 | 읍소재지정비             |
|                 | 면소재지정비             |                 | 면소재지정비             |                 | 면소재지정비             |                 | 면소재지정비             |                 | 면소재지정비             |                 | 면소재지정비             |                 | 면소재지정비             |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권역·단위·종합정비         |
|                 | 신규마을 조성·개발         |                 | 신규마을 조성            |                 | 신규마을 조성            |                 | 신규마을 조성            |                 | 신규마을 조성            |                 | 신규마을 조성            |                 | 신규마을 조성            |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개발촉진지구·기초생활인프라정비   |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시·군·역량             |
|                 | 역량강화               |                 | 역량강화               |                 | 역량강화               |                 | 역량강화               |                 | 역량강화               |                 | 역량강화               |                 | 역량강화               |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농촌신활력플러스           |

\* 현장포럼, 재능나눔 사업은 농특회계 사업에서 2018년부터 지역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포함되어 추진.  
 '18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가.

## <부록 3> 시·도별 및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 현황

### 1) 시·도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과) 현황

| 시·도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어촌<br>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마을        | 시·군<br>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세종시      | 예산<br>담당관실   | 지역<br>공동체과           | 지역<br>공동체과  | 청춘<br>조치원과  | 지역<br>공동체과  | 지역<br>공동체과  | 지역<br>공동체과  |
| 경기도      | 정책<br>기획관실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도시<br>재생과   | 농업<br>정책과   | 친환경<br>농업과  |
| 강원도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건축과         | 농정과         | 농업<br>기반과   |
| 충청<br>북도 | 농업<br>정책과    | 농정국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충청<br>남도 | 농촌마을<br>지원과  | 농촌마을<br>지원과          | 농촌마을<br>지원과 | 농촌마을<br>지원과 | 농촌마을<br>지원과 | 농촌마을<br>지원과 | 농촌마을<br>지원과 |
| 전라<br>북도 | 농촌<br>정책과    | 농촌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 전라<br>남도 | 예산<br>담당관실   | 농업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경상<br>북도 | 농업<br>정책과    | 농촌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 경상<br>남도 | 농업<br>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제주도      | 예산<br>담당관실   | 균형발전과                | 균형<br>발전과   | 균형<br>발전과   | 균형<br>발전과   | 균형<br>발전과   | 균형<br>발전과   |

## 2)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과) 현황

| 시·군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br>어촌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br>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경기도] |              |                      |            |            |           |           |             |
| 용인시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남양주시  | 유기<br>농업과    | 유기<br>농업과            | 유기<br>농업과  | 도시<br>재정비과 | 유기<br>농업과 | 유기<br>농업과 | 유기<br>농업과   |
| 화성시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평택시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광주시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건설과         |
| 이천시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건축과       | 농정과       | 농정과         |
| 안성시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도시<br>개발과  | 산림<br>녹지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여주시   | 농정과          | 농정과                  | 전략<br>사업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건설과         |
| 양평군   | 친환경<br>농업과   | 도시과                  | 건설과        | 관광<br>진흥과  | 건설과       | 도시과       | 건설과         |
| 가평군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강원도] |              |                      |            |            |           |           |             |
| 원주시   | 기획<br>예산과    | 기획<br>예산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기획<br>예산과 | 농정과         |
| 강릉시   | 기획<br>예산과    | 기획<br>예산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 삼척시   | 기획<br>감사실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건설과         |
| 홍천군   | 기획<br>감사실    | 기획<br>감사실            | 전원<br>도시과  | 기획<br>감사실  | 농업<br>정책과 | 기획<br>감사실 | 농업<br>정책과   |
| 횡성군   | 기획<br>감사실    | 기획<br>감사실            | 도시<br>행정과  | 농업<br>지원과  | 안전<br>건설과 | 기획<br>감사실 | 안전<br>건설과   |
| 영월군   | 기획<br>혁신실    | 농업<br>축산과            | 도시<br>디자인과 | 농업<br>축산과  | 농업<br>축산과 | 농업<br>축산과 | 농업<br>축산과   |
| 평창군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도시<br>주택과  | 농축산과       | 안전<br>건설과 | 농축산과      | 안전<br>건설과   |
| 정선군   | 기획<br>감사실    | 기획<br>감사실            | 도시<br>건축과  | 농업<br>축산과  | -         | 농업<br>축산과 | 농업<br>축산과   |



(계속)

| 시·군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br>어촌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br>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양양군    | 기획<br>감사실    | 기획<br>감사실            | 전략사업과<br>도시경제과<br>산림복지과 | 농업<br>정책과   | 전략<br>사업과   | 기획<br>감사실   | -           |
| [충청북도] |              |                      |                         |             |             |             |             |
| 청주시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충주시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 제천시    | 기획예산<br>담당관실 | 안전<br>건설국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보은군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 옥천군    | 친환경<br>농축산과  | 친환경<br>농축산과          | 친환경<br>농축산과             | 친환경<br>농축산과 | 친환경<br>농축산과 | 친환경<br>농축산과 | 친환경<br>농축산과 |
| 영동군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 증평군    | 미래<br>전략과    | 안전<br>건설과            | 도시<br>교통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미래<br>전략과   | 안전<br>건설과   |
| 진천군    | 친환경<br>농정과   | 친환경<br>농정과           | 친환경<br>농정과              | 친환경<br>농정과  | 친환경<br>농정과  | 친환경농<br>정과  | 친환경<br>농정과  |
| 괴산군    | 농업<br>정책실    | 농업<br>정책실            | 농업<br>정책실               | 농업<br>정책실   | 농업<br>정책실   | 농업<br>정책실   | 농업<br>정책실   |
| 음성군    | 미래전략<br>담당관실 | 도시과                  | 도시과                     | 도시과         | 도시과         | 도시과         | 도시과         |
| 단양군    | 농업<br>축산과    | 균형<br>개발과            | 균형<br>개발과               | 균형<br>개발과   | 균형<br>개발과   | 균형<br>개발과   | 균형<br>개발과   |
| [충청남도] |              |                      |                         |             |             |             |             |
| 천안시    | 지역<br>경제과    | 지역<br>경제과            | 건설<br>도로과               | 지역<br>경제과   | 건설<br>도로과   | 지역<br>경제과   | 건설<br>도로과   |
| 공주시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건설과         |
| 보령시    | 기획<br>감사실    | 미래<br>사업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아산시    | 정책기획<br>담당관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사회적경<br>제과  | 건설과         |
| 서산시    | 기획감사<br>담당관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논산시    | 전략기획실        | 전략기획실                | 희망마을<br>건설과             | 희망마을<br>건설과 | 희망마을<br>건설과 | 사회적<br>경제과  | 희망마을<br>건설과 |

(계속)

| 시·군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br>어촌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br>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계룡시    | 기획<br>감사실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 당진시    | 기획예산<br>담당관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금산군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부여군    | 기획감사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서천군    | 정책<br>기획실    | 도시<br>건축과            | 도시<br>건축과      | 도시<br>건축과               | 도시<br>건축과    | 도시<br>건축과    | 도시<br>건축과   |
| 청양군    | 기획<br>감사실    | 기획<br>감사실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 홍성군    | 기획감사실        | 건설교통과<br>도시건축과       | 건설교통과<br>도시건축과 | 건설교통과<br>도시건축과<br>주민복지과 | 건설<br>교통과    | 농수산과         | 농수산과        |
| 예산군    | 기획실          | 기획실                  | 도시<br>재생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교<br>통과   |
| [전라북도] |              |                      |                |                         |              |              |             |
| 군산시    | 기획예산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익산시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농촌<br>활력과    | 미래<br>농업과   |
| 정읍시    | 기획예산과        | 지역공동체<br>육성과         | 지역공동체<br>육성과   | 지역공동체<br>육성과            | 건설과          | 지역공동체<br>육성과 | 건설과         |
| 남원시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 김제시    | 기획<br>감사실    | 건설과                  | 도시<br>재생과      | 건설과                     | 건설과          | 농업<br>정책과    | 건설과         |
| 완주군    | 농업농촌<br>식품과  | 농업농촌<br>식품과          | 도시개발과          | 농업농촌<br>식품과             | 농업농촌<br>식품과  | 농업농촌<br>식품과  | 재난<br>안전과   |
| 진안군    | 기획실          | 친환경<br>농업과           | 건설<br>교통과      | 전략<br>산업과               | 건설<br>교통과    | 전략<br>산업과    | 건설<br>교통과   |
| 무주군    | 농업소득과        | 농업소득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마을만들기<br>사업소 | 마을만들기<br>사업소 | 건설<br>교통과   |
| 장수군    | 건설경제과        | 건설경제과                | 건설<br>경제과      | 건설<br>경제과               | 재무과          | 건설<br>경제과    | 건설<br>경제과   |
| 임실군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건설과                     | 건설과          | 농업<br>정책과    | 건설과         |
| 순창군    | 기획실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 고창군    | 농업진흥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       |
| 부안군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농업<br>경영과    | 건설<br>교통과   |

(계속)

| 시·군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br>어촌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br>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전라남도] |                    |                      |            |                |                    |                    |             |
| 순천시    | 전략기획과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 나주시    | 기획<br>예산실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건설과         |
| 광양시    | 기획예산<br>담당관실       | 건설과                  | 도시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담양군    | 지속가능<br>경영기획실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투자유치<br>단장         | 지역<br>경제과          | 도시<br>디자인과  |
| 곡성군    | 기획실                | 지역<br>활성화과           | 지역<br>활성화과 | 지역<br>활성화과     | 지역<br>활성화과         | 지역<br>활성화과         | 안전<br>건설과   |
| 구례군    | 기획<br>감사실          | 도시<br>경제과            | 도시<br>경제과  | 도시<br>경제과      | 도시<br>경제과          | 도시<br>경제과          | 안전<br>건설과   |
| 보성군    | 기획<br>예산실          | 도시<br>경관과            | 도시<br>경관과  | 도시<br>경관과      | 도시<br>경관과          | 도시<br>경관과          | 안전<br>건설과   |
| 화순군    | 기획<br>감사실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 장흥군    | 로하스타운<br>조성<br>사업소 | 로하스타운<br>조성<br>사업소   | 경제<br>정책과  | 경제<br>정책과      | 로하스타운<br>조성<br>사업소 | 로하스<br>타운조성<br>사업소 | 안전<br>건설과   |
| 강진군    | 기획<br>홍보실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 해남군    | 기획<br>홍보실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안전건설과<br>해양수산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안전<br>건설과   |
| 영암군    | 기획<br>감사실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 무안군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건설<br>교통과   |
| 함평군    | 기획<br>감사실          | 지역<br>경제과            | 지역<br>경제과  | 지역<br>경제과      | 지역<br>경제과          | 지역<br>경제과          | 안전<br>건설과   |
| 영광군    | 기획<br>예산실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 장성군    | 농업<br>기술센터         | 경관<br>도시과            | 경관<br>도시과  | 경관<br>도시과      | 경관<br>도시과          | 경관<br>도시과          | 경관<br>도시과   |
| [경상북도] |                    |                      |            |                |                    |                    |             |
| 포항시    | 농업<br>기술센터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경주시    | 미래전략<br>추진단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계속)

| 시·군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br>어촌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br>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김천시 | 기획<br>조정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안동시 | 기획<br>예산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구미시 | 정책<br>기획실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농정과                                |
| 영주시 | 농업<br>기술센터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영천시 | 기획감사<br>담당관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상주시 | 농업<br>정책과    | 개발<br>지원과            | 개발<br>지원과     | 개발<br>지원과     | 개발<br>지원과     | 개발<br>지원과   | 개발<br>지원과                          |
| 문경시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 경산시 | 기획예산<br>담당관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군위군 | 미래전략<br>추진단  | 미래전략<br>추진단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미래전략<br>추진단 | 안전<br>건설과                          |
| 의성군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안전과                                |
| 청송군 | 미래<br>전략과    | 안전재난<br>건설과          | 안전재난<br>건설과   | 안전재난<br>건설과   | 안전재난<br>건설과   | 안전재난<br>건설과 | 안전재난<br>건설과                        |
| 영양군 | 기획<br>감사실    | 미래전략<br>사업추진단        | 미래전략<br>사업추진단 | 미래전략<br>사업추진단 | 미래전략<br>사업추진단 | 새마을<br>경제과  | 새마을<br>경제과                         |
| 영덕군 | 기획<br>감사실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br>안전재난<br>건설과<br>상하수도<br>사업소 |
| 청도군 | 기획실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 고령군 | 기획<br>감사실    | 도시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성주군 | 기획<br>감사실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 칠곡군 | 미래<br>전략과    | 미래<br>전략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미래<br>전략과   | 건설과                                |
| 예천군 | 기획<br>감사실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계속)

| 시·군    | 포괄보조<br>사업총괄 | 일반농산<br>어촌개발<br>사업총괄 | 농촌<br>중심지  | 창조적<br>마을    | 신규<br>마을   | 시·군역량       | 기초생활<br>인프라            |
|--------|--------------|----------------------|------------|--------------|------------|-------------|------------------------|
| 봉화군    | 기획<br>감사실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농촌<br>개발과              |
| 울진군    | 기획실          | 기획실                  | 도시<br>새마을과 | 친환경<br>농정과   | 친환경<br>농정과 | 기획실         | 도시<br>새마을과             |
| [경상남도] |              |                      |            |              |            |             |                        |
| 창원시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농업<br>정책과              |
| 진주시    | 기획<br>예산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도시<br>개발과   | 건설과                    |
| 사천시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지역<br>개발과   | 건설<br>수도과              |
| 김해시    | 기획예산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밀양시    | 기획감사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양산시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의령군    | 기획<br>감사실    | 건설<br>도시과            | 건설<br>도시과  | 기획<br>감사실    | 건설<br>도시과  | 기획<br>감사실   | 건설<br>도시과              |
| 함안군    | 미래전략<br>기획단  | 미래전략<br>기획단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미래전략<br>기획단 | 건설과                    |
| 창녕군    | 기획<br>감사실    | 기획<br>감사실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 고성군    | 미래<br>전략실    | 미래<br>전략실            | 안전<br>건설과  | 미래<br>전략실    | 안전<br>건설과  | 미래<br>전략실   | 안전<br>건설과              |
| 하동군    | 기획예산<br>담당관실 | 기획예산<br>담당관실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건설<br>교통과  | 미래<br>전략과   | 건설<br>교통과              |
| 산청군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                | 경제도시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                      |
| 함양군    | 기획<br>조정실    | 기획<br>조정실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안전<br>건설과   | 산삼향노화<br>엑스포과<br>산림복지과 |
| 거창군    | 기획<br>감사실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농촌<br>진흥과   | 건설과                    |
| 합천군    | 기획<br>감사실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br>농촌활력과 | 건설과        | 기획<br>감사실   | 건설과                    |
| [제주도]  |              |                      |            |              |            |             |                        |
| 제주시    | 기획<br>예산과    | 도 분청 관리              | 도시<br>재생과  | 마을<br>활력과    | 마을<br>활력과  | 마을<br>활력과   | 건설과                    |
| 서귀포시   | 기획<br>예산과    | 도 분청 관리              | 도시과        | 마을<br>활력과    | 마을<br>활력과  | 마을<br>활력과   | 건설과                    |

## 참 여 연 구 원

| 목 차                                      | 소 속       | 성 명 |
|--|-----------|-----|
| 제1장 서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 제2장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 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일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형주 |
| 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프랑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헌 |
|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요구와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FGI 주요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
| 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 모델의 시범 적용을 위한 추진 특성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헌 |
| 제7장 발전모델 추진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발 행 처

|   |   |
|---|---|
| 연구과제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   |
| 발 행 일   | 2018. 11  |
| 발 행 인   | 이 용 직   |
| 발 행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br>전 화 031 - 400 - 1700<br>FAX 031 - 409 - 6055 |
|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br>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   |